

2012년 업무계획

2012년 업무계획

=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=

2011. 12. 16.

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농림수산식품부

❏ 목 차 ❏

I. 이명박 정부 농정평가 및 현 좌표 진단	1
II. 2012년 여건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	11
III.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	17
1. 체질개선·미래준비	19
(1) 농수산물 생산 시스템 선진화	19
(2) R&D 및 성장동력 확충 지원	23
(3) 수산업 체질개선	30
(4)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 확대	35
2. 활력창출·생활안정	43
(1)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	43
(2) 인력 육성·유입·지원 체계화	48
(3) 농어촌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	54
(4) 투자 활성화	60

3. 소득안정·위험관리	63
(1)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	63
(2) 동물 질병방역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	67
(3) FTA/DD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	72
4. 안전식품·안정공급	75
(1) 안전 농식품 공급	75
(2) 협동조합 개혁 및 유통구조 개선	82
(3) 안정적인 식량 공급	89
(4) 기후변화 대응	101
IV. 과제별 주요일정	105
< 참고 > 2011년 업무계획 추진실적	117
< 별첨1 > 201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	127
< 별첨2 > 2012년 산림청 업무계획	151

I . 이명박 정부 농정평가 및 현 좌표 진단

1. 성 과

2. 반 성

3. 현 좌표 진단

1. 성 과

- (농협개혁)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,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‘농협법’ 개정 완료('11.3)
 -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-2지주회사(경제·금융) 체제로 전환
 -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축산물 판매·유통·가공 등 경제사업 전담
 -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 및 세제 지원방안 마련('11.9)

- (FTA대책)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(21.1조원 →22.1)
 -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(80→85%),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(2.2조원 → 4.0),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등 재정·세제지원 강화

- (농림어업 성장) '04년 이후 40조원 수준에서 정체되었던 농림어업 생산액*이 '0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
 - * ('00) 37.1조원 → ('07) 41.6 → ('08) 46.0 → ('09) 49.9 → ('10) 50.9
 -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등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농수산물 생산증가 및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결과

- (식품산업·수출) 규제대상이던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화·전략산업화하여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출확대 건인
 -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('11.9) 및 김치·전통주·장류 등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통한 수요 창출

* 막걸리 출고량/시장규모 : ('07) 172천kl/2.9천억원 → ('08) 176/3.0 → ('09) 261/4.4 → ('10p) 412/7.1

-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, '11년 농식품 수출액은 76억불로 전망 (11.30기준 65.6억불)되며, 최근 4년간 38억불 수준 증가('07 : 38억불)
 - * '08년 이전에는 농식품 수출 10억불 증가에 20년 소요('88 : 32억불 → '08 : 45)
- 한식의 본격적인 해외진출로 인지도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
 - * 뉴욕시민 한식 선호도 증가('09 : 9% → '11 : 31), 미슐랭가이드 인증 스타급 한식당 지정(4곳)
- (미래준비) R&D투자 효율화, 종자·생명산업 등 농식품분야 성장동력 확충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
 - R&D 공동기획단 운영으로 중복투자 사전차단 및 종자·종묘 개발을 위한 'Golden seed project' 추진('12~'21년간 4,911억원 투자)
 - * 전략적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 20개 개발 (토마토, 백합, 고추, 넉치 등)
 - '기후변화 대응 세부 추진계획'(12월) 및 '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'(7월) 수립 등 정책적 대응노력 강화
- (식품안전) 소비자의 알권리,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
 -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* 및 이력제 확대('08 : 국내산 쇠고기 → '10 : 수입산 쇠고기, '14년 돼지고기)
 - * ('07) 구이용 쇠고기 → ('11) 소돼자닭고가오리고기, 쌀배추김치, 수산물(6개 품목)
 - 인증제 통폐합 등 인증체계 정비('10 : 18종 → '11 : 11, '13년까지 8)
- (수급안정) 유통구조개선,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수급안정 대응 강화
 - 농협 계약재배 및 사이버거래소 직거래 확대('09 : 52억원 → '11p : 6,000)
 - 쌀 가공산업에 대기업 참여로 가공제품 개발 및 수요 확대
 - * 가공용 쌀 소비량 : ('07) 183천톤 → ('10) 304 → ('11p) 357

- ‘국가곡물조달시스템’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곡물회사 설립(4월)
 - * 곡물유통망 확보를 위해 M&A 대상기업 발굴 및 지분투자 협의 진행 중
- 러시아와 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명태쿼터 확보
 - * ('07) 20,500톤 → ('09) 39,000 → ('11) 50,001(추가쿼터 10,000톤 포함)
- (농어가 경영안정) 농어업재해보험 확대, 농지연금제도 신규 도입 등 농어가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 강화
 -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가축, 양식수산물, 농어업용 시설물까지, 대상재해도 자연재해에서 병충해, 화재 등으로 확대
 - * ('07) 21품목(농작물 10, 가축 11) → ('11) 50(농작물 30, 가축 15, 양식수산물 5)
 -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, 중고 농기계 매입 등으로 농가부채 경감
 - * 구입비용 절감(누계) : ('07) 338억원 → ('08) 889 → ('09) 1,569 → ('10) 2,429 → ('11p) 3,448
 -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 연금 지급
 - * 가입자격 : 부부 모두 65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, 소유면적 30,000㎡ 이하 농업인 ('11.11월말 현재 983명 약정체결, 월평균 96만원 지급)
- (농어촌) 정주여건 개선, 의료·교육 등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인력유입 촉진
 - 농어촌 공공서비스기준, 영향평가제도 등 선진제도 도입 및 제1회 ‘귀농귀촌 박람회’ 개최('11.11) 등 도시민 유입을 위한 정보제공
 - * 귀농 가구수 : ('07) 2,384호 → ('08) 2,218 → ('09) 4,080 → ('10) 4,067
 -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범국민적으로 ‘우리 농어촌 운동’ 추진중
 - * 재능기부 신청자('11.11월 현재) 1만명('13년까지 10만명 확보)

2. 미흡한 점

- (경쟁력 확보) 한·미, 한·EU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분야 신규투자 미흡
 - ‘先 대책, 後 비준’ 원칙에 따라 국내보완대책을 마련·시행 중이지만,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자생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
 - 농어업인은 시설현대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지원을 집중해 줄 것을 건의(FTA 대책 관련 농어민 간담회, 1~6월)

- (유통체계) 협동조합 중심의 농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미흡
 - 수급·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생산자단체의 조직화, 계통 출하, 수급조절 시스템 취약
 - 유통구조개선 대책 추진 초기단계로 성과를 가시화하기에는 내·외부 요인(상품특성, 기후 등) 및 판매사업에서 농협의 역할 부족
 - 농산물 수급안정대책('11.1) 추진에도 불구하고, 배추·고추 등 일부 품목의 수급불안 반복
 - * 평균 소매가격 : ('10.11월) 배추 3,443원/포기, 고추 10,140원/600g → ('11.11월) 1,523, 17,450

- (구제역 대응) 사상 최악의 구제역, AI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경제적·사회적 비용 낭비 초래
 - 초동대응 및 백신접종 등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(SOP) 미흡
 - * 근본적 개선을 위해 ‘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’ 마련·추진중
 - 열악한 축사환경 등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구조적으로 취약

□ (농어가 소득·경영) 농어가 소득정체 및 경영비 부담 가중

- 평균 농어가 소득은 3천만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, 도시근로자 가구의 2/3 수준('07 : 농가 72.9%/어가 69.9% → '10 : 66.8/74.2)에 불과

* ('07) 농가소득 32.0백만원/어가소득 30.7백만원 → ('10) 32.1/35.7

- 사료, 농약가격 등 농어가구입가격지수는 상승하는 반면, 농어가판매지수는 하락하여 농어가 교역조건은 악화

* 농어가 교역조건 = (농어가판매가격지수/농어가구입가격지수)*100

* 농가 교역지수('05 = 100) : ('07) 96.8 → ('08) 86.2 → ('09) 83.9 → ('10) 88.5

□ (식품산업-농어업간 연계 부족) 식품산업의 영세성, 식품산업과 농어업간 연계부족으로 농어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한계

- 대부분의 식품제조·외식업체가 영세·자영업자(5인 미만 업체 84.5%) 중심으로 운영

- 국산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높지만, 안정적인 원물 공급 체계 미흡, 낮은 가격 경쟁력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

□ (농어촌 생활여건) 농어업인 '삶의 질 개선 대책' 추진으로 복지여건 개선 등 일부 성과도 있지만, 생활여건은 여전히 미흡

- 의료·교육 등 기초 생활서비스에 대한 도시-농어촌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, 농어촌의 활력도 저하

* 삶의 질 만족도(농업인/도시민) : ('08) 13.1%/19.3% → ('10) 12.6%/26.9

-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적 관심과 지원노력 부족

3. 현 좌표 진단

□ (농어업 구조) '00~'10년까지 농림어업생산액은 연평균 3.2% 증가했지만, 부가가치는 정체(GDP 대비 비중은 매년 0.2%p 수준 감소)

* 농림어업 부가가치 : ('00) 24.9조원 → ('07) 25.2 → ('08) 24.7 → ('09) 26.6 → ('10p) 27.0

○ 쌀 등 재배업의 부가가치는 소비성향 변화 등으로 감소('00 : 18.6조원 → '10 : 17.4)한 반면, 축산업·어업은 크게 증가*

* 축산업/어업 부가가치 : ('00) 2.6조원/2.2조원 → ('10) 5.0/2.6

-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로 지속 증가 ('00 : 11.1백만원/인 → '10 : 17.3)

○ 식품제조외식산업 부가가치*는 국민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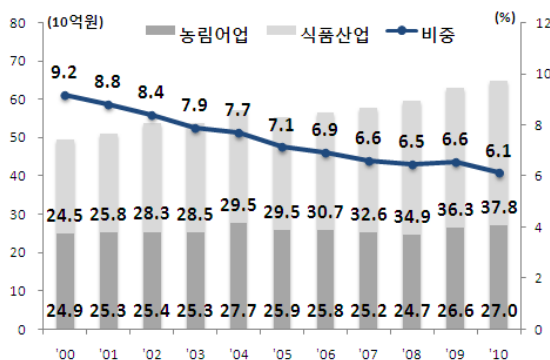
* ('00) 24.5조원 → ('07) 32.6 → ('08) 34.9 → ('09) 36.3 → ('10p) 37.8

○ 농림어업 취업자의 감소('00년 대비 30.2%↓)와 함께, 고령화도 급격히 진전('10년 농림어업취업자 중 65세이상 비중 55.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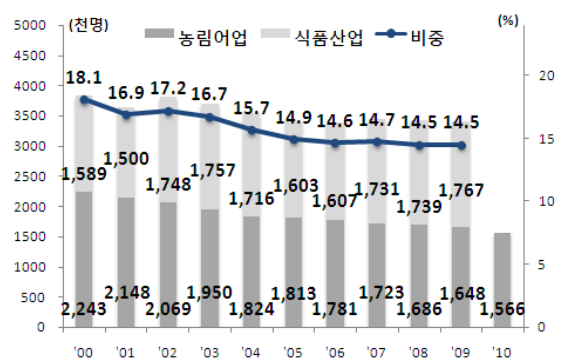
- 농어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농·영어 규모의 양극화 진행

* 영농 규모별 재배농가 비중(1ha 이하/3ha 이상) : ('00) 59.2%/6.1% → ('10) 64.6%/8.2

농림수산물산업 부가가치



농림수산물산업 취업자 변화



□ (농어가 소득) '00 ~ '10년까지 평균 농가소득은 연평균 3.3% (23백만원 → 32), 어가소득은 6.6% 증가(19백만원 → 36)

○ '10년 평균 농가소득은 32백만원, 어가소득은 36백만원이지만 연령대별 소득격차 존재(60세 미만 농가소득 49백만원, 어가소득 45)

- 60세 미만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소득격차는 '00년 86.9%에서 '10년 97.6%로 개선(전체 도·농간 소득격차 : '00년 80.5% → '10년 66.8)

○ '10년 연간 판매금액 1억원 이상 농가는 26천호, 어가는 6천호이며, 전체 농어가 중 비중은 지속 증가('00 : 농가 0.6%/어가 3.2% → '10 : 2.2/8.4)

○ 시설투자 증가 등으로 '10년 농가부채는 27백만원, 어가부채는 36백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, 부채상환 능력*은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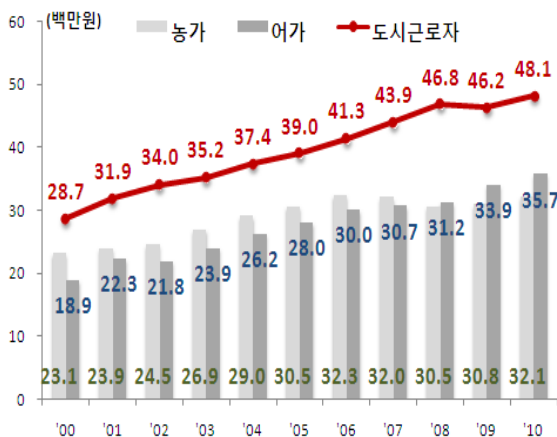
* 장기부채상환능력(부채/자산) : ('00) 농가12.6%/어가11.3% → ('05) 9.1/18.8 → ('10) 7.3/13.8

○ 유류, 농약, 사료 등 농어업 경영비 증가가 농어업 총수입의 증가보다 커 농어업 소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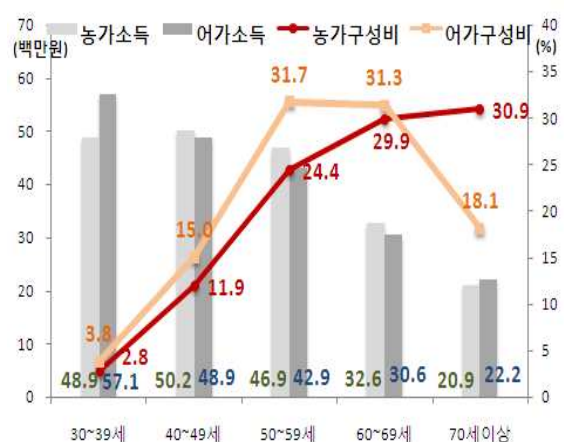
* 농어업소득률 = 농어업소득(농어업총수입 - 농어업경영비)/농어업총수입

* 소득률(농업/어업) : ('00) 55.8%/54.5% → ('10) 37.1/44.1

연도별 농어가 소득



연령대별 농어가 소득('10)



□ (농식품 소비패턴) 연간 도시근로자가구당 식료품·비주류음료 소비지출은 '00년 2,884천원에서 '10년 3,825천원으로 증가

○ 품목별로 국민 1인당 쌀·채소류 소비량은 감소한 반면,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육류·과실류의 소비량은 증가

* 1인당 소비량('00 → '09) : 쌀 93.6kg → 74.0, 육류 31.9kg → 36.8, 채소류 165.9kg → 153.6, 과실류 58.4kg → 67.7, 수산물 36.8kg → 49.8

○ 또한, 식료품비 중 외식 지출비중은 증가('00 : 44.4% → '10 : 49.3)

□ (농어촌 생활복지) '삶의 질 향상 계획(1차 '05~'09, 2차 '10~'14)' 수립을 통해 농어촌의 정주·복지여건 개선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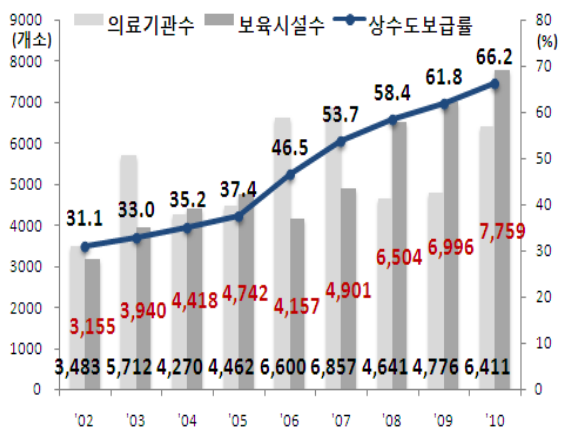
○ 상수도, 의료기관, 보육시설 등 농어촌의 생활여건은 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

* '10년 상수도 보급률(면) 66.2%, 의료기관 비율(군) 11.4%, 보육시설 비율(읍면) 20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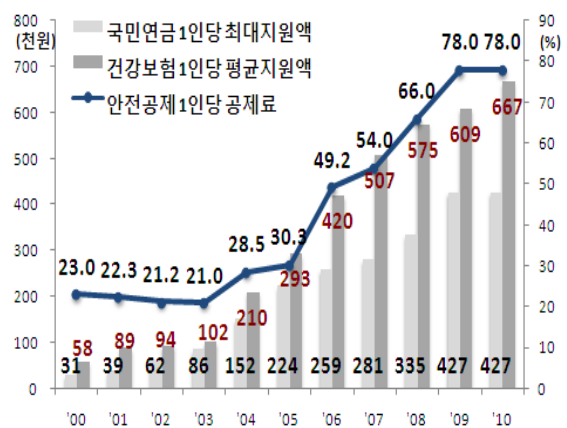
○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료(50%)·국민연금보험료(최대 50%)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

* '11년 건강보험료 436천세대(1,544억원), 연금보험료 219천명(869억원), 양육비 34천명(310억원)

농어촌지역 생활 인프라



농어업인 복지지원



Ⅱ. 2012년 여건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

1. 정책 추진여건 전망
2. 정책고객 의견수렴 결과
3. 2012년 주요과제 추진방향

1. 정책 추진여건 전망

- 주요국과의 FTA 등으로 시장개방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
 - 미국, EU와의 FTA 발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영향 가시화
 - 호주, 콜롬비아 등 농업 강국과의 FTA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
 - 중국, 일본과도 동북아 경제통합 차원의 FTA 추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

- 유럽발 금융위기,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불안 지속
 - 원유·곡물·사료 등 국제 원자재 가격, 환율·금리 변동 가능성 증대는 농어업 경영비 상승과 수출 감소요인으로 작용 가능
 - 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,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과일류 등 일부 기호성 농수산물의 소비에 영향 가능

-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정책대응 필요성 증대
 -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함께, 농경지 침수, 양식품목 폐사, 산사태 등 농어업 분야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응 강화
 - 탄소상쇄제도 도입 등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('20년 배출량 전망치 대비 5.2%) 달성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

- 휴양, 일자리 등 농어촌의 유무형 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
 - 농어촌 경관, 전통문화유산 관리·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,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 가능성 모색
 - 도시민의 귀농·귀촌지원 등을 위한 정보·교육 수요 확대

2. 정책고객 의견수렴 결과

1 농업·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(10.11~28)

<도시민·농어업인·전문가 2,296명 대상, 농촌경제연구원 >

□ 2011년 농림수산물 주요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

- 가축질병 대응 강화(55.6%),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(37.9%), 보조금 등 지원체계 개편(32.2%)에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,
-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(37.5%), 재해 등 위험관리(36.5%),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을 통한 **활력증진**(23.1%) 분야는 성과가 적다고 인식
 - 아울러, 개방에 대한 정부대책이 적절하지 않다(59.7%)고 평가

□ 농업인의 농업·농촌정책 수요에 대한 의식

- 농가 소득안정(54.2%)과 후계농업인 육성(13.4%)이 중요하며, 고령화 및 인력부족(35.3%)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주문
- 내년도 중점 추진 정책으로 FTA 등 농업개방 대응(27.5%), 농산물 가격안정(27.3%)이 중요하다고 인식

□ 도시민의 농업·농촌에 대한 의식

- 가격·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우(63.5%), 쌀(53.3%)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지만 전년*보다는 낮은 수준

* 도시민의 품목별 경쟁력 인식('10) : 한우 78.9%, 쌀 75.8

- 아울러, 국산 농산물에 대한 구매 충성도 저하('10 : 51.1% → '11 : 45.1)

2

농어업·농어촌 정책인식 조사 (11.19~28)

<도시민·농어업인·전문가 1,200명 대상, 농촌정보문화센터 >

□ 2011년 농림수산물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

- 식품산업육성(12.9%), 농어촌 복지증진(11.4%), 식량의 안정 공급(11.3%), R&D지원(11.3%)을 높은 성과를 거둔 정책으로 평가
- 농수산물 가격안정(20.5%),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(15.3%), 수출(13.0%), 농협·수협개혁(13.0%)은 낮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
- 아울러,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(31.8%)가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

* 농어가 소득안정장치 강화(21.0%), 직접피해보전 기능 강화(19.2%) 등

□ 농림수산물 주요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

- (쌀) 수급가격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의 안정적 매입(23.3%), 산업발전 측면에서 가공용 쌀 소비촉진(26.1%)이 중요
- (유통수출)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사전 생산량 조절(32.8%)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, 수출확대를 위해 판로개척마케팅(27.8%)이 중요
- (축산)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초기대응(28.0%)이 중요하며, 친환경·동물복지형 축산(26.7%)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
- (수산) 수산자원조성사업(28.8%)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, 양식산업육성을 위해 연안 양식장 오염(28.4%) 해결이 중요
- (농어촌) 종합적인 지역개발(22.0%), 인력육성(20.5%)이 중요

3. 2012년 주요과제 추진방향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

체질개선·미래준비

- ▶ 농수산물 생산시스템 선진화
- ▶ R&D 지원 및 성장동력 확충
- ▶ 수산업 체질개선
- ▶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 확대

활력창출·생활안정

- ▶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
- ▶ 인력육성·유입·지원 체계화
- ▶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 지원
- ▶ 투자 활성화

소득안정·위험관리

- ▶ 농어가 소득·경영안정 지원
- ▶ 동물질병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
- ▶ FTA/DDA 대응 강화

안전식품·안정공급

- ▶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
- ▶ 협동조합 개혁 및 유통구조 개선
- ▶ 안정적인 식량공급
- ▶ 기후변화 대응 강화

Ⅲ.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

1. 체질개선 · 미래준비
2. 활력창출 · 생활안정
3. 소득안정 · 위험관리
4. 안전식품 · 안정공급

1. 체질개선 · 미래준비

1 농수산물 생산 시스템 선진화

가 농어업 시설현대화

◇ 지원방식 변경(보조+융자 → 이차보전)으로 시설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

* MSY(모돈당 연간 출하두수) : ('11) 15두 → ('17) 22(덴마크 25)

- (축산) 축사 신축·개보수, 급이·폐사축 처리시설 등 생산성 향상 및 방역관련 시설 중점 지원
 - '12년도에 양돈 등 약 2천호를 대상으로 시설지원
 - 사업성이 검증된 전업농 중심으로 지원하고,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시설 지정 등 자금지원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
 - 현행 방식(보조+융자)은 전업농 중심으로 현행 한도(양돈 9억원 등)내에서 지원, 이차보전은 기업농 중심으로 지원한도 확대(양돈 50억원 등)
 - 과잉사육 기조에 있는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·보수만 지원(방역 및 생산성 향상 시설은 제한 없음)
 - 축사시설 보완시 소독조, 휴대용 소독기, 방역울타리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농장단위 사전 방역관리 강화
 - 친환경축산 인증 농가 우선 지원 등으로 환경 친화 축산 유도

□ (과수) 사과·배·포도·감귤 등 주요 과실의 품질고급화비용절감 시설 및 생산기반 정비 중점 지원

- '12년도에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, 관·배수시설, 방풍·방조시설 등 지원('11 : 491억원 → '12 : 552)

- * 과수시설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('11 : 1,702kg/10a → '17 : 1,950) 및 노동력 절감(157시간/10a → 140) 등 추진

- 시설포도·시설감귤 등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다겹보온·지열 난방 등 에너지 절감형 시설로 전환

- * 시설 재배면적('10) : 6,225ha(포도 2,242, 감귤 3,102, 기타 881)

- 집단화된 생산단지(30ha이상), 수출 전문단지(52개)를 대상으로 용수개발, 경작로 확·포장 등 지원('11 : 171억원 → '12 : 106)

□ (채소·시설원예)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, 온실 자동화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중점 지원

- '12년도에 고추 주산단지 중심으로 비가림 시설 신규 지원(60ha, 72억원)

- *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로 생산성 향상('11 : 232kg/10a → '17 : 670) 및 병충해 방제회수 감소(11회 이상 → 6~7) 등 추진

- 시설원예전문단지의 유리온실·비닐하우스 개보수, 내재해형 시설보급 등 저비용·고품질 시설 지원('11 : 326억원 → '12 : 542)

- * 일반 원예시설 신규지원(500ha, 250억원)

○ 다접보온커튼, 지열냉난방기 등 에너지절감시설 지속 보급
(’11 : 1,422억원 → ’12 : 1,335)

□ (수산) ’12년도 노후된 양식장 시설현대화 신규 지원 검토

○ 10대 전략 양식품목 중심으로 에너지절감시설, 자동선별기 등 양식장 기계화·자동화 시설 확충

□ (제도개선) 농어가의 자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‘농신보’ 제도 개선 방안 마련(1월) 및 규제완화 추진

○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등 시설현대화 자금 특례제도 마련

- 보증한도 : (현행) 농어업인 10억원 / 법인 15억원 →

(개선) ‘시설현대화사업’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확대

○ 어장 규모제한 등 진입제한 규정을 신규어장(신규면허 또는 갱신) 부터 단계별로 완화

* 어업면허 제한 : ①임대차 불가, ②규모제한(60ha 이하), ③법인 또는 어촌계 소유 면허 매매 불가, ④갱신시 기존 사업자 우선순위 등

- 품종별로 세분화된 양식면허를 여건에 따라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율선택제 도입

*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(6월)

- 갯벌 등 양식어업의 임대차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(‘수산업법’ 개정안 상임위 심사중)

나 축산업 선진화

◇ 축산업 허가제, 낙농산업 선진화 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

- 축산법 개정과 연계, 사육규모에 따라 **축산업 허가제 도입**(’12)
 - * ’12년(기업농) → ’13년(전업농) → ’14년(준전업농) → ’15년(소규모 농가)
- **축사 위치·시설·사육두수·교육 기준 충족시 허가**
 - ’12년부터 허가대상 등 축산농가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(21천명, 22억원)
 - * 교육시행을 위한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(’12.3월)
- 허가 대상이 아닌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**가축사육업 등록제 도입**(유예기간 1년)
- **가축 방역의 효율화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‘농장단위 돼지이력제’ 도입**(’14년 본사업)을 위한 **시범사업 실시**(’12~’13년)
 - 농장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의 이동 또는 도축 금지(’12.10월~)
- **‘낙농산업 선진화 방안’의 차질 없는 추진**
 - 원유 200만톤 수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**‘전국단위 수급 관리체계’** 구축, 생산비와 연계한 **‘원유가격 연동제’** 운영 등 시행
- **‘말산업 육성법’(’11)에 따라 말산업을 레저산업, 농외소득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‘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’ 수립**(’12년 상반기)
 - 특구지정, 승마시설 확충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
 - * 특구지정기준 : 사육농가 50가구, 사육규모 500마리, 연간 매출규모 20억원 이상
 - **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마련, 말조련사 등 자격제도 도입** 및

‘말산업 복합단지’ 조성 등 추진

3

R&D 및 성장동력 확충 지원

가 농림수산물 R&D 강화

- ◇ 생산·유통·식품분야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
 - 중장기 투자계획 : ('12) 9,086억원 → ('14) 1.3조원 → ('20) 3.9

□ 첨단 생산기술 개발, FTA대응 시설 현대화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중점분야의 연구개발 집중 및 투자 확대 추진

- 첨단 환경제어, 온난화 대응 품종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생산성 혁신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('13~'20년까지 1조원 투자)
- 농수산물자원에서 고부가가치소재 개발('13~'22년간 5,982억원 투자)

* 천연 방부제, 항생제 대체제, 바이오 향료 등 10대 소재 개발

□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한 R&D 지원 체계 선진화

- 소액·다건 지원에서 대형·프로젝트형 지원체제로 전환
 - 연구성과의 시너지 효과 및 관리기관의 연구관리 효율화 유도
- 성과 중심의 평가지표 도입(12월) 등을 통한 성과관리 전주기화
 - 기획·관리·평가 및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성과평가 강화
- 금융기관 제휴를 통한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 강화

* (현재) 카드사용 파악(17%) → (개선, 12년) 계좌 및 카드사용 파악(95%)

□ 우수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인증제 및 정책자금 지원

○ 농림수산물분야 우수 실용기술의 발굴 및 실용화·산업화를 위한 농림수산물 신기술 인증제도 기획(6월)

- 실용화 관련 연구개발사업 선정시 가점 등 인센티브 지원

○ 우수기술에 대한 사업화자금(1,000억원, 금리 3%) 지원(3월)

□ 농식품분야 연구개발 수준평가 및 중장기 추진상황 검토

○ 연구개발 사업별 Micro road map 작성(7월) 및 기술수준 분석(11월)을 통해 R&D 사업별 추진전략과 연계성 강화

* '12년 농림수산물분야 최초로 7대 산업별 기술수준을 조사·분석하여, 선진국과의 격차를 정량적으로 평가

□ 소규모 농가대상 수익창출 R&D 모델 개발

○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·마케팅 통합 지원으로 연구개발결과를 산업적 가치가 높은 수익모델로 연계

* (과거) 신제품 개발, 재배, 가공·유통 별도 지원 → (향후) 분야별 통합 지원

○ 생산·상품화·마케팅 등 종합기술을 투입, 40개 거점 육성(12월)

□ 농식품분야 현장애로 기술 해결 및 사업화 촉진

○ 질병원인 규명, 재해 피해 최소화 등 현장지원팀(30개) 구성

* 농진청(농촌현장지원단), 산림청(임업기술컨설팅), 수과원(수산현장기술지원단)

○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실용화 전담기관 기능 강화

- 특히 출원·관리 강화 및 수산, 임업 분야 기술이전 지원

나 종자산업 육성

◇ 글로벌 수출종자 개발 및 민간육종 인프라 확충 등 종자 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

□ 글로벌 수출 종자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R&D 투자 확대

○ 'Golden Seed Project('12~'21년 4,911억원, '12년 25억원)'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센터 구성(3월) 및 품목별 세부계획 마련(12월)

- 20개 전략품목의 글로벌 수출종자 개발(농산 : 벼, 감자, 배추, 무, 토마토 / 축산 : 돼지, 닭 / 수산 : 넙치 등)

○ 수입종자 대체를 위한 '로열티 대응사업단 운영'('12 : 63억원) 및 해외적응성 시험 확대

* 대상 품목 : 딸기, 국화, 참다래, 버섯, 장미, 난 등 6개 작물

* 국산품종 보급 : ('11) 딸기68%, 국화 20, 참다래 15 → ('12) 70, 23, 20

* 해외적응성 시험 : ('11) 5개국 28개 품종 → ('12) 6개국 30개 품종

□ 민간의 육종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반 및 인력양성 지원

○ '민간육종연구단지(Seed Valley)'를 신품종 육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(29억원)

- 20개 민간 종자업체 유치, 민간육종의 시너지 효과 도모

* ('11~'15) 270억원 (전북 김제 54ha) / ('12) 설계 및 기반공사

○ 육종세대 단축, 신품종 조기육성을 위한 '방사선육종센터' 설립(39억원)

* ('10~'13) 132억원, 전북 정읍(한국원자력연구소 설립) / ('12) 시설공사

- 육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‘채소류육종연구센터’ 사업 추진
 - ('11) 석·박사 등 27명 → ('12) 29명('19까지 270명 양성 목표)
 - * 10년간('10~'19) 100억원, 서울대 등 5개 대학 및 3개 종자업체 참여

□ 우수 종자 보급 확대로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

- 딸기, 화훼, 버섯 등의 **우량 종묘 생산기관** 지원(7개소, 39억원)
- **벼보리 등 정부 보급종 검사강화**로 고품질 종자 공급('11 : 36톤 → '12 : 37)

□ (축산) 한우 종축 분산 관리 및 우량 유전자원 선발 강화

- 구제역 등 대비, **한우 종축 분산 관리**(3개소, 서산·무주·영양)
 - 신규 분산처(경북 영양) 부지 매입 및 시설 설치('12~'13년)
- 우량 유전자원 보급을 위한 **한우 종축 선발 강화**
 - 당대검정두수 확대(500두→600)를 통해 우량종자 선발비율 강화(5%→3.8)

□ (수산) 품종보호제도(UPOV) 시행('12.1월)에 따른 해조류 신제품 관리 기반 조성 및 개발 확대 추진

- 신제품 출원·심사·등록 및 종자 유통관리를 위해 **수산식품 품종관리센터 운영**('12.3월~, 국립수산과학원)
- 수입대체용 **해조류 신제품 개발 확대**('11 : 김6, 미역3 → '12 : 미역1개 추가)

□ (산림) 우수 산림 종자·묘목 생산으로 산지를 녹색자원화

- 소나무, 잣나무, 낙엽송 등 주요 **경제수 종자 45톤**, 포플러類를 비롯한 **바이오순환림 등 묘목 41백만본**(17천ha) 생산·보급
 - * 편백, 가시, 후박나무 등 기후변화 대응 난대수종 종자와 묘목생산 확대

다 생명자원의 확보 및 산업화

◇ 생명자원의 활용도 제고,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

- 생명자원산업화센터 건립('12) : 4개소(곤충 1, 천연색소 2, 양잠 1)

□ '생명자원통합정보서비스(BRIS)' 구축을 통한 종합적 정보제공(1월~)

- 생명자원의 활용·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전자원정보를 DB화(6만점)하고, 타 부처 정보시스템(수출입신고 등)과 연계 운영

□ 곤충·동식물 등 생명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

- 지역별 곤충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개발 등을 위한 '지역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' 건립 지원('12~'14, 1개소, 총 50억원)
- 약용작물을 활용한 천연색소·음료소재 개발 등을 위한 '천연 색소산업화지원센터' 건립 지원('12~'14, 2개소, 총 200억원)

□ 친환경 고부가가치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기반조성 추진

- 전문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,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('12년, 8개소), 양잠산물종합단지 시범조성('12년 1개소) 등 산업화기반 구축

* 누에, 뽕잎, 오디 등을 활용한 가공제품개발 : ('11년까지) 9종 → ('12) 4

□ 농림수산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R&D 지원 강화

-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성분평가 및 제품개발(523억원)

* 곤충자원의 약리성 및 독성 평가('12~'14, 12억원), 지역 특화 생명자원 활용 고부가 제품 개발('12~'14, 15억원), 농수축산용 미생물산업화('12~'14, 15억원) 등

라 낚시·관상어산업 육성

◇ 낚시 및 관상어산업의 본격 육성으로 어업분야 신성장동력 확충

□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, 낚시문화 선진화 등 낚시산업 육성

○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

- 바다낚시터 허가제 시행 및 수상구조물 인증기준 마련(9월)
- 낚시터 허가기간 연장(5년→10년) 등 내수면 낚시터 규제완화 추진
- 우수 낚시터 등 종합적 낚시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(12월)

○ 낚시 서비스 질 제고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유도

- 낚시업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(교재개발 : 11월, 시범교육 : 12월)
- 낚시인을 대상으로 낚시터 청소, 낚시제한 어종 등 홍보 확대
- * 건전한 낚시문화 리플렛 제작·배포, 명예감시원 활동 활성화 유도 등

○ 종합적인 낚시 산업 육성 대책 마련(2월)

□ 관상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원 확대

○ 관상어 품종개량, 기능성 용품개발* 등을 위한 R&D 확대 (560백만원) 및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(120백만원)

- * 토속 어종의 관상 가치 개발, 로봇관상어, 이끼 방지 수족관 개발 등

○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법률안 마련(12월)

- * 육상 해수 관상어 양식, 산업 단지 조성 및 지원, 관상어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및 지원, 수족관 관리자 제도 도입 등 관련 내용 검토

마 도시농업 활성화

- ◇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도시농업시민 운동 전개, 박람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
 - 도시텃밭 조성 확대 : ('11) 485ha → ('12) 550

□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
- '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'11.11.22 제정)'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(5월)
- 지자체별 도시농업 육성 조례 제정을 확대하여 지역의 도시농업 활성화 도모('11 : 21개 지자체 → '12 : 40)

□ 도시농업 육성 추진체계 마련 및 미래형 기술 개발

- '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' 수립(7월) 및 '도시농업위원회' 구성·운영(6월)을 통해 정부간 협조체제 강화
 - * 종합계획(안) : 도시농업 공간 확대, 도시농업인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, 건물 실내·외 녹화기술 등 R&D 전략 마련 등
- 수직빌딩농장 등 미래형 식물생산 산업화 연구 및 종합계획 수립(11월)
 - * 고부가가치 작물개발, 환경제어기술 표준화 및 기술 로드맵 작성, 해외실증 연구 등

□ 공감대 형성과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, 박람회 개최 등 시민운동 지원

- '제1회 전국 도시농업박람회'(6월) 개최로 도시농업 기술·정보 교류 확산

3 수산업 체질개선

가 연근해 어업관리 체계화

◇ 체계적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전략 마련 및 어선시설 개선 등 인프라 확충으로 어업선진화 도모

□ 체계적·종합적 어업구조조정방식 도입을 위한 제도 확충

-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어선허가 유지를 위해 허가정수 재조정(6월)
 -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(2월)를 거쳐 관계법령(수산업법 시행령 등) 개정
- 구조조정 방식을 어업인 희망 감척에서 **자원남획용 어업 중심의 자원관리형 감척**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절차 확립
 - 감척 대상 업종 선정, 감척절차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도상연습 실시
 - * '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정('12.7월 시행)으로 어업인 희망 또는 직권에 의한 어선감척사업 근거 마련

□ 어업 효율성 제고, 어선 안전조업을 위한 제도정비 및 시설개선

-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 등 어선구조 개선을 위한 **어선톤수 조정**(10월)
 - 어획강도를 높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업종별 어선톤수 제한을 완화
 - * 현행 어선톤수 제한 규정 : 연안 10톤 미만, 근해 140톤 미만
- 어선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로 조난시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
 - '12년 5톤 이상 어선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('15년 도입 완료)
- 사고예방을 위한 **'(가칭)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'** 정부안 마련(12월)
 - 시범 실시중인 구명조끼 보급('11 : 2,200개)을 '13년부터는 본격 확대

나 수산자원 조성·관리 강화

◇ 수산자원 조성·관리의 내실화 및 생태환경에 적합한 사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

□ 총허용어획량(TAC)의 설정 및 관리 내실화

- 연근해 수산자원의 잠재생산력 조사를 통해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·평가체계 마련(12월)
- 양도성개별할당제(ITQ,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) 도입 검토
 - 어업자별 할당 방법, 할당된 배분량의 매매 또는 임대 방법 등

□ 연안 및 내수면 생태환경에 적합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

- 연안 바다목장 5개소(옹진, 양양, 포항, 통영, 부안) 추가 조성
 - * 바다목장조성(누계) : ('10년까지) 22개소 → ('11) 26 → ('12) 31(신규 5)
- 바다숲 조성('11 : 705ha → '12 : 840)으로 산란·서식장 복원
- 하천·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도모델 개발 및 인공산란장 설치(4개소)

□ 어장관리해역 지정 및 어장환경조사 강화 등 어장관리 제도 정비 (어장관리법 개정, 8월 국회 제출)

- 어장환경 조사시기(5년 주기→수시), 범위(어장관리해역→전어장) 확대 등

□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·관리를 위한 불법어업 예방 시스템 구축

-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전담선(1,250톤급) 배치 및 관련기관 합동단속 실시

다 10대 전략품목 및 친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

- ◇ 전략품목 종묘생산기술 확보 및 신개념 양식기술 개발
- ◇ 친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

[10대 양식전략품목 육성]

- **종묘생산 등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민·관 공동 기술 개발**
 - 참다랑어, 해삼 완전양식을 위한 **인공종묘생산기술 개발**
 - 참다랑어 어미를 확보하여 수정란 채집 및 부화시험 실시
 - * '11년 몰타에서 참다랑어 수정란 이식, 세계 4번째로 인공부화(45마리)에 성공
 - 한·중 기술협력을 통해 해삼 우량종묘(5g 내외) 생산기술 확보
 - 10대 전략품목별 **민·관·학·연 연구클러스터**를 구성, 맞춤형 양식 및 가공기술 개발 등 지원
- **다기능 육상양식방법 개발 및 양식어장 확대**
 - 소비지 인근 **빌딩형 양식** 등 관광·소비기능을 겸한 **복합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**(5월)
 - * 빌딩양식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('11.1~12월)
 - **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** 외해, 갯벌 등 **신규어장 개발**(4천ha)
 - * 전복 2,000ha, 김·미역 1,762, 굴 140, 기타 45
- **양식용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**
 - **주산지별 맞춤형 배합사료 공장 건립**(제주, 1개소)

[친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]

- 서·남해안 갯벌을 활용하여 무급이·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
 - 갯벌참굴, 해삼 등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인공종묘생산, 양성 및 가공기술 집중 개발
 - ‘(가칭)갯벌양식어업육성법’ 제정으로 유희, 방치된 갯벌의 종합적·체계적 이용·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

<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안) 주요내용>

- ▶ 갯벌실태조사,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
- ▶ 갯벌어업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갯벌어업육성지구(생산, 종묘육성) 지정·운영
- ▶ 갯벌어업에 관한 연구·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
- ▶ 마을어업에 양식업을 허용하고, 신규인력 및 대규모 자본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어업권 임대차 허용 및 위탁관리제 도입

- 갯벌양식어업에 대한 임대차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(‘수산업법’ 개정안 상임위 심사중)

□ 수출용 갯벌참굴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
- 갯벌참굴 양식적지 조사(’12 : 1천ha → ’15 : 4) 및 종패생산 기술 민간이전(수산과학원 → 어촌계)
- 갯벌참굴 생산을 위한 수평망식 양식어장 시범단지(30ha) 조성
 - 종묘생산+양식+가공+유통(수출)을 연계한 복합산업화 모델 구축
- * ’11.12월 갯벌참굴 시범사업(’12 : 40억원) 출범(태안)

라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

◇ 원양어선 현대화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원양산업 저변 확대

□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(建造)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

- 고수익성 참치잡이 어선은 대체건조(4척, 154억원),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오징어·꽁치잡이 어선 등은 시설 개선(1척, 10억원) 추진

□ 해외진출을 통한 원양산업의 다각화 및 글로벌화

- 양식시설·가공공장 등 해외 수산시설 인수·설립 지원(12억원) 및 투자정보·컨설팅 제공 등 종합 지원계획 수립(4월)
 -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산업의 해외 성공 사업모델의 확립·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('13년 이후) 방안 연구
 - 투자기업 현지 지원을 위한 해외 개발거점 설립(3개소) 검토 등
- 상업 조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해외 신어장 조사(2개소, 17억원)
- 수산자원 개발 및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한 해외양식 진출
 - 권역(국가)별 투자환경, 유망 품목·기술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투자정보 공유를 위한 민·관·연 협의체 운영

□ 국제 자원관리 규제를 반영한 원양산업 정책 및 제도 정비

- 허가제도 개편 등 '원양산업발전법' 개정(6월 국회제출 예정)

4

식품산업육성 및 수출 확대

가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

◇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기반 확충

【 글로벌 역량강화 】

□ 핵심 식품기술 R&D 및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

○ 18개* 핵심 식품기술 중심으로 R&D 지원 확대('11 : 248억원 → '12 : 290)

* 기능성 증진, 신소재 개발, 발효핵심 기술, 저탄소융복합 가공, 식품유통기술 등

- 식품기술 연구기관간 중점연구 분야 분담을 통한 R&D 효율성 및 산업화 제고(식품 R&D 중장기 계획 보완, 9월)

* 역할(안) : 농식품부(상품화, 290억원), 농진청(원천기술, 59), 한식연(기업협업 171)

○ 식품시장 특성·수요 등을 감안한 식품인력 양성 종합계획 마련(9월)

- 성장단계(진입·선도·성숙), 인재군(고급인력, 현장인력 등)별 맞춤형 교육

- 교육기관별 연간 교육목표를 설정하고,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

* '17년까지 10만명(누계) 교육을 목표로 aT 농식품유통교육원 등 기관별 연간 교육 목표 설정

-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축·운영(aT 농식품유통교육원)하고, 고부가가치 식품 분야 교육 확대(신규, '11 : 4개 대학 → '12: 5개)

- 식품분야 대기업-중소기업간 동반 상생을 위한 공조노력 강화
 - 동반성장 가능품목 대상으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협력사업 지원
 - * 대기업은 중소기업 협력사에 원가혁신, 품질고급화 기술 전수 등으로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, 자체 유통망을 통해 중소기업 유망 제품을 전국 판매
 - 식품제조업체-대형 유통업체간 ‘상생발전 협의회’를 설치(9월) 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

-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식품기업 One-stop 서비스 제공
 - 식품기업의 애로접수상담, 기업진단컨설팅, 자금R&D 등 종합지원
 - *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기업 : ('10) 946개소 → ('12p) 1,100 → ('17) 2,000
 - 해외 식품시장 진출에 필요한 수출 대상국 시장현황·전망, 검역, 현지업체 현황 등 정보 수집·전파
 - 식품기업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안내서 발간(3월)

- 국가식품클러스터(전북 익산) 단지지정, 기업유치 활동 본격 전개
 -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·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('12년 상반기)
 - 글로벌 수준의 기능성평가센터 등 6개* 핵심 지원시설 기본 설계 마무리
 - * 기능성평가센터, 품질안전센터, 패키징센터, 임대형공장, 파일럿플랜트, 지원센터
 - 국내외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참여기업 역량강화
 - * 덴마크·스웨덴 ‘외레순’의 푸드네트워크 사례 : 입주기업·기관간 협의회 구성·운영, 국내외 기업·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구성 등
 - 글로벌 선도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 지속 전개(연중)

【 식품산업 부가가치 제고 】

- 설탕·제분·첨가물 등 ‘식품소재 산업 활성화방안’ 마련(8월)
 - 소재별 국내외 수급 현황을 점검하여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재 개발 등 고부가가치화, 해외진출 확대 전략 수립

- 전통·발효식품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
 - ‘김치산업 종합계획’ 수립(7월), 김치 품평회(11월) 등 추진
 - * 김치산업진흥법(’12.1.23) 시행에 맞추어 자조금 조성 및 김치문화 확산방안 등 마련
 - 장류·소스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인 입맛에 맞는 수출용 상품개발 및 해외 판촉 지원 강화
 - 천일염 품질인증제(제품·생산방식 인증) 시범사업 추진(6월), 염전 주변 및 생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 마련(9월)
 - 소금산업진흥법(’12.11.22) 시행에 따른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(12월)
 - 술 품질인증제 확대* 및 숙성명주 프로젝트 추진(과실주·증류주, 5월)
 - * (’11) 막걸리, 약주, 청주, 과실주 → (’12) 증류식소주, 일반증류주, 리큐르 추가

- 기능성 식품 및 식품 기자재 산업 육성을 통해 식품산업 저변확대
 - 기능성 소재 DB를 기존 농산물 중심에서 수산식품까지 확대하고, 연구자 및 식품기업에게 정보 제공
 - 업체의 기능성 식품 개별인정을 위한 동물독성시험단계 평가지원(14억원)
 - 국내 최초 포장기술 전문연구기관인 ‘패키징센터’ 기본 설계(6월) 및 식품 기자재 R&D 지원 확대(’11 : 14억원 → ’12 : 20)
 - * (식품기계) 살균제어기술, 한식 조리장비 표준화, (식품포장) 기능성·친환경 포장 등

나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동반성장

◇ 식품산업이 국내 농수산물의 핵심 수요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어업과의 연결고리 강화

□ 국내산 원료 조달 확대 및 식품가공 산업 활성화 추진

- 식품기업이 사용하는 국산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방안 마련(9월)
 - 식품기업-생산자간 원료공급 규모화 및 계약이행 안정화(농협역할 강화) 유도
 - * '식품기업(수요자)-농협중앙회(사업관리)-단위농협(공급자)' 공급망 확충
- 농어업인의 시제품 생산,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공플랜트 확충(시군농업기술센터, 누계, '11 : 8개소 → '12 : 12)

□ 지역전략식품사업 및 농·공·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

- 지역전략식품사업단 성과평가(3월) 및 '13년 사업단 신규 선정(10개소, '12년 하반기)
 - 67개 사업단 대상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원(50억원)
 - *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식품을 등록보호하는 지리적표시제와 연계강화
-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발굴·육성('12년 200개, 누계 300)
 - 농식품기업지원센터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및 R&D·컨설팅 등 지원
 - * 농공상 융합기업 자금(172억원, 용자 3~4%), 컨설팅 지원(5억원) 및 R&D지원(30억원)
 - * '11년 선정사례 : 농업법인(주)장수채가 여주땅콩작목반과 장수채판매(주)와 협력하여 땅콩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일괄 추진('10 : 매출 7억원 → '12목표 : 173)

다 농식품 수출확대

◇ 수출기반 확충 및 공세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‘수출농어업’ 견인

◦ 농식품 수출 : ('10) 58.8억불 → ('11p) 76 → ('12년 목표) 100

□ 성장 가능성과 농어가 소득효과가 큰 수출 전략품목* 중점 지원

* **신선** : 인삼, 김치, 파프리카, 배, 버섯, 장미, 딸기, 사과, 토마토, 단감 /
가공 : 소스류, 면류, 유자차, 조제분유, 막걸리 / **수산** : 김, 넙치, 굴, 전복, 해삼 등

○ 품목별 해외 타겟 시장을 선정하고, 연차별 수출지원 로드맵을 마련(상반기)하여 스타 품목으로 육성

○ 전략 품목별 ‘수출촉진단’ 운영으로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괄 지원

- 검역장벽 해소, R&D, 해외마케팅 등 우선 해결과제 발굴·지원

* 수출촉진단 : 농식품부, 농진청, 지자체, 유통공사, 품목별 협회·단체 참여

□ 수출선도조직 육성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

○ 생산자와 수출업체를 계열화한 품목별 수출선도조직('11 : 18개)을 수출 공동브랜드 '휘모리'와 통합(3월)하여 집중 육성

* (사례) 팡이버섯 수출의 84%를 점유하고 있는 9개 업체가 설립한 선도조직이 품질 균일화 및 안정적 물량 공급을 통해 일본 최대 유통그룹 '이온' 진출

○ 수출 대상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 관리 강화

- 수출 농산물 안전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('12년 상반기)

- 수출용 패류 해역(7개) 확대 및 수출 양식장 종사자 위생안전교육 실시

□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체크 프라이스 등 자율규제 추진

○ 저가 수출 등 수출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 운영 정착

* '11.11월 현재 사과, 배 등 주요 품목(12개)에 대한 가이드라인(가격, 품위) 운영 중

□ 개별업체 직접 지원에서 물류 경쟁력 중심의 간접지원으로 전환

○ 전문물류업체를 선정(상반기)하여 수출업체의 공동 이용 지원

* 다품목 포괄 운송이 가능한 가공식품에서 시작하여 농산물로 공동물류 확산

○ 해외전진기지(중국 청도, '12년 말 운영업체 선정) 구축 및 해외공동 물류센터 확대('11 : 5개국/9개소 → '12 : 6/11)로 수출 물류 인프라 확충

○ 저장 유통기술 활용 및 물류 최적화에 필요한 시험 운송 지원

* 예시 : 항공으로 동남아에 수출되던 딸기의 경우, 최근 살균·훈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컨테이너로 운송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 제고

□ 주요 시장별 현지화 노력을 통해 전략적인 해외시장개척 추진

○ FTA 체결 국가 및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마케팅 지원 확대

- (중국) 동부 연안에서 중서부 내륙지방으로 시장 확대
- (아세안) 국가별 선호 품목*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·판촉

* 예시 : 베트남(인삼), 말레이시아(단감·딸기), 필리핀(조제분유) 등

- (미국) 교포 중심의 시장에서 현지인 마켓으로의 진입 확대

○ 수출업체지원정보시스템*을 통해 업체별 맞춤형 지원 추진

* 업체별 수요 조사, 지원 대상 선정 등을 관리하고, 수출지원기관(aT)과 업체 간 쌍방향 소통의 매개가 되는 정보시스템('11.10월 구축)

- 시장개척·바이어 발굴을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

* 북미·유럽·중화권 등 권역별 대표박람회에 한국관 구성·운영('12년 총 38회)

- 해외 소비자 대상 판촉행사 지원 및 대형유통매장 입점 등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대 지원

라 외식산업 진흥 및 한식세계화

- ◇ 외식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 및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
- ◇ 한식 세계화를 농식품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정착

□ 외식산업 경영효율화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

- 외식업체 시설·경영 표준화 모델개발 및 컨설팅·마케팅 등 지원
 - 지역별로 대학·연구소 등을 외식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
- 외식프랜차이즈 평가(10월)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갖춘 외식업체 육성
- 현지 정보제공, 바이어소개, 법률상담, 해외박람회 참여지원 등을 통해 우수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

* 해외진출 계획: ('11) 65개업체/1,322개 점포 → ('17 목표) 100/5,000

□ 외식업체와 산지간 연계 강화로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

- 지역별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(4월)
 - 식품안전·위생 시설 인프라가 구비된 유망 외식업 지구에 경영 개선, 조리 교육, 홍보사업 등을 중점 지원
- *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 30% 이상, ('12) 최대 10개소 → ('17) 60(연간 10개소)
- 국내산 식재료 사용 유도 및 식재료 규격 표준화로 외식업체의 우수 식재료 직거래 및 공동 구매 활성화

□ 외식산업 현황을 제공하는 '한국외식 경기지수' 조사발표(분기별)

- 외식업체의 연매출, 종업원 수, 국내산 식재료 비중 정보를 조사하고, 3개월 후의 외식경기 예측 등 정보제공

□ **한식세계화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과 선택·집중 전략으로 내실화**

○ **시장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진출지역을 단계별로 확대**

- 지역별 정보·전략조사 및 상표권위생·통관 등의 가이드북 제공

* 진출지역 : ('10) 북미, 아시아 → ('12) 유럽, 호주 → ('14) 중동, 러시아

○ **해외 인지도가 높은 단품 위주의 상품개발 등 지원 강화**

* 5대 전략메뉴 : 비빔밥, 불고기, 갈비, 잡채, 전

○ **한식과 식문화에 대한 R&D 지원 및 국제문화유산 등재 참여**

- 고 조리서, 북한전통음식, 식생활 풍속서 등 약 900권 DB화

- 한식의 현지 적응성 제고를 위한 메뉴 개발 및 기능성 연구 확대

- 비빔밥 등 한식과 식문화의 국제문화유산 등재 (문화재청 협조)

○ **해외한식당협의체를 확대('11 : 9개소 → '17 : 20), 해외 거점으로 활용**

- 국내업체와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교두보 역할 및 식재료 직거래 참여

- 한식메뉴서비스 등 경영 컨설팅과 조리교육, 표준 메뉴판 제공 등 지원

□ **국내외 한식 홍보강화 및 한식 세계화 사업성과 지수개발**

○ **마드리드퓨전 주빈국 참가(1월)를 통해 한식의 우수성을 국제 사회에 전파하고, 한류(K-pop 등)를 활용한 음식·문화 동반 진출**

* 마드리드 퓨전('12.1.24~26) : '02년 호세 카를로스 카펠(스페인)이 창립한 전세계 요리사들의 행사로 밀라노, 뉴욕 등 요리 트렌드를 리드

○ **한식세계화 성과지수 개발(3월)로 성과평가 및 사업개선 추진**

- 국내외·국가간 한식인지도 비교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점검

2. 활력창출 · 생활안정

1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

가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업 육성

◇ 향토자원 발굴 및 산업화 촉진으로 농산업의 부가가치 확대

□ 지역의 차별화된 향토자원을 발굴,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

○ 특화작목 재배·가공, 마케팅, 유통 등 융복합 산업화 지원

* 충북 보은(황토대추 명품화) : R&D지원, 가공제품업체 집적(제약차기능성식품 생활용품 등)으로 제품개발 활성화 및 수출 확대('09 : 1,428백만불 → '10 : 2,554)

○ 포괄보조사업 지원체계('10년 도입)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'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모델' 개발·보급(11월)

-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제시

○ '농어촌 산업박람회' 개최(6월)로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 확보

* 박람회 전 지자체별 유통품평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및 유통업체 기호에 맞는 스타상품 발굴, 농어촌기업과 유통업체간 계약체결 유도

□ 농어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증장기 발전방안 마련(12월)

○ 향토산업 육성사업(완료75, 진행58)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

* 향토산업 육성 추진성과('07 ~ '11년)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(2 ~ 10월)

○ 향토자원 및 농어촌기업과 연계된 특화단지 조성방안 마련

* 기존 농공단지 가동을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개·보수는 지속 지원

나 마을단위 공동 경영체 육성

◇ 마을단위 공동 사업 활성화로 농어촌 일자리·소득창출

◦ 마을단위 경영체 : ('11) 1,400개 → ('13) 3,000 → ('15) 5,000

-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업체(54개소) 선정, 제품·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등 활동비 지원(개소당 25백만원)
- 역량강화 교육워크숍컨설팅 지원 및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
-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'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' 도입(6월) 등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
-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조직, 인재육성 등 '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 종합계획' 수립(10월)

-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내실화 및 성공사례 확산
- 공동체 유형별(자원관리·질서유지·경영개선) 구분관리 및 활동 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지급(등급별 50~300백만원)
 - * 참여 공동체 총조사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마련 연구(2~10월)
- 가공·유통·관광 등 공동체 사업 다각화로 어촌소득 증대
 - *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5개 분야(수산물가공·어촌관광·경영·유통·내수면) 컨설팅 지원(50개소) 및 우수-신규 공동체간 멘토링 지원
-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우수공동체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(10월)

-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지 이용의 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
- 농기계 공동이용 및 공동농작업(농지 단지화, 공동방제, 품종·재배 방법 통일 등)을 통해 생산비 절감, 고소득 작목 재배 등 경쟁력제고 도모
 - * 공동방제를 통해 10a당 쌀 생산비(농약비·유류비) 4,605원(10.4%) 절감
 - * '15년까지 500개의 들녘별경영체를 육성 추진('09~'11년까지 113개소 육성)

다 농어촌 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

◇ 지역별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편리·위생·안전성 등 농어촌 관광의 서비스 질 제고

- 다수 관광객 유입이 가능한 거점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마을단위 관광 인프라의 한계 극복
 - 관광자원이 풍부한 거점지역에 특산물, 향토음식, 전통문화, 자연·생태자원, 경관 등을 활용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
 - * 한방약초공원(산청군), 과일 테마공원(영동군) 등 12개 지구 신규 조성
 - 방앗간, 마을서원, 폐교 등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한 ‘농어촌 문화 공간 활성화 방안’ 마련(9월)
 - 시범사업 지구(6개소)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(4월)
-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농어촌 관광서비스 품질관리 강화
 - 농어촌관광사업등급제 세부시행방안 마련(10월)
 - * ‘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’ 시행규칙 개정 예정(7월)
 - 등급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, 농어촌 관광사업자의 자체적인 수준 향상 노력 유도
 - 농어촌 관광체험마을 주민들의 경영마인드 제고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현장교육·컨설팅 지원(48개소, 1억원)

□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어촌 관광명소를 발굴하여 **맞춤형 여행코스 개발 및 내·외국인 대상 적극적 마케팅 추진**

- 매년 20개소(Rural-20)씩 '14년까지 **대표명소 100개소** 발굴
 - 관광자원의 의미·역사·가치 등 스토리가 있는 홍보·마케팅 추진
- **마을단위 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**(10월)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, 마을 홍보 및 도농교류 활성화
 - * 기획,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 지원(10억원, 축제당 30~50백만원)
- 테마별*로 '가고 싶은 농어촌 마을' 100선 제작·배포(6월)
 - * 농어촌 체험 마을, 워크숍·MT하기 좋은 마을, 외국인도 가보고 싶은 마을
- 스마트폰용 **웰촌사이트(welchon.com) 애플리케이션 개발**(10월)로 농어촌 관광 관련 실시간 정보 및 콘텐츠 제공

□ 농어업·농어촌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**농어촌 체험기회 확대**

-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**1사1촌 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**(3월)
 - 1사1촌 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·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등
-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대응, 초·중등 학생의 농어촌의 가치 습득 및 체험 활성화를 위한 **팜스쿨 및 농어촌유학 활성화**
 - * 팜스쿨 확대 : ('11) 20개교 → ('12) 30(개소당 10백만원 지원)
 - 농어촌체험마을에서 초·중등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창의적인 체험프로그램 개발·보급(9월)
 - 농어촌 유학센터에 교육자재 구입,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을 지원(2억원)하고, 사전 체험을 위한 예비 유학과정 신규 도입

라 우리 농어촌 운동

- ◇ 농어촌 활력창출을 위한 범국민 운동 전개('13년 색깔 있는 마을 3천개 육성, 농어촌 리더 10만 육성, 2만 도·농연대 구성)
- 추진기구 구성, 재능기부자 확보 등 본격적인 운동 추진

- '우리 농어촌 운동' 추진을 위한 중앙지역단위 협의체 구성·운영
 - (중앙) '국민 운동 추진위원회' 구성·운영(7월)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
 -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'삶의질향상특별법' 개정(12월)
 - (지역) 농어촌 현장포럼('11.11월 현재, 11개 구성)을 통해 마을별 발전과제 발굴, 지역별 추진방향 설정 등의 기능 수행
 - 농어촌 마을의 유·무형 자원과 역량을 분석·진단하고 농어촌 현장포럼을 지원하는 현장활동가 육성
 - * 시·군 당 3인 이상의 현장 활동가(420명 수준)를 선정하여 교육 등 추진
- '12년에는 재능기부자 3만명을 확보('11.11월 현재 1만명)하여 농어촌에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발전 및 활력창출 지원
- 유관기관·단체 등에서 추진 중인 국민 참여운동* 및 관련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'우리 농어촌 운동'의 시너지 효과 제고
 - * 농촌사랑범국민운동·농촌희망가꾸기운동(농협), 어촌사랑운동(수협) 등
- '색깔 있는 마을' 육성을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지원 연계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(3월)

2

인력 육성 · 유입 · 지원 체계화

가 정예인력 육성

◇ 농어업·농어촌을 이끌어 갈 신규인력 확보, 전문인력 양성

□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어업계 학교 교육체계 개편

○ 농식품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(12월)

* 농어업법인, 농기계·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(6월)

- 농수산고 창업·취업 비중 확대를 위해 첨단 실습장·장비 지원

* 학교와 연계한 현장실습장 확대(64개소 → 75)

- 선도경영체의 멘토링 지원 대상 확대 : ('11) 10개교 → ('12) 16

- 농수산고 전문교사의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현장 연수 실시

○ 농어업분야 취업·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농·영어 정착과정 운영(11개교)

○ 새로운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한국농수산대 신규학과* 신설 추진

* 신규학과 예시 : 말산업, 어업학과, 임업·조경학과, 전통주 가공과 등

□ 농어업계 학생,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개편

○ 농고·농대 창업상담사 간 네트워크 구축·운영,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 신설 등 창업지원 기능 강화

○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경영 위주에서 현장 실습중심으로 개편(10월~)

- 후계어업경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

○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공제 대상한도 확대(기재부 협의)

- 농산지, 어선 / 2억원 → 농어업시설 포함 / 5억원

○ 창업농 등 젊은 인력에 시설수출 자금 및 농지매입임대 집중 지원

* 30대 이하 농업인 농지 지원면적 비율 : ('10) 9% → ('12) 16%(2,500ha)

□ 농어촌 지역개발·마을발전을 이끌어 나갈 핵심인재 양성

○ 도농교류·농어촌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마을리더 및 주민, 마을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인적역량 강화교육 실시

* 교육과정(예) : 마을공동체 운영, 마을발전계획 수립, 갈등관리, 리더십 등

○ 농어촌 지역개발 및 마을사업 관련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·운영(6월)

□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농식품 교육체계 개편

○ 교육기관 특성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

*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심의·조정하는 농어촌교육심의회(위원장:장관) 설치

○ 교육기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모니터링·컨설팅, 교육운영 표준지침 제정(4월), 우수교육 기관 인증(12월) 추진

○ 농어업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농어업인 교육이력 종합관리를 위한 농어업인력포털 구축(10월)

* 기존 농업교육포털(AgriEDU.net)을 확대 개편

나 고소득 농어업 경영체 육성

◇ 새로운 시장 창출, 경영능력 제고,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핵심 경영체 10만 육성

◦ 매출액 1억원 이상 경영체 : ('10) 3만명 → ('13) 6 → ('15) 10

□ 해외 조사, 국내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신규품목 발굴·육성

○ 망고, 아보카도 등 온난화에 적응 가능한 新소득 작물 도입

* 아보카도, 용과, 석류, 올리브 등 아열대성 작목 선발(누계) : ('12) 18 → ('20) 25

* 고온 적응성 넙치·전복·미역 등 신품종 개발(누계) : ('12) 2 → ('20) 9

○ 품목별 재배방법·재배조건 등에 관한 지침서 작성·보급

* 사례) 새싹채소, 쌈배추, 블루베리, 콜라비, 미니 맛사지 오이

○ 첨단 종묘 배양장 설치, 양식장 적지 조사 등 신규 품목에 대한 사업화 모델 개발·보급

* 서해 5도 해삼섬 특화단지 사업 모델 개발(10월)

□ 동식물 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소득 증대 기여

○ 농림수산자원에서 기능성 신물질 및 의약소재 개발

* 혈압조절(홍국쌀), 뇌경막·치주막 (누에실크), 여드름 치료(봉독)

○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및 산업화 소재 상품화

* 화석연료 대체 연료(해조류, 포플러), 화장품(쌀 전분), 생분해성 봉투(왕겨)

○ 고부가가치 10대 바이오 소재 프로젝트 추진 (예비타당성 조사중)

* 동·식물 미생물 활용, 천연 방부제·항생제 대체재, 바이오 향료 등 개발

□ 수출 확대 및 고소득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

○ '14년까지 20대 전략품목의 수출유도와 산업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

- 현장실습교육장과 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연계하여 수출 전략 품목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 기술교육과정 운영

○ 시설현대화단지, 브랜드경영체 등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자생적 학습조직 100개소 육성

□ 농어업경영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

○ 창업·전업·시설현대화 농어업인 등을 중심으로 핵심 경영체(강소농) 선발·육성(매년 20천호)

- 경영체 경영진단(1~3월) 결과에 따라 영농기술·가공·마케팅 등 기능별 맞춤형 컨설팅 및 성장단계별 역량강화 교육 실시

* 정부 컨설팅지원단 지역담당관(167명)

* 품목별 매뉴얼(80품목) 및 농업경영교재(10종) 발간 및 보급

○ 경영체 자산 및 위험관리를 위한 1:1 금융컨설팅 지원 강화

- 농협의 농업금융컨설팅과 연계하여 농장경영진단, 경영계획 수립, 투자계획의 경제성 분석 및 자금운영계획 수립

- 농어업 경영체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신보 고액 보증심사시스템 개발(7월)

○ 경영혁신, 판매, 해외시장 개척, 농지거래, 시설현대화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별 전담자 지정·운영

다 귀농·귀촌 활성화

- ◇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
 - 귀농·귀촌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‘귀농·귀촌 종합센터’ 확대·재편 운영

□ 도시민 유치·교육·자금지원 등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

-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‘도시민 농어촌 유치 프로그램’ 지원 확대
 - 도시민 농어촌체험 사업, 빈집 임대사업, 융자금 알선, 멘토링 상담, 귀농·귀촌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등
 - * 지원대상 시군 : ('11) 25개 시군 → ('12p) 27
- 권역별(수도권, 광역시, 중소도시 등)·직업별(제대 군인 등)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
 - * 교육과정 : ('11) 16개 기관 / 18개 과정 → ('12) 20 / 25
- 귀촌인의 성공적 농어촌 정착을 위한 영농·영어자금 지원
 - 농지구입, 시설건립, 양식장구입, 어선구입, 주택신축 등 초기 영농·영어기반 마련을 위한 저리융자 지원(융자규모 600억원)
 - * 선도농업인 실습장에서 영농 실습비(840백만원) 신규 지원

□ 귀농·귀촌 관련 정보·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

- 도시민에 귀농·귀촌 관련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‘귀농·귀촌 종합센터’ 확대·재편(9월)

-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(지원 정책, 부동산 정보 등)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

* 귀농·귀촌 관련 농식품부, 지자체, 유관기관 사이트 통합·관리

* '11년에 구축한 '농어촌 빈집 정보 시스템'과 연계하여 대지·농지·교육, 자금 등 도시민 주요 관심정보 추가 제공

-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관심단계에서 정착까지 단계별·맞춤형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

○ 시·군 추천을 받아 성공한 귀농·귀촌인을 현장 멘토로 활용하는 '귀농·귀촌 코디네이터' 교육과정 본격 운영

* 교육과정 : ('11) 1개 과정, 30명(시범사업) → ('12) 2개 과정(120명 내외)

○ 종합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**홍보 강화**

-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귀농·귀촌 프로그램 제작·방송(1~3월)

- 귀농·귀촌 박람회 개최(6월), 우수사례집 제작·배포(12월)

□ 귀농·귀촌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농어촌 주택 공급

○ 도시의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'농어촌 뉴타운' 입주 착수

* 5지구 700세대 : 단양 100세대, 고창 100, 장수 100, 장성 200, 화순 200

- 시범사업('09~'12)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본사업 추진여부 검토

○ 소규모 마을도 신규로 조성할 수 있도록 **전원마을 제도개선** 추진(현행 : 20세대 이상 → 개선 : 10세대 이상)

- '12년에 전원마을 등 신규마을 15개 지구 신규 조성 추진

* '04~'11년간 126지구 추진(완료 5, 건축중 42, 기반정비 34, 준비 45)

3

농어촌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

가 농어촌 삶의 질 개선

◇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는 교육·의료·복지·문화·교통 등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

- 노후·불량주택 개량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

□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등을 위해 ‘삶의 질 계획’ 내실화 추진

○ 농어촌 공공서비스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기준의 항목 및 목표치 수정·보완(10월)

- 농어촌 현실 및 관련사업 추진 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서비스기준 달성도 제고 방안 마련

○ 농어촌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'11년도 개선 대상과제 부처·지자체별 추진현황 점검(4~10월) 및 개선과제 발굴(11월)

- 농어촌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담당자 이해도 제고 및 자체평가를 위한 농어촌영향평가 매뉴얼 보완(6월)

○ ‘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(’10~’14)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지원기관 지정·운영 등 사무국 기능 강화

- 전문지원기관에서 삶의 질 계획 주요 정책과제의 심층평가,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·분석, 농어촌영향평가 등 실시

-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성화 및 사무국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'삶의 질 향상 계획 지원체계 개선방안' 마련(10월)

○ **농어촌 복지·교육·의료·도로·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공모제 및 분야별 토론회 개최(7월)**

- 지역주민,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

□ **농어촌 생활편의 증진 및 친환경 주거여건 조성**

○ **노후·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제도개선**

- 재원 조성 방법 : 국비(80%) + 지방비(20%) → 국비 (100%)
- 지원 대상 주택규모 확대 : 100m² → 150

○ **농어촌의 특성, 정주여건 등을 고려한 친환경·에너지 절감형 주택 표준모델 개발·보급(4~11월)**

- * 농어촌 주택과 건축양식 발굴을 위한 '한국 농어촌 건축 대전' 개최(10월)

○ **농어촌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빈집 6.5천동(100억원) 정비**

○ **환경부와 연계하여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철거 추진**

- * 농어촌 주택(2천동), 염전 소금창고(3천개소), 정부양곡 보관창고(20개소)

○ **농어촌 취약계층을 위한 '농어촌집고쳐주기사업' 확대**

- * 추진 계획 : ('11) 301가구 → ('12p) 375

○ **체계적인 어촌 개발을 위한 권역별 어촌종합개발 추진**

- * '94~'11년까지 180개 개발 완료, '12년 25개(신규 2, 계속 23) 사업 추진

나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

◇ 고령농어업인, 다문화가족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 강화

□ 고령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

○ 농지연금제 및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확대

- 농지연금제 인지도 제고 및 조기정착을 위해 ‘찾아가는 고객센터’ 운영 등 맞춤형 홍보 강화

* 지원규모 : ('11) 농지연금 72억원, 경영이양직불 623억원 → ('12) 190, 659

○ 고령농어업인, 독거노인 등의 공동취사를 위해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('11 : 480개소 → '12 : 930)

○ 질병·사고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(10일), 고령·장애·기초생활수급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(12일) 지속

□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및 의료서비스 제공확대를 위한 사회보험지원 강화

○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미가입자 발굴 및 이장회의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 강화

*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: ('11) 870억원(219천명) → ('12) 924(230천명)

○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및 소득·재산 등에 따른 보험료 차등 지원 등 제도개선 추진

*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: ('11) 1,544억원 → ('12) 1,626

□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및 농어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

- 보육시설이 없는 읍·면에 연차별로 소규모 국·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 지급

* 보육시설 확충(10개소, 9억원), 보육교사 특별수당(37천명, 237억원)

-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(무이자 융자) 지원 확대

* 장학금 지원액(인원) : ('11) 92억원 (3,984명) → ('12p) 145 (8천여명)

- 방송대, 사이버대 진학생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상을 원격대학까지 확대

□ 결혼이민 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농어촌 정착 지원 강화

- 지역농협을 활용, 정착초기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, 한국문화 등 기초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'다문화여성대학' 운영(400명)

- 한국 국적 취득 준비를 위한 '사회통합 프로그램' 운영(500명)

* 교육 수료시 국적취득을 위한 필기시험, 면접시험 등 면제 혜택

- 결혼이민여성을 정착단계에 따라 기초 영농교육(500명), 멘토와 연계한 1:1 맞춤형 영농교육(600명) 등으로 구분 실시

- 결혼이민여성 영농교육 수료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'모국방문' 지원(200호)

-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'농어촌정착지원과정' 운영(1,200명)

다 체계적인 농어촌 지역개발

◇ ‘先 계획後 개발’ 원칙에 따라 계획적으로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□ 농어촌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체계 구축

○ 농어촌 개발 관련 시·군 단위 의무계획*을 ‘(가칭)농어촌 발전 기본계획’으로 통합(‘농어촌정비법’ 개정, 12월)

* 농어촌정비 종합계획, 농산어촌 종합개발계획, 생활환경정비계획, 농어촌 경관관리 계획, 농어촌산업 육성 계획, 정주권개발 계획 등

- 농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모델 개발을 위해 전문연구기관 및 참여 의향이 있는 시·군과 공동연구 추진(2~12월)

○ 마을·권역 단위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농어촌 정비계획제도* 도입방안 마련(10월)

* 신규개발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제도(국토계획법)를 보완하여 농어촌 지역 개발에 적합한 정비 중심의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제도

- 마을정비구역을 농어촌정비구역으로 확대·개편하고, 유형별 농어촌정비계획 수립 지침 마련(10월)

- 농어촌정비계획은 지역개발·산업화 등을 포괄하여 수립하고, 해당 구역에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(10월)

○ 지역주민 간 협약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 농어촌 지역의 토지 이용을 관리하는 제도 도입방안 마련(12월)

- 농어촌 경관 개선·보전을 위해 **경관계획 수립 의무화** 등 추진
 - '12년 **'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'**을 착수하는 일부 시·군 대상으로 **경관계획 수립 시범사업** 도입
 -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 세부지침 마련·시달(5월)
 - * 농어촌 마을의 경관 관리 의욕 제고를 위해 우수 마을 선발·홍보 및 **'농어촌 경관 사진전'** 개최(5~10월)
 - 농어촌정비계획 및 경관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할 **총괄계획가(master planner) 제도** 시범 운용
- 농어업·농어촌 문화보전·계승 및 지역정체성 확보 등을 위해 **'(가칭)농어업 유산제도'** 도입 추진
 - 농어업 유산 범위, 지정 기준·절차, 사후 관리·활용 방안 등 **농어업 유산제도 도입 방안** 마련(3월)
 - 지자체(시·군)에서 신청한 향토자원에 대해 **전문가 평가 및 심의**를 거쳐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(7월)
 - 농어업 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**법적 근거** 마련 검토
- 농산어촌 부존자원의 부가가치 제고, 정주여건의 개선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**포괄보조금 운영 내실화** 추진
 - 포괄보조금사업의 효과 제고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·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·도별 1개소 이상 **집행점검** 실시(6~9월)
 - 농산어촌개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**TV 기획홍보** 실시(7월)

4

투자 활성화

가 농식품모태펀드 확대

◇ 민·관 합작투자 형태의 농식품투자조합의 확대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지원

□ 농식품투자조합 펀드조성 및 투자촉진 활동 강화

- '12년에 5개, 1,000억원 규모의 농식품 투자조합 추가 결성
(누계 : 총 16개 투자조합, 3,300억원)
- 사업성, 성공 가능성이 높은 농림축산업, 식품산업 등 집중 투자
 - * '12년 '농식품모태펀드' 운용계획 수립(1월),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(3월), 운용사(업무집행조합원) 선정(4월) 및 투자조합 결성(7월 이후)
- 투자조합 결성 2년 내에 결성액의 40% 이상 투자달성 추진
 - 투자설명회 공동운영 등을 위한 지자체와 투자협력 MOU 체결(5월)
 - 투자로드쇼(5월) 및 지역별 순회 투자설명회(9~10월)

□ 농식품경영체 교육·컨설팅 등 경영지원 기능 강화

- 우수 농식품경영체 발굴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범사업 실시(4월)
 - * 농식품경영체 인큐베이팅 사업 모집공고 후 10개 경영체 선정·지원
- '농식품 투자아카데미*' 과정 개설(6월)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
 - * 투자관리전문기관 주관 연 2회(주말 4주, 32시간) 교육 실시

나 어항·어촌 인프라 구축

◇ 어항기능 다양화, 어촌관광활성화로 어촌경제 활력증진

□ 수산업과 해양관광,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어항개발

- 수산물 생산 및 관광·레저 기능 등을 겸비한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(4개항) 추진(209억원)

* '04~'13년까지 13개항 추진 중('11년까지 8개항, '12년 3개항 완공)

- 이용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 및 정비사업 지속 추진

* '12년 국가어항 28개항 1,301억원(기본사업 9개항, 정비사업 19개항)

□ 어촌·어항을 연계한 맞춤형 어촌관광개발모델 개발

- 어항주변을 관광시설로 정비하는 어촌·어항복합공간(7개소) 및 어촌형관광단지(11개소) 조성

□ 2단계('12~'14년)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기존 어촌체험마을의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

- '12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8개소 추진(28억원)

* '01년부터 전국 141개 '어촌체험마을' 조성중('11년까지 107개소 완료)

-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정기 운영실태 평가(성공·발전가능·미흡 마을)를 통해 부실마을 퇴출 등 관리 강화

* 105개 마을 중 1차('10.8) 7개 마을 퇴출, 2차('11.8) 8개 마을 퇴출

다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

◇ 간척지 이용 종합계획 수립 및 간척지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 개선

-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
 - 간척지 실태조사(4~9월) 및 ‘간척지 이용 종합계획’ 수립(12월)
 - 대규모 농어업회사(영산강지구) 육성에 필요한 전기시설(18천kw, 48억원)을 설치하고, 제염대책 및 기반시설 지원방안 강구(9월)
 - '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(화옹지구, 15ha)을 완료하고, 농식품 수출전문 시범단지로 지정·운영
 - * '11년 기반시설 완료, 유리온실(10ha) 조성 완료('12.11월)

- 새만금 지역 내부개발로 농업용지 조성(8,570ha) 추진
 - 농업용지조성 5공구 1,513ha(대규모농어업회사법인 용지 700ha 포함) 기반조성공사 착수('12.9월, '15년 완료)
 - 잔여지역은 '13년 기본계획 수립, '15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추진

- 쌀 수급조절을 위해 타작물 재배 유도정책을 지속 추진하되,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임대정책 차별화
 -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자율영농구역(침수지역)과 타작물영농구역(침수안전지역)으로 구분, 구역별 차별화된 작물재배
 - 자율영농구역 : 임차인 경합시 타작물 신청자 우선계약 폐지
 - 타작물영농구역 : 임차인 경합시 타작물 신청자 우선계약
 - 타작물 임대기간은 5년, 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수도작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되 '14년 재검토

3. 소득안정 · 위험관리

1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

가 직불제 확충 및 내실화

◇ 직불제 확충 및 제도개선을 통한 농어가 소득지원 강화

- (신규도입) 밭농업 및 조건불리 수산직불제
- (제도개선) 조건불리, 경관보전 및 친환경농업직불제

□ (밭농업직불제)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식량확보를 위해 도입

○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유지·증가가 필요한 품목 대상

○ 지급단가는 ha당 40만원으로 쌀 직불금(평균 70만원/ha)보다 낮은 수준 지원

○ ‘밭농업 직불제’ 신규 도입을 위해 관련규정 마련 및 직불금 집행·관리 등 이행점검체계 구축(5월)

-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·규칙 개정

- 작물별 재배시기를 고려하여 연 2~3회 재배여부를 현장점검하되, 농업경영체 등록정보, 농지원부 등을 활용하여 이행점검 실시

□ (수산직불제) 조건불리지역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도입

- 육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조건불리지역 도서내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
- (농가소득안정직불제) 도상연습('10~'12년)을 지속하면서 밭농업 직불제 도입 등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방향 재검토
 - 3차 도상연습(5~12월) 확대 실시 (2차 19개 + 15개 내외, 44개 읍면, 1만호)
 - * '11년 도상연습(19개 품목) : 쌀, 한우, 콩, 고추, 마늘, 사과, 보리, 감자 등
- (조건불리지역직불제)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지역('12~'16년) 재선정
 - * 대상 법정리 : ('11년) 3,137개, 100천ha → ('12년p) 약 3,540개, 109천ha
- (경관보전직불제) 실질적인 경관개선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체계 개선(1월)
 - 경관효과를 고려, 경관 전문가가 사업대상지를 사전심사 선정
 - 직불금 지급방식 단일화(2회 → 1), 경관작물 재배 이행조건 강화(주기적 점검을 통해 작물재배 증빙자료 구비) 등
 - * 준경관 작물 중 피종시와 개화시 2회로 나누어 집행하는 직불금을 개화시 일시 지급
- (친환경농업직불제)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추진
 - 유기·무농약 인증 직불금 지급단가를 50% 수준 인상
 - * 논 : (유기) 392천원/ha → 600, (무농약) 307천원/ha → 400
 - * 밭 : (유기) 794천원/ha → 1,200, (무농약) 674천원/ha → 1,000
 - 유기인증 직불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

나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 지원 강화

◇ 농어업재해보험, 농어업인 재해공제 지원확대 등 재해 대비 위험관리 내실화로 농어가 경영안정 강화

□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·시행지역·보장재해 확대

○ 대상품목('11 : 50개 → '12 : 61)을 확대하고, 일부 시범품목(7개)의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(본사업, '11 : 26개 → '12 : 33)

* '12년 대상품목(61개) : (농작물) 35품목, (가축) 16축종, (양식수산물) 10어종

* 전국확대 추가 품목(잠정, 7개) : 밤, 벼, 고구마, 옥수수, 마늘, 매실, 토끼

-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해상어류에서 내수면어종(뱀장어, 송어류 등)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(12월)

○ 특정재해(태풍우박집중호우동상해) 보장에서 연차적으로 모든 재해(설해일조량조수해 등)를 포함하는 **종합위험방식**으로 전환 검토(과수 5개 품목)

* ('13) 뽕은감 → ('14) 단감 → ('15) 사과, 배, 감귤

□ 농어업인 재해공제 보상수준 확대 및 보상수준 다양화

* 사망시 공제금 : ('11) 농업인 50~70백만원/수산인 25~45백만원 → ('12) 50~80/25~60

□ 어업인 재해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

○ 높은 사고율로 실손보상특약 가입이 제한('06.2)되는 선외기(船外機)의 어선보험 실손보상특약 가입 허용 추진(2월)

○ 어선원보험 직업재활급여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(9월)

다 농기계 임대·은행사업 활성화

◇ 농기계 임대·은행사업 간 연계 강화로 농업인 편의성 제고 및 농기계 이용 효율화 도모

- 농기계 임대사업(정부)을 확대하여 발작물 생산 노동력 절감
 - 발작물용 임대사업소를 25개소 추가 설치('11년까지 220개소)
 - * 발 농작업 임대사업 비중 : ('11) 18% → ('12) 25 → ('15) 50
 - 고추·마늘 전용 임대사업소를 5개소 신규 지원하여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자급률 제고('17년까지 38개 주산지 전체 지원)
 - * 고추·마늘 임대사업소(누계) : ('12) 5개소 → ('15) 20 → ('17) 38
- 농기계 은행사업(농협)은 영세·고령농의 논 농작업 대행면적 확대
 - 경운·이앙·수확 중심의 현 체제에서 육묘·방제·땃짚결속 등을 추가하여 연중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
 - * 농작업 대행면적 : ('11) 130천ha(벼 재배면적의 15%) → ('12) 170(20)
 - 농작업을 직접 대행하는 직영조합을 확대하여 영세·고령농가 등 취약농가와 산간지 등 한계농지 위주로 농작업 대행 추진
 - * 직영조합(누계) : ('11) 70개소 → ('12) 120 → ('15) 200
- 지자체 임대사업과 농협 은행사업의 연계 강화로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
 - 통합정보시스템, 콜센터 운영으로 정보공유 및 예약배달서비스 제공
 - * 현재는 논밭 농기계를 동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을 모두 방문해야 하지만, 내년부터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희망 농기계의 임대 가능여부 확인 및 임대 예약 가능

2

동물 질병방역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

가 구제역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

◇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백신접종, 일제소독·예찰, 국경 검역 강화 및 유사시 신속 초동대응 체계 구축

-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(5~6월, 11~12월) 및 새로 태어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수시접종을 차질없이 실시
 - 3종 혼합백신(O+ A+ Asia1형) 공급(연간 35백만두) 및 자가접종 - 소 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 동원 접종 지원(159천호, 연간 130억원)
 - 백신접종 독려를 위해 지자체장을 포함한 농가별 백신담당 공무원 실명제 운영(29천명), 월 1회 이상 농장방문 점검
 - 혈청검사 확대로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 : ('11) 31천마리 → ('12) 102
 - 전국 백신 접종상황 점검·독려 및 취약지역 일제검사
- 일제소독·예찰활동 실시 및 유사시 초동대응체계 확립
 - 매주 수요일 농가축산작업장 등 일제소독 및 방역본부 전화 예찰요원(500명)을 활용, 모든 농가 예찰활동 실시(월 2회 이상, 63억원) - 소규모 농가(129천호)에 대해 농협 소독전담반(400명)이 연중 소독(152억원)
 - 연 2회(6월, 10월) 가상방역훈련(CPX) 실시 및 상시 방역기구 운영 - 위험기간 중 모든 방역기관에 상황실 운영 및 시·군별 '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(13천명)' 편성·운영

-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연계, **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도입**(’12년)
 - 가축전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시 축산관련차량 등의 농장 출입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역학 추적에 활용
 - * 미등록시 또는 무선인식장치 미장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, 운전자 등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**범국가적 디지털 가축방역체계(KAHIS) 구축**(’12.10월)으로 예방·예찰 과학화와 **가축질병 진단·통제기능 강화**
 - **전산시스템**을 활용하여 민·관 가축방역기관간 가축전염병 발생 등에 대한 유기적이고 **통합적인 정보 공유·처리 시스템** 구축
 - *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,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) : 가축질병 예방·예찰·진단·종합통제·사후관리 및 유전자변이분석, AI예측시뮬레이션 등 가능

- **축산관계자 신고·소독대상 확대 등 국경검역 강화**
 - **대상확대** : 축산인(86천명)→축산관계자(608천명), 국민(필요시)
 - * 축산관계자 : 축산인, 수의사, 가축인공수정사, 사료판매업자, 원유수집·운반자 등
 - **구제역 유입경로별 차단검역 철저**(위험노선 탐지권 집중 투입 등)

- **지자체 및 농가의 자율 방역체계 확립 및 방역의식 고취**
 - 방역미흡 지자체 불이익 조치 및 지자체 **매몰보상금 20% 분담**
 -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 구제역 발생시 **보상금 최고 80% 감액**
 - **백신 미실시 농가 적발, 과태료 처분 및 집중관리**
 - 농가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**백신비용 일부 부담**
 - (’11) 무상 → (’12) 전업규모(소 50두, 돼지 1,000두) 50% 자부담

나 AI 방역 및 수산생물 질병관리 강화

- ◇ 상시 방역체계로 AI 재발 방지 및 초동대응 강화
- ◇ 방역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선진화된 수산생물질병방역시스템 정착

□ (AI) 농가예찰·소독활동 강화 및 농가 방역의식 고취

- 재발위험이 높은 36개 시·군의 사육농가 예찰 확대, 철새 도래지 점검 및 주변 농가·도로 소독 강화(특별대책기간 : '11.10~'12.4월)
 - * 예찰 : 매주 1회 전화 → 3일, 월 1회 임상시험 → 2회 ** 소독 : 주 1회 → 2
 - * 야생조류 포획검사 : 2천수 → 2.7, 분변검사 : 25천점 → 30
- 주기적·선제적인 농가 방역수칙 교육·홍보 추진
 - * (생산자단체, 농협 등) 반기별 순회 교육 및 특별대책 기간 중 월 1회 이상 교육, (지자체) 하절기(5~9월) 중 관련자 대상 워크숍 개최, 권역별 집합교육 등
- 발생시 조기 근절을 위한 초동방역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
 - 특별대책기간 이전 지자체, 방역기관 등 가상 방역훈련(CPX) 실시(10월)

□ (수산생물) 종합적인 질병관리체계 구축 및 방역 인프라 확충

- 질병관리 대상을 수산동물에서 수산생물로 확대('수산동물질병관리법' 개정, '11.7월)
- 양식 주산지별 전문 방역센터 확대 설치·운영 및 질병진단·실험장비 확보(전자현미경 등 12종, 15억원)
 - * ('10) 2개소(동해, 서해) → ('11) 1(중앙) → ('12) 2(남동해, 제주)
- 수산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확대('11 : 13억원 → '12 : 14)

다 자연재해 사전대응 강화

- ◇ 내재해형 농어업시설 보급 확대, 수리시설 재해대비 능력 강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영농·영어기반 확충
- ◇ 산사태 예측정보 강화 및 선제적 산불예방으로 피해 최소화

□ 내재해형 농업시설 지원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

- 폭설, 강풍, 호우 등에 대비한 내재해형 시설보급 확대

* 내재해형 원예·축사시설 지원 : ('11) 1,692억원 → ('12) 5,499

- 여름(태풍·호우), 겨울철(폭설) 자연재해 예방·신속복구 추진

* 농작물시설 관리요령 지도·홍보, 재해상황실 운영, 응급복구, 재해복구비 지원 등

□ 집중 호우 등 최근 강우패턴 변화에 대응한 배수개선, 수리시설 보수·보강 및 지진 대책 추진

-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 및 노후 수리시설 보수·보강 등을 위해 716개 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 추진

-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 24천ha('12준공 4.2) 및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농촌용수개발 34천ha('12준공 2.1) 시행

- 최근 강우 패턴분석과 수리시설 재해대비 능력조사결과(3월)를 반영, '중장기 수리시설 보수·보강계획' 수립(6월)

* 저수지, 양배수장 및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방조제 등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

- 내진 특등급 이상 규모 저수지 15개소 '지진계측기' 설치 완료(12월)

* 지진계측기 설치(2천만톤 이상) : ('10년까지) 3개소 → ('11) 4 → ('12) 8

- 집중호우, 가뭄 등에 대비, 뚝 높이기 대상 저수지(113개소)에 자동수위 계측기 설치

□ 해수면 상승과 태풍 강도 증가에 따른 어항시설 안전 강화

- 어항시설의 안전성 평가결과, 취약시설에 대해 보수·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수보강 추진('14~'20)

* 안전성 평가 어항(총 81개항) : ('10) 13개항 → ('11) 51 → ('12) 17

□ 산사태 예측정보 강화 및 위험지 등을 생활권 중심개편

- 토석류 위험지도 제작·보급 등을 통해 산사태 위험지를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·개편(12월)

* 토석류 위험지도 제작 : ('11) 3개소(인제·평창·봉화) → ('12) 전국 확대

- 사방댐(695개)과 계류보전사업(416km) 등 사방사업을 주택·건물 등 주거지역 인근 산사태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

*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매수교환 및 수용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예방 활동 강화

- 산사태 정보체계 구축 및 취약지 지정관리 등 종합적인 산사태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

□ 선제적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

- 현장밀착형 감시역량 극대화로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 강화

-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용기간 연장(120일→150), 산불감시원의 봄철 집중 고용(70%→80) 등 예방활동 강화

- 산불진화 능력 제고를 위한 영상전송 시스템 시범운영('12년 2대)

- 기계화 진화장비·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광역산불진화단 운영(6개, 2~5월)

- 평상시 관내 진화지원,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은 전국권역 지원

가 FTA협상 대응

◇ 국가별·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FTA 전략추진으로
농수산업의 민감성 보호를 통한 개방부담 완화

- FTA 상대국별 농어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개방수준을
조절하되, 우리 농수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의 기회로 활용
 - (미국) 관련법률 개정 및 보완대책 추진 등 이행준비에 만전
 - (호주·콜롬비아) 주요 품목(쇠고기 등)의 양허는 협상의 이익
균형 등을 고려하되, 최종 타결 가능성에도 대비
 - * 쇠고기, 낙농품 등에 대하여, 한·미 FTA 수준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 중
 - (중국) 농어업 등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본
협상 개시에 대비하여 사전 대비체계 구축
 - 품목별로 영향 추정 및 분야별 제도분석 등을 통해 대응책 마련하되,
중국시장의 잠재력을 감안하여 농식품의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
 - * 우리나라 농수산물 교역액(317억불)중 중국이 16.1% 차지('10년, 51억불)
 - 공동연구가 완료 또는 진행중인 아시아 국가(한·중·일, 베트남, 인니)
와의 FTA 협상 개시 및 캐나다, 터키 등과의 본격 협상 대비
 - 다각적 협력 강화를 통해 신규 시장 확대 및 자원 거점 확보
- 농어민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공감대 형성 노력을
통해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

나 FTA 보완대책 후속조치

◇ EU,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비준·발효에 대응하여 FTA 국내보완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

□ FTA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법령 정비

○ 피해보전직불제 시행을 위한 ‘FTA특별법’ 하위법령 정비(3월)

- 품목별 지급한도 설정 : 법인 5,000만원, 개인 3,500만원 범위 내

○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, 축산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

등 세제 지원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(관계부처 협의)

* ‘조세특례제한법’, ‘소득세법 시행령’ 등

□ 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

‘FTA이행 지원센터’ 운영(2월 ~ , 10억원)

○ 지원센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(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) 중 지정('12.1월)

- FTA협정과 관련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상담·안내

- FTA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·분석, 업무 수행

□ 지자체,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FTA 보완대책 홍보 지속

○ 농수산물식품연수원 교육 과정 신설, 지역 설명회 개최 등

다 DDA협상 대응

◇ 2012년 새로운 작업방향에 따른 논의에 대비, 주요쟁점별 입장 재검토 및 양허방향에 대비

- DDA 협상이 주요국간 입장차이로 교착상태이나 '12년에는 새로운 작업방향 설정을 통해 협상이 재개·활성화될 전망
 - 제8차 WTO 각료회의('11.12월)계기에 마련된 향후 작업방향 및 협상일정에 따른 농업·수산업 협상 진전 예상
- 향후 새로운 DDA 세부원칙 논의 대응을 위해 주요쟁점별 우리 입장을 재검토하고, 협상타결 후 단계도 철저히 대비
 - 논의방향에 따른 품목별 우선순위 및 민감도 분석을 통해 양허방향에 대해 지속적 검토·대비
 - 공조그룹(G33, G10)과의 특별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주요 이슈 논의 대응
- 특히, 수산보조금은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응
 - 금지보조금 최소화를 위해 일본, EU 등 입장유사국과의 공조하에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
 - 향후 협상타결에 대비, 국내 수산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추진

4. 안전식품 · 안정공급

1 안전 농식품 공급

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강화

◇ GAP·HACCP 등 사전예방체계를 내실화하고, 방사능·중금속 등 잠재적 위해요소와 수입식품 감시 강화

□ 농산물우수관리제도(GAP) 활성화 추진

- 농협 공동선별출하회 등 생산자조직을 GAP인증조직으로 육성
 - 생산자조직에 대해 GAP인증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병행
 - * GAP참여농가 : ('10) 34,421농가 → ('11) 36천 농가 → ('12) 40
- 농가 부담경감 및 GAP인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'품목별 GAP인증심사기준' 마련('농산물우수관리규정' 개정, '12년 하반기)

□ 축산물의 모든 유통단계로 HACCP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 적용 확대

- 브랜드 축산물을 중심으로 농장~판매 모든 과정의 일괄 HACCP 적용체제 구축('12년 10개 시·군 축산브랜드 대상)
 - 시·군별 브랜드 경영체를 활용한 HACCP 적용 축산물 육성 및 모든 단계 HACCP 적용제품의 차별화된 표시제 도입
- 농장·중소형 업소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'HACCP 표준 모델' 개발·보급(12월)

□ 새로운 위해요인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과학적 위험평가 및 관리 강화

- 품목별로 분산되어 있는 위험평가 기능의 통합·조정
 - ‘농식품 위험평가 작업반’을 구성, 각 단계별 위해요소의 예측 및 조기 대응 체제 구축(6월)
- 내장을 함께 섭취하는 **두족류**(낙지 등) 및 **갑각류**(꽃게 등)에 대한 중금속 위험평가 연구 및 기준 설정 검토(12월)
 - 주요 품종*(10개)에 대한 중금속(9종) 모니터링 연구 추진(6월)
 - * 대상 : 오징어, 낙지, 문어, 꼴뚜기, 주꾸미, 대게, 홍게, 꽃게, 대하, 보리새우
- **방사능** 누출사고에 대비한 **위기관리 체계** 구축·운영
 - 일본 및 태평양 연안국가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지속 및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
 - * 방사능 분석장비(36대) 및 인력(8명) 추가 확보('12년)

□ 수입 축·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입위험 분석체계 확립

- 수출국의 위생·관리시스템 평가를 위한 법적근거 및 세부 기준 마련(‘축산물위생관리법’ 개정, 12월)
 - * (현행) 수입위험평가지, 가축질병 및 위생제도 평가 병행 실시 → (개선) 가축질병 위험평가 이외에 상대국 위생관리 시스템 평가 체계 마련
-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약정 체결 확대, 2중 검사체계 구축(12월)
 - * ('11) 5개국(태국중국인나베트남러시아) 6개 약정 → ('12) 6개국(대만), 7개 약정
- 대미 굴 수출을 위해 FDA와 ‘한미 패류위생양해각서’ 갱신(6월)

나 취약분야 위생관리 강화

◇ 도축장·중금속 오염지역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관심분야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체계 개편

□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및 기준 강화

○ 오염원 제거에 중점을 둔 도축장 설비 및 위생 관리기준 정비

- 시설·장비 등의 위생관리 기준 및 생고기·부산물에 대한 검사·위생관리 지침 보완(‘축산물위생관리법’ 시행규칙 개정, 11월)

○ 위생규정 위반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강화(11월)

* 허가취소(1년 내 4회 → 3회) 및 과태료 상향 조정(300~500만원 → 500~700만원) 등

□ 폐광산·산업단지 등 중금속 오염우려지역 집중 관리

○ 관계부처(환경·지경부)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금속 오염 정보 공유를 위한 GIS 기반 통합시스템 구축(12월)

○ 폐광산(반경 2km → 6) 및 기타오염우려지역(산업단지, 매립장 등)에 대한 농지·농산물 중금속 조사 강화(’11 : 4,800건 → ’12 : 5,600)

□ 신규 위해요소 및 소비자 관심분야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

○ 잔류농약·항생제 중심의 조사(’10년 전체조사물량의 93.5%)에서 방사능 핵종·병원성 미생물 등 신규 위해물질 조사 확대

* ’12년 방사능 조사(400건→1,500), 유해미생물 조사(500건→1,000건 이상) 단계적 확대

○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학교급식, 인증농식품(친환경, GAP, HACCP)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강화

다 소비자 참여 및 소통 강화

◇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식품소비 환경 조성

□ ‘농식품안전 6자 협력 체계’ 구축으로 식품안전 소통 강화

* 소비자·생산자·전문가(학회)·식품업계·언론·정부

○ 현장방문, 협력사업 등 이해관계자 간 ‘교류 프로그램’ 운영(매분기)

○ 정책대상별 맞춤형 식품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

- 어린이,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, 건강식단 및 유해안전정보 등 제작(연2회)

* 실시간 교류를 위한 SNS 및 스마트 매체 활용 교류 서비스 개발(3월)

□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의 단계적 개편 지속 추진

○ 민간인증기관 사후관리 계획 수립(2월), 지정 심사 매뉴얼 마련(8월) 등 인증기관 지정·관리기준 국제화(ISO 등) 및 사후관리 강화

○ 인증 농식품 및 공통 표지(logo)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 단체·생산자단체·대형유통업체 등과 공동 홍보 추진

□ 소비자를 위한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

○ 음식점 원산지표시 기재 시, 글자크기 및 표시 위치 등 표준화(6월)

* 글자 크기 : (현행) 음식명 글자 크기의 1/2 이상 → (개선) 음식명 크기와 동일

○ 대중적 수요가 높은 가공품(커피류, 차류 등)의 원산지 표시 확대 추진(농수산물원산지표시 요령 개정, 10월)

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

◇ 친환경 농업·축산업·어업의 생산 기반조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

□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·유통 기반 구축

○ 개별농가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**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** ('12년 : 신규 7개소/누계 41) 등으로 규모화

-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,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등 지원 및 기술지원단 운영
- 환경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해 단지 내 양분총량을 관리
- *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급

○ **유기질비료** 지원을 확대('11 : 250만톤 → '12 : 270)하고 **맞춤형 화학비료** 지원을 축소('11 : 67만톤 → '12 : 50)하여 지력증진 도모

- * '12년 화학비료 사용 목표량은 218kg/ha으로 '10년(232kg/ha) 대비 6% 감축
- 겨울철 유희농경지 녹비작물 재배 확대('11 : 103천ha → '12 : 115)
- 친환경 실천의지와 필요성이 높은 친환경인증농가, 친환경단지 등에 친환경비료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증대
- * 친환경비료 품질향상을 위해 퇴비 품질등급제도 운영을 내실화

○ 국내 최초로 준공('12.8월) 예정인 **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**(경기 광주)의 **효율적 운영방안 마련**(상반기)으로 유통 활성화 도모

- 친환경농산물 취급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토록 운영체제 마련
- * 전남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신규 건립 추진('12 ~ '15년, 295억원)

□ **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**

-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합동, **친환경농산물 유통모니터링** 지속
 - 인증기관별 인증실태, 사후관리실태, 인증시판품 등을 평가 분석
- **재포장취급자 의무인증제** 도입(‘친환경농업육성법’ 개정안 국회 계류 중)
 - 부정유통 개연성이 많은 재포장업체, 인터넷 판매업체 등 집중 점검·단속
 - * 품관원에 20개 단속반(지원별 1~3개)을 편성, 취약시기 테마단속
- **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 인증 및 행정처분 현황** 등을 등록하여 소비자에게 정보제공

□ **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소비 활성화**

- 친환경축산직불제 지원농가 확대 및 지급단가 조정 등 **인센티브 강화 방안 검토**(’12년 연구용역)
 - * 지급단가(현) : (한우) 유기170천원/마리, 무항생제 65, (돼지) 유기16, 무항생제 6, 지급기간: 3년
- **체험형 교육홍보 강화**로 인지도 제고 및 친환경축산물 시장 확대

□ **친환경·안전한 수산물 생산 기반 구축**

- 어장환경 오염 및 수산자원 피해 저감을 위한 **친환경어구 보급**
 - 기존 나일론 어구를 바닷물에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로 전환(’12년 30억원, 350척)
 - 규격부표(고밀도부표) 보급(1백만개) 및 굴폐각 자원화(12.5만톤) 지원
- **수산물이력추적제 확대**를 통해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·공급
 - * 수산물이력추적제 참여업체 : (’10) 1,100개소 → (’11) 1,230 → (’12) 1,400

마 녹색 식생활 교육

◇ ‘녹색식생활’ 운동 2년차를 맞아 인식확산을 넘어 전국민 생활화 정착을 위한 참여 확대

□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 민간 주도 녹색식생활 운동 확산

○ 시·도, 시·군 지자체별 식생활교육네트워크 구성 확대('11 : 16개 시도/10개 시군 → '12 : 16/20) 및 활성화 사업 지원

○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및 농어촌 우수 체험공간 지정 확대

* 교육기관·체험공간 선정을 희망하는 학교·단체, 농어가마을을 대상으로 지정추진('11년도 지정현황 : 교육기관 22개소, 체험공간 72)

○ 학교·가정 내 녹색식생활 체험교육 지원

- 방과후 교실(90개교), 농어촌 체험(25천명), 연구학교(40개교)를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지원하고, 가정식생활수첩 보급(12월, 100만부)

□ ‘녹색 식생활’ 범국민적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

○ ‘제2회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’(7월) 및 지역단위 박람회 개최

- 광역시·제주도 등 7개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, 시군 단위 확대 검토

○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식단 개발·보급 및 홍보강화

* 일본 ‘녹색등 달기 운동’ 등 해외 ‘로컬푸드 운동’ 선진 사례 벤치마킹

○ 트위터·페이스북·블로그 활용, 녹색식생활 스마트폰 앱 개발·보급(4월)

2

협동조합 개혁 및 농수산물 유통개선

가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및 경제사업 활성화

◇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-2지주회사(농협경제금융지주) 체제로 전환(3.2일)

◦ '20년까지 경제지주가 조합 출하물량의 50%이상 책임판매

* 조합 출하대비 중앙회 판매비중 : ('11) 10% → ('12) 14 → ('20) 54

□ 경제부문을 전국단위 판매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하는 구조 정착

○ 농협의 유통·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등 인프라 확충

- '12년 청과도매물류센터 건립(안성센터 기계·설비 설치), 양곡유통센터 착공(안성),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착공(부천) 등 추진

* 투자계획(총 3조 5,899억원) : ('12) 7,791 → ('13~'16) 23,525 → ('17~'20) 4,583

○ 산지의 공선출하회 등 생산자 조직화(쌀 10만호, 원예 10, 축산 1)

○ 경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연차별 사업이관('17년 완료)

- 현행 경제자회사(13개)를 경제지주회사로 통합(3.2일) 하고, 도·소매, 농업용 자재 등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은 5년 내 경제지주로 이관

○ 경제지주-조합간 계열화를 통해 품목별 전국단위 유통시스템 구축

- 사업 완전이관 이전 농협중앙회내 경제조직은 지도·지원기능을 통합·효율화하여 원예·양곡·축산 등 품목별 전문판매조직 체제로 전환

* 쌀 판매회사(조합-중앙회 공동출자), 원예도매전담조직, 축산마케팅조직 등

-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일선조합 지원사업 개선
 -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방안을 제정('12.3월)하여 일선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
 - 배분기준을 명확히 하고, 조합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되던 방식을 조합 판매사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지원체계 변경
 - 조합상호지원자금은 경제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업 이관 일정에 따라 경제자본금으로 단계적 이관(5년 이내)

-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등을 통한 산지유통의 규모화·전문화 촉진
 - 법인 설립은 산지여건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('12년 11개 설립)
 - * ('12) 11개소 → ('13) 14 → ('14) 19 → ('15) 12 → ('16) 19
 - 중앙회 인력 및 자금지원(2,868억원 지분출자)으로 사업기반 마련

- 경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
 - 농협 경제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·평가(연 1회 이상)
 - 농식품부장관 직속 농협경제사업 평가협의회 구성·운영(3월 ~)
 - * 농업인단체 2명, 유통전문가 3, 농식품부 공무원 1, 중앙회 직원 및 조합장 5, 기타 4
 - 평가결과를 농협중앙회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반영 및 경영 지도 등에 필요한 조치 추진

-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합판매사업 확대 등 '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' 마련(12월)

나 수협 경영개선 및 경제사업 활성화

◇ 수협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및 경제사업활성화 본격 추진

-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경영혁신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토대 마련
 - 바젤Ⅲ* 시행에 대비, 중앙회 자립경영 기반정착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(6월)
 - * 바젤Ⅲ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적 은행 감독기준(보통주자본 비율, 기본자본비율, 총자본비율)임
 - 일선수협 재무상태 집중 개선을 위해 경영개선목표 차등 부여(8월) 및 부실예방시스템 구축(12월)
- 협동조합 판매기능 강화 및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‘수협 경제사업활성화 세부실천 계획’ 마련(5월)
 - (중앙회) 자재 공동구매사업 및 전국단위 판매역할 담당
 - 주요품목 매취사업을 확대하고 가격안정기능 강화방안 마련
 - * 수협 매취사업 규모 : ('11) 12만톤 → ('12) 15만톤
 - (일선수협) 제값받고 팔아주는 판매 기능강화를 위한 유통 기반 구축·정비 및 상품화 능력 제고 촉진
 - 중앙회와 연계, 일선수협 수산물연합판매 사업 시범 추진
- 어촌계를 선진적 공동체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(10월)
 - 생산조직에 특화된 사업개발, 어촌계 운영방식 개선 등

다 물가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

◇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비용 감축 및 직거래 등 유통경로 다양화·선진화

【농산물】

□ (관측) 조사기반 정비 및 관측 정확도 평가

-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관측표본 및 모니터 재설계 추진
 - 2010년 농업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조사표본수 등 조정
 - * 시군별 경작면적 규모 증감 및 재배품목 구성비를 고려하여 조사표본 개선
- 관측 운영시스템 및 관측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실시
 - 표본 및 모니터의 응답 충실도, 관측 오차 및 만족도 등 분석
 - 평가결과에 따라 미진 항목 보완, 부실표본·모니터 교체 등 실시

□ (수급안정 시스템) 농협 계약재배 확대 및 수급조절 능력 확충

- 지역농협은 농가와 계약하여 품질관리를 전담하고, 중앙회는 판매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방식을 도입
 - 배추무에 대해 고정가격에 의한 다년계약(3년) 방식을 시범 도입
 - * 계약규모 : ('10) 생산량의 8% → ('11) 12 → ('12) 20
- 수급의 변동성이 높은 노지채소에 대한 재배면적과 작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양념류의 국내산 비축 확대
 - * 국내산 비축율('11→'12, %) : (고추) 0 → 2, (마늘) 1 → 2

□ (도매시장)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, 도매유통 투명성·효율성 제고

- 유통주체간 대금정산조직 신설(6월) 및 정가수의매매 조기 정착 유도
- 전국 공영도매시장(33개)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(3~6월)
- 가락시장 2단계 현대화사업('12 : 412억원)을 차질 없이 추진

□ (직거래) 온/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직거래 활성화

-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(aT)의 단체급식 식재료 사업 확대
 - 학교급식 외의 영역으로 B2B(어린이집, 교정시설 등) 확대
 - * 사이버거래소 매출액 : ('10) 1,755억원 → ('11p) 6,000 → ('12) 7,150
 - 규모화된 산지공급자 및 대량구매가 가능한 소비지 공동구매조직을 발굴하여 사전 예약거래 중개시스템 구축
 - * 가격등락에 상관없이 적정가격으로 사전 예약에 의한 거래방식 정착 유도
-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개념의 직거래 장터 개설('11 : 8개소 → '12 : 10)

□ (농축산물 할당관세) 적용기간 및 추천방식 등을 수급안정과 연계 운용

- 할당관세 적용물품이 수급상 필요한 시기에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(3개월, 6개월 등)
- 수급안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추천물량을 차등 배정(유제품 등)

【축산물】

□ (유통구조) 도축·가공·유통·판매의 일관유통 체계 구축

○ 농협 사업구조개편과 연계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축산 통합경영체(대형Packer) 집중 육성 및 직거래 확충

- 대형 Packer를 통해 브랜드 경영체간 과당경쟁 피해 축소 및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행사에 효과적 대응

○ 축산물 종합물류센터를 건립(부천, '12~'15), 농협 안심축산이 이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판매기능 확대

* 안심축산 시장점유율 : ('11) 한우 8%/돼지 0.5% → ('12) 20/7 → ('15) 50/18

□ (도축산업) 도축장 구조조정을 통한 유통구조 합리화

○ '도축-가공-유통'의 연계가 가능한 거점 도축장을 선정·중점 지원

- 거점 도축장을 중심으로 운영자금, 도축시설 개·보수 등 정책사업 지원을 집중하고, 위생수준 및 경영관리 상태 등을 지속 평가

○ 통합 도축장 지원방식 개선*으로 도축장 구조조정 가속화 ('11p : 85개소 → '12 : 78 → '15 : 36)

* 현행 : 4개 이상 통·폐합시 지원 → 개선 : 도축 물량 고려

□ (육가공산업) 제품기술개발 등을 통한 신수요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

○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가공제품, 휴대 등 편의성 강화제품 개발

○ 축산분야 R&D 효율성 제고를 위한 '미래축산포럼'을 구성 ('12.1), 축산물 가공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

* 5개 분과위 : 생산성, 친환경, 식품가공, 질병방역, 신성장동력

【수산물】

□ (인프라) 수협과 연계, 산지-소비지 유통 및 물류기반 강화

- 거점 위판장과 연계, 집적·상품개발·마케팅 기능을 강화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육성('12 : 2개소 신규)
 - 자동선별기·파레트·지게차 보급 등 산지 물류자동화 확대
 - 위판장 등 수산물유통시설 위생관리기준 마련·보급(12월)
- 노량진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('12~'15년 2,024억원)를 통해 입고에서 출고까지 저온물류설비 구축
 - 소비지 수산물유통 거점으로 '소비지 분산 물류센터' 추진 검토
 - *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후 예비타당성 등 검토
- 산지·소비지 유통기반 확충, 물류 효율화, 거래제도 개선, 가공산업 육성 등을 위한 '수산물유통선진화방안' 마련(9월)

□ (수급) 비축 및 할당관세 운영을 통한 수급안정 기능 강화

- 수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대상품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급격한 가격상승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
 - 오징어, 명태등 4개 주요어종 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비축운용을 위해 조기, 삼치 등 대체품목 운영
 - * 수산물 비축율 : ('10) 소비량의 0.4% 수준 → ('11) 0.8 → ('12) 1 → ('15) 5
- 수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, 수입 할당관세 운영
 - * '12년 상반기에 고등어(1만톤) 수입 할당관세 추진

3

안정적인 식량공급

가 쌀 수급안정과 유통체계 개선

- ◇ 쌀 소비량 감소추세에 맞추어 적정 생산 및 쌀 소비홍보를 통한 소비감소 추세 완화로 수급안정 도모
- ◇ ‘매취방식’에서 ‘수탁방식’으로 쌀 유통체계 개선 추진

- 논 4만ha에 타작물 재배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동시 도모
 - '12년도 벼 재배면적은 금년(85만ha)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
 - * 증가요인 :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종료(대상 논 6천ha), 간척지 조성(1.1천ha)
 - * 감소요인 : 연간 농지전용 면적(7~10천ha)
 - 타작물 재배 대상 논에 조사료, 두류(콩·팥 등) 등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이 재배되도록 유도
 - 조사료 수확비 지원 확대, 생산특구 지정 등을 통해 '14년까지 사료작물 생산량을 2배로 증대('10 : 1,597천톤 → '14 : 3,138)
 - * 하계 사일리지 제조비용 확대 지원(3만원/톤→4만원/톤), 대단지 우량농지를 조사료 생산특구로 지정(5년간 50개소)
- 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, 고품질 쌀 가공제품 개발, 식생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쌀 소비감소 추세 완화
 - *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치 : ('00~'09년) 2.2kg → ('09~'11) 1.2
- (밥쌀) 소비자가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쌀 포장표시에 등급('11.11월)과 단백질 함량('12.11월)을 포함

- (가공품) **쌀밀가루(쌀함량 10%) 공급 확대,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로 쌀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제고**
 - * 쌀 가공업체수 : ('10) 735개 → ('11) 811 → ('12p) 850
- (교육·홍보) **합리적 식생활교육 강화, '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프로젝트' 등 소비자 지향의 다양한 쌀 소비확산 운동 전개**
 - * 초등학생에게 쌀 관련 보조교재('11년 보급)를 활용한 식습관 교육 실시, 쌀 애니메이션(프랭키와 친구들) 제작·방영(3억원),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
- **매년 수확기 농가와 산지유통업체간 쌀값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위해 벼 수탁거래 활성화 추진**
 - '12년 RPC 벼 매입자금의 25% 이상('11 : 20%)을 수탁매입 의무화
 - '19년까지 출하 벼 전량 수탁매입을 목표로 연차별로 확대 추진
 - 수탁거래의 필요성 확산을 위해 **벼수탁거래 가이드북('11.10월, 20만부 보급)을 활용, '12년초부터 농업인·RPC·농협 등에 교육 실시**
- **농협사업구조 개편과 연계, 농협중앙회 주도의 대형 쌀 유통회사를 설립, 쌀을 제값에 팔아줄 수 있는 체계 구축**
 - 1단계로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간 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, 2단계로 쌀 유통회사 설립('13년말)
 - 지역조합 50개 이상 참여, '20년까지 연 100만톤 판매능력 확보
 - * 자체 가공판매 50만톤(수도권 10, 지방 40), 위탁판매 50만톤
 - **산지농협과 쌀 유통회사 간에 전문화된 분업체계 구축**
 - (산지농협) 생산관리·수집·가공, (쌀 유통회사) 브랜드화·가공·판매

나 쌀 가공산업 활성화

- ◇ '12년 가공용 쌀 소비를 40만톤까지 확대('08 : 22만톤 → '15 : 60)
 - 쌀가루 생산능력과 공급대상 확대, 가공용 쌀 원료 안정조달 체계 구축, 가공기술 R&D 지원 강화

□ 쌀가루 생산 및 공급체계 현대화

- 공장형 쌀가루 생산능력 확충으로 위생·안전성 확보, 쌀 가공식품 품질향상 도모
 - 영세 자가제분 위주에서 공장형 대량 생산과 공급체계로 전환 유도
 - * '11년에 연간 쌀가루 소비량은 약 20여만톤 이상이나, 쌀가루 전문 제분 업체 63개소에서 5만톤 수준의 쌀가루 생산
 - 쌀 가공업체의 쌀가루 생산시설 확충 지원('12년 500억원, 3%)
- 쌀가루 혼합 밀가루(쌀밀가루) 공급체계를 확충하여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및 물가안정 기여('11 : 800톤 → '12 : 1만톤 → '15 : 10)
 - 쌀밀가루 제분공장과 음식점 간 직송체계를 구축, 밀가루보다 20% 이상 저렴하게 공급(20kg당 밀가루 22~25천원, 쌀밀가루 16천원)
 - 수도권, 음식점 위주('11년)였던 쌀밀가루 공급대상을 '12년에는 전국 대형마트까지 확대
 - 쌀가루 혼합 비율 확대, 가공 용도별 맞춤형 제품 개발 및 다양한 소포장 제품 보급 등을 통해 시장에 조기 정착
 - * (쌀가루 혼합비율) 10% → 20, (제품 포장단위) 20kg + 1kg, 3kg, 5kg

□ 쌀 가공업체가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자체 원료조달 능력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

○ 쌀 가공업체의 다수확 가공용 쌀 전용재배단지 조성 확대

* 가공용 쌀 계약재배 면적 : ('11) 1.6천ha → ('12) 5 → ('15p) 30

- 생산·가공·유통주체가 참여하여 계약재배 방식으로 추진

- ha당 1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다수확 품종 개발·보급 추진

○ 전용재배단지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정부 재고쌀을 가공용 원료로 저가에 공급('07년산 기준 밥쌀용 : 920원/kg, 가공용 : 355원/kg)

□ 쌀 가공식품 품질혁신 및 신규수요 창출 등을 위한 R&D 집중 추진

○ 신제품개발·제품가공·신소재·품질제고 등 5대 가공분야의 55개 핵심기술 개발에 '11~'15년까지 700억원 투자

* '12년에는 30개 기술개발에 60억원 투자('11년 26개 기술, 52억원)

○ 쌀 가공업체가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R&D 수행체계 구축

* 쌀 가공업체,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쌀 가공기술 연구협의회 구성·운영

- 기관별로 분산 추진 중인 연구개발을 종합 조정, 효과 극대화

- 전체 쌀 가공기술에 대한 로드맵 수립, 종합 관리체계 구축

□ 쌀 가공식품 수요 확대를 위해 전시홍보·마케팅 적극 전개

○ '12년부터 쌀가공식품 전시관을 개설(농협 쌀박물관 내)·운영

○ 쌀 가공식품이 학교 등 단체급식에 납품되도록 적극 추진

- 업체 공동 설명회 및 시식회 개최, 가공식품 급식메뉴얼 제작·배포 등

○ 쌀 가공산업 전시회(10월), 쌀떡볶이 페스티벌(5월) 등 체험전시행사 개최

다 식량자급률 제고

◇ '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*('11.7월 상향조정)와 신규 설정한 '20년 목표치 달성을 위한 품목별 자급률 제고 대책 추진

* 곡물 25%→30, 밀 1→10, 채소 85→86, 축산물 71→71.4, 과실 66→80, 조사료 86→90

□ 품목별 맞춤형 대책 추진을 통한 생산 및 소비기반 확충

○ (밀) 국산 밀 생산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조·저장시설 설치 확대('12 : 4개소) 및 수요창출을 통해 안정성장 기반 조성

- 생산량의 35%까지 저장능력 확충('11 : 12개소 → '15 : 58)

- 국산밀의 우수성,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 확대 도모

○ (채소류) 마늘 우량종구 갱신,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보온커튼·지열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

*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: ('12신규) 60ha → ('17) 3,600

* 에너지 절감시설(누계) : ('11) 2,700ha → ('12) 4,065 → ('17) 10,050(64%)

○ (과실류) 품종갱신, 비가림·방풍·방조시설 설치 등 생산시설 현대화 면적을 '17년 37.8천ha까지 확대

○ (축산물) 축사시설현대화, 방역 등을 통해 적정 사육규모 유지

- 쇠고기 : 과잉 한우 사육두수 감축 유도(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, 한우 암소 도태 확대 등)

- 돼지고기 : 살처분 사육두수 회복(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등)

○ (수산물) 자급률 목표치 신규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 마련('11.12월)

-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어업생산 잠재력 극대화

* 인공어초(4천ha)·바다목장(150ha) 조성 및 건강한 수산종묘 방류(1억마리)

□ 수입 사료곡물을 대체하는 국산조사료 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'10년 대비 '14년에 양질 사료작물을 2배 증산

○ 조사료 생산특구(10개소, 5천ha), 맞춤형 조사료 생산단지(5개소) 조성 등을 통해 사료작물 생산면적 52% 확대

* 조사료 재배면적 : ('10) 244천ha → ('11) 260 → ('12) 330 → ('14) 370(52%↑)

* 사료작물 생산량 : ('10) 1,597천톤 → ('12) 2,522 → ('14) 3,138(97%↑)

○ '14년까지 배합사료 대비 조사료 급여비율을 확대하여 수입 사료곡물 비중 축소 및 사료비 절감 도모

* 소 두당 사료급여량중 조사료 비율 : ('10) 45% → ('14p) 55%

□ 겨울철 유희 논에 밀, 보리, 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

○ 논에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배수불량 논 배수개선을 실시하여 농지 범용화 및 밭작물 재배기반 확충

* 배수불량 논 232천ha 배수개선 추진('11년까지 153.4천ha → '12년 4.2천ha)

○ '15년까지 추가로 유희농지 164천ha에 밀·조사료·녹비작물 등 재배 추진, 겨울철 논 재배면적을 581천ha로 확대

* '10년 벼 재배 논 892천ha 중 겨울철 재배농지는 417천ha(47%)에 불과

□ 식량자급률 달성 정도와 자급률 제고대책 추진 상황 지속 점검·보완

○ 매년 생산자단체, 전문가 등으로 '식량자급률 점검단'을 구성, 식량자급률 달성 상황을 점검·평가(6월 점검 실시)

○ 점검·평가를 통해 파악한 미비점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·시행

라 해외농림업개발 활성화

- ◇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금융·제도 지원을 확대하여, 해외 농업개발 면적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
- ◇ 인니·파라과이 등 8개국에 25천ha 해외조림 투자

□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면적을 2배 이상 확대('11 : 37천ha → '12 : 80*)하고 확보 곡물의 반입물량 확대 * 수집·유통 물량의 환산면적 포함

- 동남아·동유럽 등에는 대규모 농장 개발, 미국 등 생산·유통 인프라가 구축된 국가에는 유통망 구축에 초점
 - 동남아 : 필리핀(MIC 사업 본격 추진), 인니(MIC 사업 타당성 연구), 캄보디아 등 기타국가 MIC 진출 추진
 - 미국 : aT 컨소시엄을 통해 산지 EL 인수합병 및 수출 EL 1기 확보
 - * 미국 곡물유통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질, 우크라이나, 연해주 등의 곡물 유통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여건 조사 및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
 - 기타 : 우크라이나·러시아·호주 등 민간기업 대규모 농장개발 지원
- 해외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용자조건을 석유·광물 등 수준으로 개선(3년 거치 7년→ 5년 거치 10년)
-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(2월), 투자타당성 조사·교육훈련·정보수집 등 지원체계 구축
- 해외농업 진출기업과 식품·사료 등 실수요자 단체를 연계,

국내반입의 확대 유도

-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에 따라 ‘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’ 재정비
 - 농장개발과 유통망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여 '20년까지 밀·콩·옥수수 등 주요 곡물수입량의 40%(643만톤) 확보
 - * 민간기업(138만톤, 38만ha) 및 민·관 합작 곡물유통회사(505만톤)
 - 농장개발 및 가공·유통 등 전·후방 연관산업 동반 진출
 - 농진청 해외농업기술센터(KOPIA)는 현지형 종자기술을 개발하고, 농식품부 ODA 사업 등으로 보급 및 교육 훈련 체계 구축

-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곡물정보 시스템 구축·활용 및 비상 쌀 비축을 통하여 식량위기에 대응
 - G20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*을 활용하여 곡물시장 변동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식량위기 발생시 신속대응포럼(RRF**)을 통해 대응
 - * AMIS: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
 - ** RRF(Rapid Response Forum): 식량위기사 관계국의 고위급이 참석하여 대응방안 논의
 - ‘아세안+3 비상 쌀 비축(APTERR :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)’ 국회비준을 통해 아세안+3국간 비상시 식량안보 도모
 - * 13개국이 총 787천톤(한국 150천톤)을 약정, 비상시 이를 판매, 장기차관 또는 무상지원

- 해외조림지역을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여 진출지역 다변화(8개국 25천ha)
 - 인니에 양묘·조림·가공 등 목재 펠릿 연료 공급 일관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조림 추진 * ('12) 대상지 선정·기본계획 수립(2만ha)
 - 남미 조림투자 거점 마련을 위한 파라과이 신규조림 실시
 - * ('12) 1천ha → ('15까지) 5 → ('20까지) 10

마 농림분야 협력사업 확대

◇ 농림분야 협력으로 개도국 식량·산림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국내 농식품 관련 기술 및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□ ODA 국별협력전략(CPS : CountryPartnership Strategy)에 따라 농림 분야 개발수요가 높고 진출기업과 연계 가능한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

* 국제농업협력사업 : ('11) 10개국(100억원) → ('12) 12개국(105억원)

- 필리핀 농촌개발 지원, 캄보디아 산림복구 및 산림연구시설 구축 등 해외농림업개발과 전략적으로 연계(5개 사업, 20억원)
- 인나카메룬 벼농사 기계화 단지 조성 지원, 캄보디아 쌀산업 일관체계 구축 등 농산업 해외진출과 연계(4개 사업, 23억원)
- DR 콩고·모잠비크 등 아프리카와의 에너지자원 외교를 영농 기술 전수 등 ODA로 측면 지원(4개 사업, 23억원)

□ 국제기구와 함께 식량안보, 가축질병 등 현안에 공동대응

- FAO 등과 공동으로 '초국경 동물질병 대응능력 제고*' 및 '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 교육' 추진(2개 사업, 10억원)

* 베트남, 라오스, 캄보디아에 FAO 구제역 통제 프로그램 도입 지원

- 빌게이츠 재단과 공동으로 '에티오피아 농업용수 개발' 지원을 위한 수자원 지도화(mapping)사업 추진(7억원)

□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기술과 지식을 개도국에 전수하여

식량문제 해결 지원 및 수입 농·축산물 위생여건 향상 도모

- 아시아 개도국 대상 **방역·식품안전·종자기술** 등 역량강화(100명)
- **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(KOPIA, 15개국 설치)** 개발 기술(씨감자 생산, 옥수수 신품종 등) 전수를 위한 **대형 시범단지 조성**(캄보디아 등 5개국)
- 우리나라 주도로 **아시아·아프리카 식량증산** 등 농업현안의 공동 해결을 위한 **다자간 기술 협력 강화**
 - *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협약체(AFACI) : ('11) 14사업 → ('12) 18
 - * 한-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약체(KAFACI) : ('11) 18사업 → ('12) 20
- 제10차 UN 사막화방지협약(UNCCD) 총회('11.10월) 시 채택된 **‘창원이니셔티브’** 이행 및 **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** 설립 준비
 - * 건조지 녹색성장 파트너십 구축, 동북아 황사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
- 아프리카·아시아 **사막화 방지 및 식생복원** 지원
 - 건조지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토지황폐화 방지 및 식생복원 사업, 한국의 산림녹화기술 및 녹색성장 경험 전수
 - * UNCCD, UNEP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지역 조림사업 추진('12년 5억원)
- **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*** 사무국 국내 설치('12년), **ASEAN** 등 회원국 조립 및 역량강화 지원
 - * 제14차 한·아세안 정상회의시 ‘한·아세안 산림협력협정’ 서명('11.11.18, 인니)
 - 아세안 국가에 황폐 산림복구, 기술전수 및 역량강화(20억원)
 - * ('11) 아세안 9개국 → ('12) 아세안, 몽골, 키르기스스탄 등 확대
 - 인니 산림자원 조사 및 아세안 국가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* 구축('10억원)

- * 산림에서 감축한 CO₂ 배출량에 대해서 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모니터링, 보고, 검증이 가능할 때 CO₂ 감축량을 탄소배출권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

바 수산자원 외교강화 및 협력 증진

◇ 국제수산 협상 역량 강화 및 ODA 확대를 통한 해외수산 자원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 확보

□ 국제수산 협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시스템 정비·보완

- 협상 인력·조직 보완을 위해 국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산협상 거버넌스 체제* 구축(3월)

* 대학, 연구기관, 업계와 함께 협상 전문인력 풀 확충 및 공동 대응 체계 마련

- 협상 대응력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상 가이드라인,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(3월)

□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·이용을 위한 전략 다변화

- 우리 어선의 조업을 직접 규제하는 국제수산규범*은 초기 논의단계부터 적극 참여·대응하는 등 규제수준 완화에 총력

* UN, FAO 등을 중심으로 최근 조업활동을 위축하는 내용의 규제(공해 저층 어업 관리, 부수어획 통제 등)의 신설이 계속 논의되는 추세

- 불법어업(IUU) 방지, 국제옵서버 확충 등 이행이 불가피한 국제규제는 적극 수용하여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

□ ODA 사업을 자원확보 및 연안국 경제발전의 상생형 구조로 개편

- 주요 연안국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 확대('11 : 10억원 → '12 : 16)

- 기존의 단순 물자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원(受援)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(6월)
- (일본) 우리 어선의 입어규모·조업조건 개선 및 민간협력 강화
 - 규제강화 예상 업종에 대한 국내 감척사업을 확대하여 입어 규모 적정화('11 : 870척 → '12p : 850)
 - 조업 금지수역·기간·어구 등 입어 규제 완화에 협상력 집중
 - 어업협의회 등 민간 창구를 통한 동해 중간수역의 자율적 자원관리 및 조업질서 기조 유지
- (중국) 중국 어선의 조업질서 확립 및 EEZ 입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등량·등척 지속 추진
 - 불법 중국어선의 강력한 단속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측에 자국어선의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 촉구
 - 중대위반 어선(무허가, 영해침범, 폭력저항)에 대한 3년간 입어자격 취소 등(9월)
 - 서해 자원 보존을 위한 과학적 자원관리시스템 도입 추진(12월)
 - 어종별·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방안 마련 및 한·중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공동 치어방류 실시 등 자원조성
- (러시아) 투자·협력 강화로 명태 등 어획쿼터의 안정적 확보
 - 러시아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협력 및 극동 지역 투자 활성화를 통한 우호적 입어환경 조성
 - 러시아산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를 위해 계류에 대한 '원산지 증명제도' 시행(4월)
 - '한·러 국제수산물 교역센터' 설치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(6월)

4 기후변화 대응

가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

◇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,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품종·기술개발 등 적응 역량강화

- 단기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대응체계 구축
 - ‘농업관측기동반’ 운영 및 농업 기상정보 제공 대상 품목 확대
 - * 농업기상정보 제공 품목 : ('12) 2개 → ('15) 5 → ('20) 10
 - 이상기상 대응 농수산물 재배 매뉴얼 개발·보급('12년 115품목)
- 중장기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응역량강화
 - 온난화에 따른 작물 생산예측 및 기술개발(품종개발, 병해충 방제기술, 재배기술)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
 - * 내서성 배추·무 품종개발 : ('11) 0개 → ('12) 2 → ('20) 4
 - * 아보카도, 용과, 석류, 올리브 등 아열대성 소득작목 선발(누계) : ('11) 15개 → ('12) 18 → ('20) 25
 - * 고온적응성 낫치, 전복, 미역 등 품종 개발(누계) : ('11) 0개 → ('12) 2 → ('20) 9
- 기후변화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
 - ‘(가칭)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’(‘14년부터 설치·운영예정)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('12)
 - * 식량 생산예측, 주산지별 단기 국지성 기상예보, 실시간 작황관측 등
 - 농어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사업 인센티브 지원 등 사업간 연계방안 마련 검토
 - * 온실가스 감축활동(물걸러대기 등)을 직불제 지급요건으로 포함 등

나 탄소감축 역량 강화

◇ 저탄소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사업 및 흡수원 확대를 통한 농림수산식품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

□ 식품분야 '12년 온실가스 배출량 24천tCO₂ 감축

- '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(26개)의 감축 이행중간점검(6~7월)
 - * '12년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 목표 설정(9.30) 및 이행계획서 작성·제출(12.31)
- 관리대상 식품업체들에게의 온실가스·에너지 절감 최적가용 기술 분석 및 보급 추진(10월)
- 중소 식품기업에게 인벤토리구축·명세서·이행계획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실시(3~6월, 5개 업체)

□ '탄소상쇄사업' 및 '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' 시범 도입(3월)

- (탄소상쇄사업) 탄소배출권 거래제('15년 시행)에 대비,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분(Offset)을 크레딧화하기 위한 검·인증체계 구축
 - * '12년 : 저탄소 녹색마을, 지열히트펌프 설치 농가 등을 대상으로 2건 실시
- (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) 저탄소 농법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마크 부여('12 : 쌀, 상추 등 5개 품목에 대해 10건 인증)

□ 조림 및 숲가꾸기, 바다숲도시숲 조성 등 탄소 흡수 녹색공간 확충

- 한계농지 등 유휴 토지에 신규 조림 확대(1천ha) 및 숲가꾸기 (25만ha)를 추진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 제고
 - * '탄소흡수원유지 및 증진을 위한 법률' 제정('12년 하반기)
- 바다숲 840ha(159억원), 도시숲 264ha(528억원) 신규 조성

다 농어업분야 에너지 절감

◇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(’11 : 가온시설면적의 17% → ’12 : 25) 등을 통한 비용 절감

□ 농어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등 효율적 에너지 이용

- 중·소규모 온실에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
(’11년까지 1,880ha → ’12 : 900ha 추가)
- 노후어선 저효율 기관·장비 교체(’11 : 323척 → ’12 : 473)
및 연근해어선 감척사업(’11 : 684척 → ’12 : 624) 추진
- 시설내 국소 냉난방 기술, 농기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화,
오징어 채낚기용 LED 집어시스템 개발 등 R&D 추진
- 유류 사용이 많은 농가 보유 농기계 중심으로 시간계측기 부착
확대(’11 : 14천대 → ’12 : 18)로 실 사용량 확인시스템 구축
 -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, 농가별 영농규모를 반영한 면세유 공급

□ 온실가스 감축 및 유류사용 대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
- 대규모·자동화 온실 지열난방 보급(’11년까지 460ha → ’12 : 155ha 추가)
 - * 지열난방은 경유 대비 17천만원/ha비용 절감(유가 100\$, 파프리카 기준)
- 중·소규모 온실(150ha) 및 농가주택(3천호)에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
 - 바이오부문 최초 인증제 도입으로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
 - * 민·관 합동으로 난방기 설치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(분기별)

IV. 과제별 추진일정

[1] 체질개선 · 위험관리

1. 농수산물 생산 시스템 선진화

	실천과제	세부일정
연중	▪시설원예현대화 및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	연중
	▪수산물 정부비축	연중
1분기	▪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 마련	1월
	▪축사시설현대화사업 제도개선	2월
	▪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대상자 선정	2월
	▪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	2월
	▪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	3월
	▪축산업 허가제 시행을 위한 교육운영기관 지정	3월
	▪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추진계획 수립	3월
2분기	▪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	4월
	▪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 연차평가	5월
	▪수의사 처방전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	6월
3분기	▪시설원예현대화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상황 점검	8월
	▪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설립 착공	8월
	▪수산물 유통선진화 방안 마련	9월
4분기	▪농장식별번호 없는 돼지 판매·도축금지	10월
	▪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시설 착공	10~11월
	▪과수생산시설현대화(FTA기금)사업 전문가 워크숍	11월
	▪수산물 유통시설 위생관리기준 마련·보급	12월
	▪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시행근거 마련	12월

2. R&D 및 성장동력 확충 지원

	실천과제	세부일정
연중	▪'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' 사업 예비타당성 추진	연중
	▪생명자원 통합정보서비스(BRIS) 제공	연중
	▪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 추진	연중
1분기	▪우수기술사업화자금(저리·장기 융자금) 지원 공고	3월
	▪양잠산물종합단지 1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	1~3월
	▪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사업대상자선정 공고	1~3월
2분기	▪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사업대상자 선정	4월
	▪도시농업육성법 하위법령 제정·시행	5월
	▪제1회 전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	4~6월
3분기	▪사업별 연구개발 micro road map 작성	7월
	▪도시농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	7~8월
	▪낙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	9월
4분기	▪농림수산물식품 산업별 기술수준 분석조사	11월
	▪Golden Seed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단 구성	12월
	▪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업체 선정	12월
	▪낙시종합 정보 홈페이지 구축	12월

3. 수산업 체질개선

	실천과제	세부일정
연중	▪자원관리형 감척전환을 위한 도상연습 실시	연중
	▪연근해 수산자원의 잠재생산력 조사	연중
	▪양식용 인공종묘생산기술 개발	연중
	▪해외신어장 조사 실시	연중
	▪노후원양어선 대체건조 사업추진	연중
1분기	▪어장관리해역 지정 및 어장환경 조사 강화 방안 마련	2월
	▪10대 전략품목별 연구 클러스터 구성	2월
	▪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집행지침 시달	3월
2분기	▪빌딩형 양식 등 복합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	5월
	▪연근해어선 감척시행 도상계획안 마련	6월
	▪연근해 허가정수 재조정	6월
3분기	▪원양산업발전법 개정(안) 국회 제출	6월
	▪어선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	7월
	▪울진 시범바다목장 체험관 및 낚시터 준공식	9월
4분기	▪배합사료 공장 착공	9월
	▪연근해어업 어선톤수 조정(안) 마련	10월
	▪감척 대상어선의 감정평가 및 지원금 지급	12월
	▪국가어도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	12월
	▪수산자원 조사·평가 체계 마련	12월

4.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 확대

	실천과제	세부일정
연중	▪한국외식 경기지수 조사·발표	분기별
	▪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동	연중
	▪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	연중
	▪농공상 융합형 기업육성	연중
	▪해외한식당 협의체 확대	연중
1분기	▪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운영	1월
	▪마드리드 푸전 주빈국 참가	1월
	▪수출농산물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	1~6월
	▪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	1~6월
	▪수출지원 로드맵 작성	1~6월
	▪수출전문 물류업체 선정	1~6월
	▪식품기업지원관련 종합 안내서 발간	3월
	▪품목별 수출선도조직과 휘모리 통합	3월
	▪한식세계화 성과지수 개발	3월
2분기	▪우수 외식업지구 육성	4월
	▪술 품질인증제	5월
	▪숙성명주 프로젝트	5월
	▪천일염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	6월

	실천과제	세부일정
3분기	▪김치산업 종합계획 수립	7월
	▪지역전략식품사업단 선정	7~12월
	▪식품소재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	8월
	▪식품업체-대형유통업체간 상생발전협의회 설치	9월
	▪식품인력 양성종합계획 마련	9월
	▪식품 R&D 중장기 계획 보완	9월
4분기	▪외식 프랜차이즈 평가	10월
	▪김치 품평회	11월
	▪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	12월

[2] 활력창출 · 생활안정

1.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

	실천과제	세부일정
연중	▪농어촌 재능기부 활성화 추진	연중
	▪자율관리어업공동체 실태조사 및 내실화 연구용역	2~10월
1분기	▪1사1촌 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	3월
2분기	▪농어촌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 성과평가	4월
	▪농어촌 산업 박람회 개최	6월
	▪'우리 농어촌 운동' 추진을 위한 국민운동추진위원회 구성	7월
3분기	▪농어촌 공동체회사 컨설팅	7~12월
	▪농어촌 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	9월
4분기	▪농어촌관광사업등급제 세부시행방안 마련	10월
	▪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종합계획 수립	10월
	▪마을단위 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	10월
	▪중장기 농어촌 산업 발전 방안 마련	12월

2. 인력 육성 · 유입 · 지원 체계화

	실천과제	세부일정
연중	▪귀농·귀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	연중
	▪귀촌인의 성공적 농어촌 정착을 위한 영농영어자금 지원	연중
2분기	▪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추진성과 평가	6월
	▪농어촌 지역 및 마을개발 실무전문가 교육과정 개발·운영	6월
	▪귀농·귀촌 박람회 개최	6월
3분기	▪농신보 고액보증 심사 시스템 개발	7월
	▪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 재편	9월
4분기	▪농어업 인력 포탈 구축	10월
	▪귀농·귀촌 우수사례집 제작·배포	12월

3. 농어촌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

	실천과제	세부일정
연중	▪농어촌 집고쳐주기 사업	연중
	▪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빈집 정비	연중
	▪결혼이민여성 정착단계별 영농교육 실시	연중
	▪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	연중
	▪친환경·저에너지 주택 표준모델 개발·보급	4~11월
1분기	▪농어촌 유산제도 도입방안 마련	3월
2분기	▪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 세부지침 마련·시달	5월
	▪농어촌 영향평가 매뉴얼 보완	6월
3분기	▪포괄보조사업 내실화를 위한 시·도별 집행점검	6~9월
	▪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공모 및 분야별 토론회	7월
	▪농산어촌개발 우수사례 TV기획홍보	7월
	▪농어촌 경관 사진전 개최	10월
4분기	▪농어촌 정비 계획제도 도입방안 마련	10월
	▪한국 농어촌 건축 대전 개최	10월
	▪삶의 질 향상 계획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	10월
	▪마을단위 토지이용 조정제도 도입방안 마련	12월

4. 투자 활성화

	실천과제	세부일정
연중	▪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및 조합결성	4~12월
	▪새만금 지구 방수제 공사	연중 ('10.7~'15.12)
	▪새만금지역 농업용지개발 기본설계 수립(5공구 제외)	연중
	▪어항·어촌 인프라 구축	연중
	▪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	연중
1분기	▪2012년 간척농지임대 추진대책 시달	1~2월
2분기	▪농식품경영체 인큐베이팅 사업 공고 및 선정	4~6월
	▪간척지 농업적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	4~9월
	▪농식품모태펀드 투자로드쇼	5월
3분기	▪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	7~8월
	▪새만금 지역 5공구 기반조성공사 착수	9월
	▪대규모 농어업회사 전기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 지원 방안 마련	9월
	▪지역별 투자설명회	9~10월
4분기	▪화옹지구 첨단유리온실 조성 완료	11월
	▪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종합계획 수립	10~12월

[3] 소득안정 · 위험관리

1.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

	실천과제	세부일정
연중	▪농기계 임대·은행사업 실시	연중
	▪논 농작업 대행면적 확대 추진	연중
	▪수산장비 임대사업 추진	연중
	▪농어업재해보험(농작물, 가축, 양식수산물) 및 농어업인 재해공제(농업인, 수산인) 판매 등 사업추진	연중
	▪어선원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	연중
1분기	▪어선보험 선외기 실손보상특약 가입허용	1월
	▪농어업인재해공제 보상수준 및 보장범위 확대 실시	1~2월
	▪어선원보험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	2월
	▪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 선정·지원체계 개선	1~2월
	▪농기계임대사업 대상자 선정(30개소)	1월
	▪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 재선정	1~3월
	▪농기계임대사업 사업비 지원(150억원)	3월
2분기	▪직불제 관련법령 정비 추진	5월
	▪밭농업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마련	5월
	▪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 정보시스템 구축	6월
	▪농기계 임대·은행사업 추진현황 점검	6월, 9월
	▪농가소득안정직불제 3차 도상연습 현장조사 등	5~11월
3분기	▪농작물재해보험 '12년도 추가 품목 시범사업 실시	7~10월
	▪어선원보험 제도개선방안 마련	9월
	▪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 지급대상자 확정	9월
4분기	▪'13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검토	11~12월
	▪어선보험 선체평가액 상향조정 추진	12월
	▪농가소득안정직불제 3차 도상연습 결과평가 및 추진방향 재검토	12월
	▪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콜센터 운영(농기계)	12월
	▪농기계 임대·은행사업 추진실적 분석·평가	12월

2. 동물 질병방역 및 자연재해 대응 강화

	실천과제	세부일정
연중	▪구제역 백신 수시 접종	연중
	▪자연재해 발생시 피해조사 및 피해복구 지원	1~12월
	▪수리시설 개보수(716개),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 배수 개선(4.2천ha), 농촌용수개발(2.1천ha) 추진 및 내진특 등급 이상 규모 저수지 15개소 지진계측기 설치 완료	1~12월
	▪(산림청)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사업(사방댐, 계류보전) 추진	1~12월
1분기	▪수리시설 재해대비 능력조사	1~3월
	▪(산림청) IT기반 영상전송시스템 신규도입·운영	2~5월
	▪(산림청) 산불진화단 도입·운영	2~5월

	실천과제	세부일정
2분기	▪중장기 수리시설 보수·보강계획 수립	1~6월
	▪(산림청) 산사태예측 정보시스템 고도화(용역 완료)	6월
	▪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	5~6월
3분기	▪국가어항 외곽시설 설계과 검토 및 안전성 평가 추진 상황 점검	10월
4분기	▪구제역·AI 가상방역훈련(CPX)	10월
	▪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	11~12월
	▪범국가적 디지털 가축방역체계(KAHIS) 구축	12월
	▪국가어항 외곽시설 설계과 검토 및 안전성 평가 추진 완료	12월
	▪(산림청) 토석류 위험지도 제작·보급	12월

3. FTA/DD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

	실천과제	세부일정
연중	▪(한미, 한EU 등) FTA 피해 영향 조사 분석	3월~
	▪FTA 협상참석 및 농수산 민감성 반영 등 쟁점별 대응	연중
	▪DDA 농수산협상 대응	연중
	▪WTO 농업위원회 참석	연중
1분기	▪FTA 국내 보완대책 신규 교육과정 계획 수립(연수원)	2월
	▪FTA이행지원센터 지정 및 설치	1~2월
	▪'11년 한·EU FTA 피해영향 조사 분석 결과	3월
	▪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	3월
4분기	▪WTO TPR(무역정책검토) 대응	11월

[4] 안전식품·안정공급

1. 안전 농식품 공급

	실천과제	세부일정
연중	▪농축수산물 안전성조사	연중
	▪수입산·국내산 농식품 방사능 검사	연중
	▪인증 농식품 및 공통 표지(logo) 홍보	연중
	▪식생활교육 네트워크 구성확대	연중
	▪녹색식생활 체험교육 지원	연중
	▪GAP인증조직 육성	4월~
	▪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·유통기반 구축 (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, 친환경비료 지원)	1~12월

	실천과제	세부일정
	▪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 인증 및 행정처분 현황 등록	1~12월
1분기	▪2012년 수산물 안전성검사 계획 수립	1~2월
	▪민간 인증기관 사후관리 계획 수립	2~3월
	▪광역친환경농업단지대상 사업 설명회	2월
	▪농식품안전 6자 협력 체계 구축	3월
2분기	▪녹색식생활 스마트폰 앱 개발·보급	4월
	▪축산물위생관리법률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	4~5월
	▪2012년 하반기 수입수산물 특별관리 품목 선정	4~6월
	▪인증기관 지정·관리 관련 국제기준 조사·검토	4~6월
	▪음식점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관련 시행규칙 개정	4~6월
	▪농식품 위험평가 작업반(전문가) 구성·운영	5~6월
	▪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방안 마련	6월
	▪한·미 패류위생양해각서 갱신	6월
3분기	▪제2회 녹색 식생활 교육박람회	7월
	▪두족류 및 갑각류 중금속 모니터링 연구결과 보고	7~8월
	▪인증기관 지정 심사 매뉴얼 마련	7~8월
	▪축산물위생관리법률 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및 법제처 제출	8월
	▪수출국의 위생·안전관리 시스템 평가 제도 확립 (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매뉴얼안 마련)	9월
	▪친환경축산 실천농가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	9월
	▪친환경축산 안전 직불제 지원 대상축종 확대, 축종별 지급단가·기간 상향 조정 추진	9월
4분기	▪축산물위생관리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	10월
	▪음식점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관련 시행규칙 개정	10월
	▪모든단계 HACCP 적용제품의 차별화된 표시제 도입	10~11월
	▪도축장 설비 및 위생관리기준 정비	10~11월
	▪도축장 행정처분 기준강화	10~11월
	▪수출국의 위생·안전관리 시스템 평가 제도 확립 (평가 기준 및 방법 매뉴얼안 의견수렴 및 확정)	11월
	▪한·대만 위생약정 체결	11~12월
	▪‘품목별 GAP인증심사기준’ 마련	12월
	▪중금속 오염정보통합시스템 구축	12월
	▪농장·중소업소용 HACCP 표준모델 개발보급	12월
	▪'13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평가선정	12월
	▪친환경농산물 유통 모니터링 실시	12월
	▪재포장 취급자 의무인증제 도입	12월
▪녹색식생활 가정식생활 수첩보급	12월	

2. 협동조합 개혁 및 유통구조 개선

	실천과제	세부일정
연중	▪직거래 중심의 유통체제 확립 등을 위한 유통·판매 시설 설치(청과도매물류센터, 양곡유통센터 등)	연중
	▪노지채소 계약재배 추진	연중
	▪공선출하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	연중
	▪사이버거래소(aT) 사업 확대	연중
	▪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평가 및 점검	3월 ~
	▪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구성·운영	3월 ~
1분기	▪노지채소 계약재배 추진계획 수립	1월
	▪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-2지주(경제, 금융)로 법인분리	3월
	▪중앙회내 경제부문은 지도·지원 중심에서 판매 중심으로 조직체제 재설계	3월
	▪유통지원자금 운용 및 조성방안 고시	3월
	▪지자체 직거래 장터 개장 추진	3 ~ 10월
2분기	▪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세부실천 계획 마련	5월
	▪수협중앙회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방안 마련	6월
	▪국내산 마늘 비축·수매 실시	6월
3분기	▪일선조합 경제사업 역할강화방안 연구용역 추진	6~8월
	▪일선수협 경영개선목표 부여	8월
4분기	▪일선조합 경제사업 역할강화방안 마련	11월
	▪조합공동사업법인 등 규모화된 산지유통 조직 설립(11개소)	12월
	▪조합공동사업법인 등에 중앙회 인력 지원 및 지분출자	12월
	▪일선수협 부실예방시스템 구축	12월

3. 안정적인 식량 공급(해외농림어업개발 포함)

	실천과제	세부일정
연중	▪쌀 밀가루 공급확대 및 R&D 추진 (공급대상을 전국의 음식점, 대형마트까지 확대)	1~12월
	▪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고쌀 공급	1~12월
	▪품목별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(건조·저장시설, 에너지 절감시설, 축사시설 현대화 등)	1~12월
	▪필리핀 MIC 사업 추진	1~12월
	▪농업부문 국별협력전략(CPS) 점검 및 피드백	1~12월
	▪(농진청)KOPIA, AFACI 및 KAFACI 개도국 현지사업 추진	1~12월
1분기	▪쌀 안정생산 방안 및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시행지침 시달	1월
	▪쌀 가공식품 상설 전시관 개설	1월
	▪“쌀 가공기술 연구협의회” 구성	1월
	▪해외농업개발 용자제도 개선	1월
	▪벼수탁거래 활성화 관련 농업인 대상 교육	1~2월
	▪쌀 가공기술 로드맵 수립	1~2월
	▪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	2월
	▪초등학생 대상 “쌀 교과서” 인정도서 추진	3월
	▪(산림청)창원이니셔티브 협력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	2월

	실천과제	세부일정
2분기	▪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자 접수	4월
	▪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자금 지원	4월
	▪가공용 쌀 계약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	4월
	▪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통보	5월
	▪쌀 떡볶이, 쌀면 페스티벌 개최	5월
	▪국내 최초 쌀 애니메이션 방영(프랭키와 친구들)	5월
	▪식량자급률 점검단 구성 및 자급률 달성상황 점검	6월
	▪조사료 생산특구 지정	6월
	▪수출EL 지분참여 계약	6월
	▪인니 MIC 타당성 조사	4~12월
	▪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재정비	6월
	▪(산림청)과라과이 조림(300ha) 착수	4월
▪(산림청)인니 바이오조림 시범사업(2만ha) 기본계획수립	6월	
3분기	▪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이행점검	7~10월
	▪쌀 대표브랜드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	8월
	▪(농진청)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(KOPIA) 대형시범단지 조성 추진	7월
4분기	▪쌀 가공산업 전시회	10월
	▪쌀 포장표시 등급에 “단백질 함량” 표시 시행	11월
	▪국제농업협력사업 자체평가	11월
	▪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보조금 지급	12월
	▪미 USDA와 공동으로 국제곡물관측시스템 구축	12월
	▪산지EL 확보(곡물기업 M&A)	12월
	▪(농진청)AFACI 이동성 벼 병해충 방제 국제워크숍 개최	10월

4. 기후변화 대응

	실천과제	세부일정
연중	▪탄소상쇄사업 추진	1~12월
	▪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추진	1~12월
	▪농어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 추진	1~12월
1분기	▪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명세서 접수 및 검토	3월
2분기	▪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선정 및 공고	6월
	▪농업 탄소상쇄사업 활성화 워크숍 개최	6월
3분기	▪“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 계획” 중간점검	7월
4분기	▪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	10월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① 가축질병 대응 강화		
가. 가축질병 대응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축질병 임상관찰 및 검사요령 교육(5월) ○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(7월) ○ 전국 양돈장 관리시스템 운영계획 수립(7월) ○ 축산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(10월) ○ AI 발생우려 지역 농가담당자 지정·예찰(11월) 	<p>완료</p>
②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		
가. 수급불안 품목의 가격 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1년 농식품 물가안정대책 수립시행(1월) ○ '11년 수급안정사업 개선방안 마련(1월) ○ 기상 급변기 별도 속보 발행 등 관측강화(3월) ○ 가격불안품목 중심 할당관세 추가적용(연중) 	<p>완료</p>
나. 유통방식 다양화 및 유통 효율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개선대책 수립(1월) ○ 가락시장 하차 경매제 시범실시(4월) ○ 산지유통 선진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(7월) ○ 농업인 직거래장터 8개소 신설 (10월) 	<p>완료</p>
다.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공정거래 대응매뉴얼 제작배포(5월) ○ 불공정거래 대응 산지조직 교육(3~9월) ○ 산지조직의 대형업체 거래내역 점검(5~6월) ○ 소비자단체를 통한 대형업체 거래관행 점검(9-10월) 	<p>완료</p>
③ 쌀수급 안정 및 산업화 촉진		
가. 쌀 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·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쌀 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(4월) ○ 쌀등급표시 관련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4월) ○ '11년 공공비축, 12년 정부양곡수급계획 수립(8월) ○ 쌀 사이버 거래소 구축방안 마련(8월) 	<p>완료</p>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나. 식량자급률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방안 마련(3월) ○ 주요곡물 수급안정대책 수립(4월) ○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재고방안 마련(7월) 	완 료
다.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 확정(1월) ○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현지점검(8월) ○ 농기계 임대사업 통합모델 발굴 추진(12월) ○ 농기계은행사업 확대 및 일꾼직업체계 구축(12월) 	완 료
④ 재해 등 기타위험관리 강화		
가. 농림어업 재해관리 시스템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난상황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(5월) ○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개정고시(7월) ○ 농업재해대책법(일보부족, 야생동물) 개정(3월) ○ 시설원에 품질개선사업 등 현장점검(10월) 	완 료
나. 재해예방 기반시설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농대비 농업용수 공급대책 수립시달(2월) ○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농업기반시설 점검(4월) ○ 저수지 및 배수장 재해대비 비상훈련(5월) ○ 수리시설 피해복구 지원계획 수립추진(9월) 	완 료
다. 어선 안전사고 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근해어선 안전조업대책 수립시행(2월) ○ 어선 해난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수립(5월) ○ 어선법 개정안 국회제출(9월) ○ 노후어선 대체 및 기관장비 현대화 추진(연중) 	완 료
⑤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		
가.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후변화 대응 위원회 구성 및 회의(4월) ○ 농림식품분야 기후변화 기본계획 확정(5월) ○ 유해생물 발생 방지 대응체계 구축 추진(연중) ○ 농림식품분야 기후변화 세부추진계획 확정(11월) ○ 재배지 변동 예측모형 분석(연중) 	완 료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나. 탄소감축 역량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식품분야 '11년 관리업체 지정(1~7월) ○ 농식품분야 '11년 관리업체 목표설정(5~9월) ○ 농식품 온실가스 통계구축 보완계획 수립(6월) ○ 온실가스 배출 통계 통합DB 구축(12월) 	완 료
다.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대상자 선정(1월) ○ 지열난방 설비 지원대상자 사업설명회(4월) ○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농가 면세유 배정준 마련(11월) ○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대상자 3개소 확정(11~12월) 	완 료
⑥ 농식품 안전·품질관리 강화		
가. 친환경 농업 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자 선정(1월) ○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착공(4월) ○ 친환경비료 지원 및 맞춤형비료 교육홍보(연중) ○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현장체험(연중) 	완 료
나. 학교·지역사회를 통한 녹색식생활 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협의체 구성(3월) ○ '11년 식습관교육 프로그램 시행학교 선정(3월) ○ 녹색식생활 교육박람회 개최(7월) ○ 학교급식 지원 선진화방안 마련(12월) 	완 료
다.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운영실태 조사(3~4월) 및 GAP시설 확충 추진(9월) ○ 수산물 생산해역 등급설정, 지정 고시 개정(1~3월) ○ 위험평가 전문기율 구성 및 고시 제정(5~11월) ○ 재배환경내 유해물질 안전관리방향 수립(6월) ○ 검역검사본부 설립(6월) 	완 료
라. 소비자 권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물등급표시방법 제도개선(3~7월) ○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개선 홍보강화(4~10월) ○ 농수산물 인증제도 통합(7월) ○ 인증제 통합로고 도입추진(12월) 	완 료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7 농식품 R&D 개편		
가. R&D 투자 확대 및 총괄 기획기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림수산식품 R&D 단위사업 평가(1~4월) ○ 농림수산식품 R&D 공동기획단 발족(3월) ○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개최(4,8,12월) ○ Golden Seed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(9월) 	완 료
나. R&D 실용화·산업화 촉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장우수기술발굴사업 추진계획 수립(3월) ○ 농식품분야 R&D 성과활용 기본계획 수립(6월) ○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규사업단 선정(9월) ○ 연구대행전문조직(CRO) 선정(10월) 	완 료
8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확대		
가.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술 품질인증제 시행(1월) ○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(3월) ○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시범운영(7월) ○ 식품기자재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(10월) 	완 료
나.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창업메뉴얼 보급(1월) ○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관리 개선방안 마련(2월) ○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(6·12월) ○ KOREA FOOD EXPO 2011 개최(11월) 	완 료
다. 한식세계화 및 외식산업 발전기반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식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제정(9월) ○ 한식조리 특성화학교 4개소 지정(10월) ○ 해외진출 거점도시에 대한 정보조사(10월~) ○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도입(12월) 	완 료
라. 농식품 수출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식품 홍보사업 재외공관(42개) 선정(2월) ○ '11년 농식품 수출확대 대책 수립(3월) ○ 농식품 수출전진기지 구축 기본계획 수립(6월) ○ 농식품 수출확대 대규모 수출상담회(6·11월) 	완 료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9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응 및 해외 농림어업 개발		
가. 국제곡물 가격·수급 불안 대응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방안 마련(3월) ○ 해외곡물자원 개발·확보전략 마련(4월) ○ 곡물유통회사 설립(4월/미국 시카고) ○ 주요곡물 수급안정대책 수립(5월) 	완료
나. 국제 농림수산협력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1년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(2월) ○ 제2차 글로벌 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(2월) ○ 농림수산분야 ODA 중장기 발전전략 보고(5월) ○ 솔로몬군도 어항개발사업 타당성조사(12월) 	완료
다. 상생적 농림수산 자원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도양참치위원회 콜롬보회의 참석(3월) ○ 필리핀 MIC 추진 MOU 체결(11월) ○ 한·일 어업공동위 실무회의(10월) ○ 한중 수산 고위급회담 및 어업공동협의회 개최(10월) ○ 한·러 어업위 개최(11월) 	완료
10 지속가능한 수산업육성		
가.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수산자원 관리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1년 자율관리어업 추진계획 수립(1월) ○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(1~2월) ○ 어장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(6월) ○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(11월) 	완료
나. 양식산업 성장동력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뱀장어 완전양식연구단 구성·발족(1월) ○ 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추진단 사업보고회(3월) ○ 갯벌참굴 육성장 등 적지선정 매뉴얼 마련(9월) ○ 참다랑어 양식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(12월) 	완료
다. 원양산업 경쟁력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완료(8월) ○ 해외어장 자원조사 2개소 완료(11월) ○ 원양산업총조사 실시(11월) ○ 해외수산투자정보시스템 구축(11월) 	완료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11 종자·생명산업 육성		
가. 종자산업 육성기반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(2월) ○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대상지 선정(4월) ○ 종자유성사업 현장점검(10~11월) ○ 종자산업법 분리를 위한 개정안 국회제출(11월) 	완 료
나. 생명자원의 확보 및 산업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합DB구축 세부추진계획 수립(2월) ○ 곤충산업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(4월) ○ DB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분석(8월) ○ 생명산업대전 개최(10월) 	완 료
다. 도시농업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농업활성화 방안 녹색성장위 제출(6월) ○ 도시농업활성화 방안 보고대회 개최(6월) ○ 도시농업육성법 마련 및 국회제출(8월) ○ 도시농업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추진(11월) 	완 료
12 FTA/DDA 협상 대응		
가. FTA 협상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FTA / DDA 기자간담회 개최(2월) ○ FTA/DDA 농수산협상 포럼 추진계획 수립(2월) ○ 협상동향 설명회, 간담회 개최(연중) ○ 협상참석 및 농수산 민감성 등 쟁점별 대응(연중) 	완 료
나. FTA 대응 경쟁력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돈장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(7월) ○ 항상제 시료첨가금지 관련 고사개정 시행(7월) ○ 가축분뇨법 개정, 임야골프장 액비 살포 허용(7월) ○ FTA 국내보완대책 분기별 점검(연중) 	완 료
다. FTA 피해보전 제도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FTA 피해보전제도 개선(안) 의견 수렴(2~3월) ○ FTA 특별법 개정 관련 협의(5월) ○ FTA 농어업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(6월) ○ 피해보전직불제 대상품목 등 하위법령 개정(10월) 	완 료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라. DDA 협상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DDA 협상 진행동향 지역포럼 등 홍보(연중) ○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작성 논의 대응(연중) ○ 농업협상, 수산보조금협상 참석 및 대응(연중) ○ 농업협상 세부원칙 C/S 작성 등 논의 대응(연중) 	완 료
13 인력 육성 및 귀농·귀촌 활성화		
가.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1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수립(1월) ○ 후계어업인 지원대상 확대(985명, 3월) ○ '11년 후계농업경영인 1,271명 선정(4월) ○ '11년 후계농업경영인 워크숍 개최(4월) 	완 료
나. 농어업 교육·컨설팅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1년 CEO MBA교육 기본계획 수립(2월) ○ '11년 농업경영컨설팅 조직경영체 선정(4월) ○ '12년 농어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심사(11월) ○ 농업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(12월) 	완 료
다. 귀농(어)·귀촌 지원 대책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귀농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(1월) ○ '11년 귀농교육기관(16개기관) 선정(2월) ○ 귀농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점검(9월) ○ 귀농귀촌 안내책자 마련 및 배부(10월) 	완 료
라.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을 통한 활력증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리더 맞춤형 교육(20천명, 연중) ○ 공직자 워크숍 및 사군토론회 개최(7-8월) ○ 마을협의체 및 농어촌 현장포럼 결성(10월) ○ 농어촌대표자회의 및 농어촌마을대상 개최(12월) 	완 료
14 농어촌 사회 안정		
가. 농어촌 공공서비스 지원 정책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·고시(1월) ○ 농어촌영향평가 지침 관련기관 통보(3월) ○ 농어촌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(6월) ○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·평가(10월) 	완 료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나.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유아양육비 지원제도 변경지침 통보(1월) ○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(2월) ○ 경영이양직불 제도개선(2월) 및 홍보(연중) ○ 농어업인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(연중) 	완 료
다. 농어촌 맞춤형 지역개발 및 주거여건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1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지구 선정(4월) ○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기반공사 착수(6월) ○ 한국농어촌 건축대전 개최(9월) ○ 마을종합개발사업 착수권역 중간평가(10월) 	완 료
15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		
가.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영화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시행계획 확정(1월) ○ 수산인안전공제 사업시행지침 시달(1월) ○ 조피불락 양식보험 시범사업 실시(5월) ○ 농작물재해보험 '11년 추가품목 시범사업 추진(8월) 	완 료
16 농어촌지역 경제활성화		
가. 향토자원 산업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식품부 - 지경부간 MOU체결(2월) ○ 향토산업육성사업 '10년도 사업실적 평가(3월) ○ 향토산업육성사업 상반기 모니터링 실시(6~7월) ○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(9월) 	완 료
나.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저변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어촌 대표 관광명소 20개소 발굴(4월) ○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개최(6월) ○ 체험마을 수준별 등급제 도입 제도 국회제출(8월) ○ 농어촌체험마을 전국 네트워크 구축(12월) 	완 료
다.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율관리어업 제도개선 및 추진계획 마련(1월) ○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개설(2월) ○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대상 54개 선정(3월) ○ 농어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(5월) 	완 료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17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		
가.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사통합사업에 대한 예산편성(6월) ○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 개발 및 테스트(12월) ○ 농가소득안정직불 2차 도상연습(5~12월) 	완 료
18 민간투자 활성화		
가. 농식품 모태펀드 내실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식품 모태펀드 '11년 운용계획 수립(1월) ○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로드쇼 개최(5월) ○ 농식품 투자조합(4개) 결성(7월) 	완 료
나. 새만금 등 간척지 활용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자 지정 추진(7월) ○ 신시혜시설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(8월) ○ 방수제 공사 등 내부개발 기반조성공사 추진(12월) 	완 료
19 협동조합 선진화		
가. 농협 사업구조 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구조개편 지원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(3월) ○ 조세감면건의서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(5월~) ○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특례 협의(6월~) ○ 농협 자체 자본조달계획 마련 및 협의(7월~) 	추진중
나.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(8월) ○ 농협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안 수립(12월) ○ 경제사업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(12월) 	완 료
다. 수협 경영정상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협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마련(4월) ○ 수협 조직·인력 구조 개편안 마련(5월) ○ 부실 및 부실우려 조합 경영개선 조치(6~7월) 	완 료
20 조직역량 강화		
가.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별 기능 중심 조직개편안 마련(1월) ○ 본부 및 소속기관 조직개편안 확정(5월) ○ 농식품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(6월) 	완 료

[별 첨 1]

2012년 주요업무계획

= 작지만 강한 농업, 꿈이 있는 농촌 실현 =

2011. 12.



순서

I. 실용정부 추진실적 평가

II. 2012년 핵심 추진과제

III. 2012년 주요 업무계획

1.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

2. 농업인 위기관리▪생활안정

3. 농촌활력▪동반성장 기술보급

4. 국격제고 글로벌 기술협력

IV. 업무별 주요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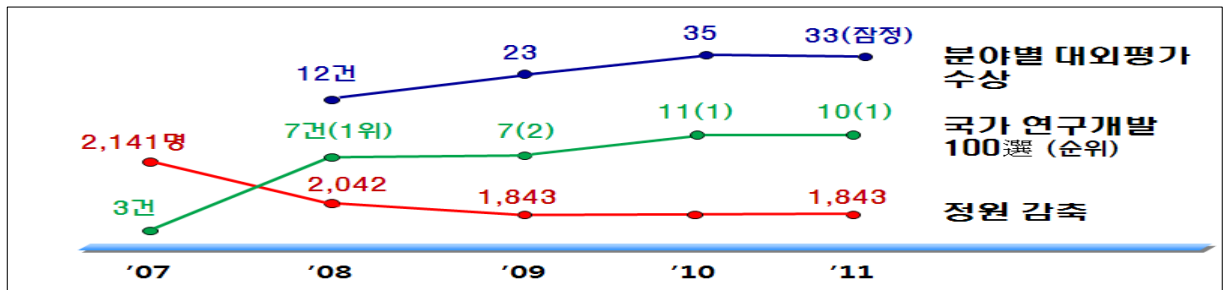
<참고> 2011년 업무계획 추진실적

I. 실용정부 추진실적 평가

1. 성과

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, 5대 국정지표 구현을 위한 기관운영

- **(섬기는 정부 ; 조직·업무혁신)** 실용정부 출범 이후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과 업무방식 개선 등 ‘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’ 구현
 - 조직 슬림화와 함께 연구과제 수행 및 기술보급 방식 전면 개편
 - * ('07) 9개 소속기관 / 2,141명 → ('08) 5 / 2,042 → ('09) 4(△5, 55.5%) / 1,843(△298, 13.9%)
 - * (연구개발) '15개 연구 어젠다' 설정 / (기술보급) '12개 지역특성화 유형' 도입
 - **현장소통 강화**(방방곡곡 농촌사랑방 운영 : 55시군·14,000여명 특강, '11)
 - 연도별 대외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확대 등 조직 생산성 향상
 - * 정부업무 자체평가 최우수기관 선정('10, 총리실)
 - * 「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選」 연속 1위 선정('08, '10, '11, 교육과학기술부)



- **(활기찬 시장경제 ; 미래준비·실용화)** 신성장동력 창출과 녹색 성장을 위한 R&D 영역 확대 및 현장 실용화기술 개발·보급
 - 누에고치 이용 ‘실크 인공고막’ 개발('09), 장기 이식용 형질전환 돼지 생산(지노, 믿음이), 배추 1, 2번 염색체 해독('10)
 - 세계최초 ‘굳지 않는 떡’ 제조 원천기술(103개 업체 기술이전) 및 열대 신소득 작물 재배기술 개발(23종)
 - 기능성 벼 등 총 694개 품종(식량 131, 원예 465 등) 육성

- 원예작물 품종 개발·보급을 위한 **로열티대응연구단**(6품목) 운영
 - * 로열티 대응 품종 육성('06~'11P) : 316품종(딸기 16, 장미 99, 국화 99 등)
 - * 국산품종 보급률('05→'11P) : 딸기(9%→68), 참다래(0→11), 장미(1→22), 국화(1→20)
- 가축 개량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**한우 품질 고급화** 추진
 - *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: ('07) 50.9% → ('08) 54.0 → ('09) 56.7 → ('10) 63.5
- **(능동적 복지; 强小農 육성) 농업소득 양극화 해소, 농촌 중산층 잠재 성장력 회복을 목표로 강소농 육성사업 본격 추진('11)**
 - 2015년까지 10만 강소농 육성을 목표('11 : 15,280농가)
 - * 전문가·유관기관(농협, aT, 농어촌공사, 중기청)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
- **(인재대국 ; 과학기술 발전)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수준 제고**
 - 최근 3년간 연구성과 11,860건¹⁾의 조기 활용·보급을 추진
 - 개발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해 **농업기술실용화재단** 설립('09.10)
 - * 영농기술 활용률 : ('08) 83.9% → ('09) 90.1 → ('10) 92.1
 - 세계 최고 대비 **78% 수준**(세계 5위, '05 : 69%) 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/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 기술예측단 조사('10.12)
 - * 미국보다는 5.4년('05 : 5.9) 늦고 중국에 비해 2.5년('05 : 3.3) 앞섬
 -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**농업 청년리더 해외연수**(367명 / '09~'11)
- **(성숙한 세계국가 ; 국격 제고) 상생적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**
 - 농업기술 공여를 통한 개도국 원조의 **新협력모델** 기반 구축
 - *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(15개국), 아시아/아프리카 대상 기술협력협의체(28개국)
 -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, UN FAO 공인 '**세계종자보존소**' 지정('08)
 - * 국제유전자원협력훈련센터 지정('09) / 한반도 원산 토종자원 반환('07~'09) : 4,422점
 - 브라질의 아시아 농업협력연구센터(LABEX KOREA) 한국 유치('09)

1) 신제품 개발, 영농활용, 특허출원, 논문게재, 정책제안 등('08 : 3,713건, '09 : 3,841, '10 : 4,306)

2. 반 성

- **(기술수요 대응 미흡)** 현장의 기술수요 충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, 비용절감 및 식품 안전관리 등 분야별 대응 부족
 - 시설채소 등의 생산비 절감, 사료작물 자급 및 로열티 등
 - * 국내육성 사료작물 종자 자급률 : 청보리 36%, 사일리지옥수수 16, IRG 16
 - 밭농사 파종·정식 및 수확작업 기계화를 제고 필요
 - 환경보전 및 안전식품 수요에 부응한 자원순환 친환경기술 등
- **(농자재 관리 미흡)** 유통·안전·품질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
 - 부정유통방지체계 구축 등 불량 농자재의 효과적 관리 미흡
 - * 부정·불량 농약 적발현황 : ('08) 69건 → ('09) 91 → ('10) 87 → ('11) 139
 - 농업기계 안전관리를 위한 사후검정체계 확립 등 필요
- **(새로운 유형의 환경변화 대응 미흡)** 기후변화, 이상기상 상시화, 가축질병 등에 대해 사전 대응이 미흡
 - 한파, 동해, 일조량 부족, 낭충봉아부패병 등 새로운 유형의 재해·질병 발생에 대한 선제적 기술개발 미흡
 - * 이상기상 발생횟수('11) : 10회(이상기온 3, 강수 4, 일조 3)
 - 기상이변에 대한 현장 연계 부족으로 체계적 대응 미흡
 - 가축 전염병(구제역, AI) 대응을 위한 종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요구
- **(마케팅·디자인 지도역량 부족)** 생산기술 중심의 지도사업 추진으로 가공기술, 유통·마케팅·농촌문화를 연계한 소득제고 지원 미흡
 - 마케팅, 디자인 등 지도역량 개발과 유관기관, 전문가 활용 필요
 - 개별 농가 역량 향상을 위한 경영진단 분석 등 컨설팅 요구

3. 향후 농업기술 개발·보급 방향

- **(시장개방 대응)** 한미 FTA 비준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대응, 기술농업을 통한 농산업 경쟁력 및 수출농업 강화
 - 농가 「체질개선」, 「경영안정」, 「수출경쟁력」 확보에 역점
 - * 품목별 경쟁력 제고, 생산비 절감(에너지·사료비), 로열티 대응 기술
 -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 미래 준비
 - * 유전자원 활용, 농업생명공학, 신소재·신품종, 기능성 농산물 등 IBNT 융복합
- **(재해예방)** 농업분야 기후변화 및 재해(가축질병, 이상기상) 등 농업생산여건 악화 사전대응기술 개발 강화
 - 이상기상 및 온난화 대비 농작물 영향평가, 안정생산체계 강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
 - 국가 주요종축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기술 강화 등 예방에 초점
 - 안정적 식량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 유지기술 확보
 - *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컨트롤-타워 역할 수행
- **(지도영역 확대)** 생산기술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, 경영·유통·마케팅 접목 및 농촌어메니티 활용 등 지도사업 패러다임 전환
 - 한국형 농업발전 新모델 ‘강소농 경영체’ 육성에 역량 집중
 - 향토자원 산업화기술 및 취약계층 활력 증진 프로그램 보급
 -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경영 혁신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
- **(국제기술협력)** 대상국 확대 및 협력사업 규모화·내실화 강화
 - 기술공여를 통한 자원 공동개발 및 해외거점기반 확대
 - *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, 대륙별 기술협력협의체(아시아·아프리카 → 라틴아메리카)
 - 식량안보, 기후성장 등 국제현안 대응 국가·기구간 협력 강화

II. 2012년 핵심 추진과제

작지만 강한농업, 꿈이 있는 농촌 실현



경쟁력 강화 기술개발

< FTA 대응 >

- ▶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
- ▶ 농업생산비 절감 기술개발
- ▶ 신성장동력 창출 기술개발
- ▶ 친환경기술 확산
- ▶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

농업인 위기관리 생활안정

< 안 정 >

- ▶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
- ▶ 재난성 가축질병 대응
- ▶ 농작물 재해관리체계 상시 가동
- ▶ 농업인·농촌 삶의 질 향상

농촌활력 동반성장 기술보급

< 동반성장·소통 >

- ▶ 強小農 경영체 육성
- ▶ 농가소득 증대 지원
- ▶ 농업 신기술 보급 확대
- ▶ 인력육성 및 현장소통 강화

국격제고 글로벌 기술협력

< 국 격 >

- ▶ 해외농업기술협력 거점 확대
- ▶ 개도국 농업기술 공여 강화
- ▶ 대외 기술협력 확대

창조적 조직 운영으로 농촌 중산층의 잠재 성장력 회복에 최선

= 동반성장·소통, 경쟁력 제고, 위기관리, 국격 제고를 위한
기술 개발·보급을 통해 실용정부 성과 내실화에 기여 =

Ⅲ. 2012년 주요 업무계획

1.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

1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

◇ 품목별 우수품종, 상품성 향상, 수급안정 및 비용절감기술 개발로 소비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지원

원예·특작 : 품종육성, 안정생산, 품질관리, 소비·수출 지원

- 재해 대응 과수품종 육성(8품종)과 우량종묘 보급 확대(5과종)
- 채소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및 수출용 양채류 품종 육성(4종)
- 수출용 화훼의 연중안정생산체계 강화, 소비자 선호 화훼 신품종 육성(5작목, 16품종)
- 약용작물 GAP 생산지침 확대(50작목), 수출버섯 품질관리기준 설정
- 원예시장 신수요 창출을 위한 생활원예 및 도시농업 확산
 - * 그린빌딩용 공기정화식물(100종) 및 인공지반 식재용 원예식물(110종) 선발

축산물 : 육질 고급화, 번식효율 개선, 생산비 절감

- 우수정액 생산용 씨수소 선발 확대(후보씨수소 60두, 보증씨수소 20두 이상) 및 한우암소검정사업단 운영 지원(54개소)
- 젖소 유질(乳質) 개선 및 유단백(乳蛋白) 향상 사양관리기술 개발
 - * 우유 중 유단백 향상 사양관리 기술(1종) 및 젖소 사양표준 개정발간(1종)
- 청 개발 씨돼지 보급(120두) 및 돼지개량네트워크(농식품부) 참여
- 복원 토종닭인 ‘우리맛닭’의 종계(5만수) 및 실용계(600만수) 보급
- 수출용 산란노계(産卵老鷄) 전용 사료 및 사양관리기술 개발
- 반려동물의 산업화 지원을 위해 승용마 및 반려견 연구

쌀**: 대체작물 도입, 용도별 품종 개발, 수출 지원**

- 생산조정 지원을 위한 벼 대체작물 생산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
 - * 논 재배 발작물 품종 육성, 작부체계 개발, 현장실증(옥수수, 하우스 참깨)
- 용도별 품종개발(15종) 및 생산단지 조성(양조용, 쌀국수용 등), 가공식품 개발(쌀냉면, 쌀만두피, 쌀호두과자) 등 쌀 소비 다양화
- 우리 쌀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
 - * 건조, 도정, 유통 중 곰팡이 방지기술, 쌀 수출용 품종 ‘보람찬’ 생산 매뉴얼 등

발작물**: 자급률 향상, 건강 기능성 구멍, 특산단지 조성**

- 밀 가공 용도별 품종 다양화(면·빵·과자용) 및 생산단지 확대
 - * 원료밀 생산단지 조성 : ('11) 6개소, 1,000ha → ('12) 8, 1,200
- 콩·잡곡의 신품종 육성 및 소비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성 구멍
 - * 수수(항당뇨, 항혈전), 들깨(두뇌발달), 참깨(항산화), 땅콩(심혈관질환 개선)
- 양과, 마늘 기계화 적용기술 개선 및 고랭지 배추 지대별 생산력 평가시스템 개발 등 안정생산 지원

비용절감**: 농업에너지 절약, 조사료 안정공급, 농자재 절감**

- 온실 냉난방용 신재생에너지 및 LED光 이용 작물재배기술 개발
- 거대역새 활용 바이오매스타운 및 역새 재배단지 조성('11~'13)
 - * 시범단지(증식포) 조성 : 금강 용안·웅포지구(184ha / '11 : 10, '12 : 174)
- 가축분뇨 이용 자원순환 녹색기술 실증마을 준공('12.6월, 김제)
- 국산 조사료 품종 보급 확대(사료용 옥수수 논 재배 실증 : 5개소, 25ha)
- 화학비료·농약 대체를 위한 녹비작물, 미생물, 토착 천적의 이용기술 실용화 및 맞춤형 비료 시용에 따른 생물 생육효과 평가

2

성장동력 확충 농업녹색기술 개발

◇ 우리 농업을 최첨단 기술과 과학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농업분야 성장동력기술 개발

종자산업 육성 : 유전자원 활용 종자산업 육성 지원

- 농업유전자원 수집, 종자증식 및 특성조사 확대
- 로열티대응연구단(6품목)을 통한 국산품종 육성·보급 및 해외출원(7개국, 96품종)·적응시험(6개국, 30품종) 등 로열티 확보 노력
- 보유 유전자원 일반분양 확대 : ('11) 15천점 → ('12) 20

신소재 개발 : 동식물 자원 활용 산업 신소재 개발

- 농산물의 기능성분을 활용한 식품소재 개발(고혈압 예방 '홍국쌀')
- 곤충 등 잠사양봉 유래물질 이용 의약소재 개발(뇌경막, 치주막)
- 농축산 부산물 활용한 기능성 산업화 신소재 추진
 - * 쌀 전분 → 화장품 소재, 왕겨·쌀겨 → 생분해성 제품(쓰레기 봉투, 계란용기)

생명공학 실용화 : 기초기반연구,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

- 농생물 유전체 해독 연구 등 생명공학분야 원천기술 확보
- 기능성 작물 및 바이오장기·신약 생산용 형질전환 돼지 개발
 - * 의료용 단백질 생산 쌀(1종), 면역거부반응 제어 복제미니돼지(1종)
- 국내 개발 GM작물 안전성 평가(3종) 및 평가 가이드라인 제작(2종)

첨단융합 / 식품 : 농업의 자동화·무인화 및 식품산업 지원 R&D

- 자동화·인공광기술 도입 빌딩형·수직형 식물공장 운영기술 정립
- 무인제초로봇, 비파괴 품질 판정장치 등 농작업 자동화연구
- 한식의 건강 기능성 확산, 전통발효식품 산업화(전통주 복원: 3종)

3 친환경기술 확산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

◇ 지속 가능한 생명농업 실천을 위한 자연 순환형 저투입 유기농업기술 확산 및 안전 농축산물·농자재 생산·관리기술 개발

친환경 기술 :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, 유용 미생물제 개발·보급

- 토양조사 및 양분관리기술 개발로 친환경 생산기반을 조성
 - * 토양조사 : 친환경지구(16지구), 토지변화 심화지역(이천)
-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한 표준 시비량 설정(3작물)
 - * ('10) 대추, 오미자 → ('11) 자두, 무화과 → ('12) 살구, 산수유, 팔
-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촉진용 유용 미생물제 개발
- 유기농기술 현장실증(7지역, 4작목) 및 교류 네트워크 확대(200농가)

농산물 안전 : 안전 농축산물 생산·관리기술 개발

- 유해물질 안전관리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·보급
 - * 잔류농약 표준분석기술 개발(과실류, 엽채류), 약용작물 GAP지침서 보급(총 50종)
- 축산물 생산·공정 단계별 유해요소 진단 및 관리기술 개발
 - * 주요 식중독균(10종), 바이러스(5종)의 동시 진단·분석법 확립
- 작목군별 생산·수확 후 단계 유해요소 중점관리점(CCP) 설정
 - * ('12) 과실류 → ('13) 곡류 → ('14) 엽채류 → ('15) 과채류

농자재 관리 : 품질·안전 및 유통관리 강화

- 농자재 품질관리 : 농약(300점), 비료(600점), 친환경자재(100점)
- 친환경 농자재 민간품질인증기관 육성(북부·중부·남부 각 1개소)
- EU·미국 금지농약 중 미평가 농약 재평가 : 48종('14 완료예정)
- 정부지원 퇴비의 품질등급 평가 및 불량 농자재 유통관리 강화

2. 농업인 위기관리 · 생활안정

◇ 농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위기요인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과 농업인·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

기후변화 : 이상기상 상시화 등 기후변화 대응역량 확충

※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 0.7℃ 상승(한국 6대도시 1.7℃로 세계 평균의 2배)

○ 평가·조기경보기술 개발로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

* 농업생산기반 취약지도 작성(~'13), 농업기상정보 웹서비스(3회/월)

○ 기상재해 적응 품종 개발 및 열대 신소득 작물 적응성 평가

○ 탄소저감 재배기술 개발 및 돌발 병해충 관리

가축질병 : 구제역, AI 등 재난성 질병 및 동물복지 연구 강화

○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을 평가(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동) 및 주요 가축유전자원의 질병전파 위험요소 실태조사('12~'13)

○ 살처분 대상가축 안전 처리 및 환경위해 저감기술 개발('11~'12)

○ 사육환경 개선, 오염방지 친환경 축사시설 등 동물복지 연구

* 국제수역사무국(OIE) 권고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설정('12: 양돈, '13: 한우)

재해관리 : 재해관리체계 상시 가동으로 이상기상 피해 최소화

○ 「영농종합상황실」 연중 운영으로 기상재해에 상시 대응

* (평시) 농작물 생육상황 등 조사, (기상특보시) 재해대책상황실 전환

○ 농작물 재해예방 관리기술 정기 발표 등 기술정보 제공

○ 「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」 설치, 업무 총괄(식물방역법 개정)

삶의 질 향상 : 농업인 건강관리, 농촌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지원

○ 농부증 예방 등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작업 재해경감기술 개발

*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(26개소),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(141개소)

○ 농촌노인·여성·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운영

* 농촌건강장수마을(163개소), 농촌여성교육, 다문화가족 자립방안 연구

3. 농촌활력 · 동반성장 기술보급

1 强小農 경영체 육성

◇ 10만 강소농 육성목표(~'15) 달성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농업소득 양극화 해소와 농촌 중산층 잠재성장력 회복에 노력

경영체 육성 : 육성대상 선정 · 경영진단 · 맞춤형 컨설팅

- 2012년 육성대상 2만 경영체를 선정, 경영진단 실시(1~3월)
 - * 육성대상 선정 : ('11) 15,280 경영체 → ('12) 20,000
- 진단결과에 따라 영농기술·가공·마케팅·창업지원 등 기능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
 - * 드림컨설팅지원단·지역담당관(167명) 운영, 연구기관별 전문기술 지원 등
- 경영체 규모·기술수준·성장 단계별 역량강화 교육 병행
 - * 품목별 매뉴얼(80품목) 및 농업경영교재(10종) 발간 및 보급

성과 확산 : 경영혁신 모델농가 성공사례 확산

- 강소농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'경영혁신 모델농가' 육성
 - 2011년 육성 대상(15,280개) 중 경영혁신성과 우수 경영체 800개소를 혁신모델로 육성, 전국적으로 성공사례 확산
 - * 15,280개 경영체 대상 농업소득 향상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(2월)

사업기반 확충 : 강소농 육성 R&D, 유관기관 협력 확대

- 소규모 농가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현장점목연구 추진(40과제)
- 강소농 창업지원 농공상융합엑스포 개최(중기청·식약청 공동, 6월)
- 경영·마케팅 등 강소농 육성 전문가 풀 운영(3,621명)

2 농촌 활력화 기술보급 및 소통 확대

◇ 농촌자원의 소득화, 인력육성 등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생활을 위한 지도사업 추진과 현장과의 소통 확대

소득향상 : 지역별 농촌자원 특성화로 소득향상 지원

- 지역별 특성화 품목을 선정, ‘생산·가공·유통’ 등 종합 지원
* ('11) 80시군(기존 30, 신규 50) → ('12) 77시군(기존 47, 신규 30)
- 농가단위의 농식품 가공·외식형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
* 농업인 창의적 손맛사업(21개소 / 총 156), 농가맛집(10개소 / 총 74)
-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접목한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
* 체험마을네트워크(69개소), 학교 교과과정 연계 ‘농촌교육농장’ 조성(357농장)

신기술 보급 : 개발 신기술 보급 및 농업인 기술개발 지원

- 현장 수요가 많은 신기술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(80종, 687개소)
* 분야별 : 시책추진(216개소), 소득기술(255), 친환경(125), 농촌생활(91)
- 최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「탑 프로젝트」 추진
* 쌀(70,000ha), 과일(6품목, 1,600ha), 과채(5품목, 150ha), 잡곡(1,500ha)
- 맞춤형기술 수요 충족을 위해 농업인 기술개발 수행 지원(120과제)

인력육성 :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및 연구모임 활성화

- 농업인 경영규모·기술수준·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
* 농업인대학(136개소), 새해영농실용교육(300천명), 청 교육기관 운영(122과정)
-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지역의 벤치마킹 모델로 육성(146천명)

소통 확대 : 농업인·농촌 현장접점 소통 강화

- ‘방방곡곡 농촌사랑방’(청장), ‘영농현장 모니터단’ 운영(186명)
- 영농현장 순회전담팀 ‘농촌현장지원단’ 상시 운영

4. 국격제고 글로벌 기술협력

◇ 우리나라의 선진농업기술 및 지도사업 경험 전수 등 전략적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해외농업 기술개발 및 국격 제고

거점확보 : 개도국 중심 해외진출 발판 마련 및 인재 양성

- 기술지원, 개발 거점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(KOPIA) 운영(15개국)
 - * 설치국과의 공동협력사업(19과제), 현지 대형 시범단지 조성(5개국)
- 해외농업개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청년리더 선발, 장단기 해외파견 실시(1~6개월, 250명)
- 외국인 기술훈련 확대로 우호적 인적 네트워크 강화(350명)

기술공여 : 개도국 농업기술 공여를 위한 대륙별 협의체 주도

-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(AFACI)²⁾ 협력사업(18사업)
 - * 기후변화 대응, 이동성 벼 병해충 방제 등 다자간 농업현안 해결사업 위주
 - * 총회개최(5월), 성과공유 기획회의(3회), AFACI 국제워크숍(10월)
- 한-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(KAFACI)³⁾ 협력사업(20사업)
 - * 벼·옥수수·감자 등 육종·재배기술 및 가축 인공수정기술 전수(16개국) 등
 - * 「아프리카 농업기술이전센터」 구축, 프로그램 개발 추진(에티오피아, '12~)

대외협력 : 첨단기술 도입, 국제현안 대응 대외협력 강화

- 자원부국 및 농업녹색기술 강국과의 기술협력 강화
 - * 자원도입 : 페루(끼누아 작물 등), 러시아·브라질(농업유전자원 교환 등)
- 국제농업연구기관·기구와의 협력 강화(8기관, 상주연구원 11명)
 - * 국제식량정책연구소(IFPRI), 국제유기농운동연맹(IFORM)과의 협력 등
- 농진청 - 브라질 농업연구청(EMBRAPA) 공동 워크숍 개최(4월)

2) AFACI : Asian Food &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('09.11월 출범, 12개국 참여)

3) KAFACI : Korea-Africa Food &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('10.7월 출범, 17개국 참여)

IV. 업무별 주요일정

	주요 세부업무	일정
1/4 분기	▪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, 강소농 육성농가 농업소득 조사	1~2월
	▪ 지방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	1월
	▪ 농식품부 공동 녹색농업기술 수요조사	2월
	▪ 기후변화 등 국제농업쟁점 대응 보고회	2월
	▪ 아프리카 농업기술이전센터 설립 준비단 파견	2월
	▪ 실시간연구관리비시스템 시범운영	3월
	▪ 탐프로젝트 성공다짐 대회, 농업인단체장 초청 간담회	3월
2/4 분기	▪ 시설원에 에너지절감 등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	4월
	▪ 브라질 농업연구청과 공동 워크숍, KOPIA 고위직 연수	4월
	▪ 청 개청 50주년 기념행사	5월
	▪ AFACI 총회(2차), IRRI 및 CAAS와의 기획회의	5월
	▪ 한국 미래농업 기술 로드맵 발표	5월
	▪ 자원순환 녹색기술 실증마을 준공, 농공상 융합 엑스포 개최	6월
	▪ 전국생활개선회 로컬푸드대회, 농업(인)대학 프로그램 보급	6월
▪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, CGIAR 개편 대응 심포지엄	6월	
하반기	▪ 연구개발 어젠다 과제제안요청서 작성, 진도관리, 결과평가	7~12월
	▪ 주요 작물 생육조사 결과 분석 및 자료 제공	6~10월
	▪ 2012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	8~12월
	▪ '13 신규 KOPIA센터 선정(5개국), AFACI·KAFACI 학술행사	9~10월
	▪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발간, 농업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	9~10월
	▪ 탐프로젝트 품평회·전시·판매·홍보 행사	9~12월
	▪ 2012년도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	11~12월
▪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	12월	
연 중	▪ 연구개발 어젠다 운영위원회, 연구사업 대국민 기술수요조사	연중
	▪ 강소농 선정농가 맞춤형 컨설팅	연중
	▪ 돌발·외래병해충 확산 방지 예찰·방제단 운영	연중
	▪ 「농촌현장지원단」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	연중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① 친환경 기술 확산 및 농식품 안전성 향상		
가.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 방제 「유기농 손쉽게 따라하기」 발간(4,000부) 및 교육(2회) ○ 액비부숙도측정기 기술이전, 보급(10월) ○ 아시아 유기농업기술 국제 워크숍(9월) ○ 농산물 중 농약, 중금속, 유해미생물, 독소 모니터링(620종) ○ 유해미생물 신속분석기술 개발(7일→5시간) ○ GAP 인증 기술 교육(178명) 	<p>완 료</p>
나. 농자재 안전관리 및 농작업 재해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퇴비 품질등급 평가(105종) ○ 부정자재 단속(1,419개소, 위반 220건) ○ 농약안전성 심의위원회 개최(2회) ○ 농약 전문위원회(품목·안전성) 개최(4회) ○ 친환경 농자재(병해충 관리, 식물생육) 전문위원회 개최(4회) ○ 농작업안전관리아이디어 공모(27건) ○ 농작업 재해예방 체험 프로그램 개발(5건) 	<p>완 료</p>
②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		
가. 식량 수급안정과 부가가치 향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량위기 대응팀 운영(1반, 5팀, 15명) ○ 「식량위기 대응 쌀의 역할 증대 심포지엄」 개최(5.12, 133명) ○ 쌀 생산 조정 벼 대체작목 재배기술 현장 실증(5작목, 23품종, 13개소) ○ 식량자급률 제고 작부체계 개발(9작목) 	<p>완 료</p>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나. FTA 대응 로열티 절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육성 우수품종 보급 컨설팅(48회) ○ 신품종 신기술 현장평가품평회(23회) ○ 수출용 국제기호성 우량 계통 선발(40종) ○ FTA 대응 신품종 우량 품종 및 계통 특성 조사(50종) ○ 직무육성심의회 우수계통 품종선발(60종) ○ 원예작물 로열티 지불실태 분석(10품목) 	완 료
다.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증씨수소 선발(한우 8두) ○ 종계장, 종돈장, 인공수정센터 인증(5개소) ○ 축진듀록 농가보급(119두) ○ 항생제 저감 사육기술 농가교육(20명) ○ 전국사일리지 품질 경연대회(9월) ○ 자연치즈 콘테스트 개최(11월) 	완 료
③ 미래 대비 농식품산업 신성장동력 확충		
가. 유전자원 활용 종자 산업 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전자원 등록심의위원회 개최(4회) ○ 소량 저활력 유전자원 증식(30천점) ○ 약용·영양체식물 기능성 검정(500점) ○ 이용형질 특성평가(도열병 등 1,000점) ○ 로열티 확보 국산품종 해외출원(15종) ○ 육종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자분양(40건), 유전자검정(1,520점) 	완 료
나. 생물자원 기능성 신소재 산업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귤 바이오겔 생산기술 기술이전(2개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공피부(1종) 및 화장품(4종) 개발 ○ 잠상산물 신소재 산업화 기술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크 뇌경막 및 치주막 소재(2종) - 누에 생실샘 색조용화장품 시제품(3종) ○ 봉독 함유 여드름 치료 시제품 제작(3종) 	완 료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다. 생명공학 실용화 및 융복합 기술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산 인삼 및 연근판별기술 특허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품종판별(국내특허), 연근판별(국제특허) ○ 벼 종자 활용 혈전용해 단백질 분리(4종) ○ 급성 위막성 대장염치료용 펩타이드 국제특허 출원 ○ 바이오장기 형질전환돼지 생산(2두) ○ 식물공장 연구동 개관(수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직형 유리온실(50m²), 빌딩형(396m²) 	완 료
라. 식품산업 및 발효기공 기술 실용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성분표(8개정판) 발간 ○ 고문헌속 전통주 제조법 책자발간(1건) ○ 전통향토음식 조리서 발간(1종) ○ 발효미생물 활용 장류제조기술 개발(2종) ○ 맞춤형식품성분표 및 기능성 성분표 발간(2종) 	완 료
마. 농업에너지 절감 및 대체에너지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공기 냉난방시스템 농가현장 설치 및 냉난방 성능분석(1개소) ○ 화력발전 폐열회수 시스템 냉·난방 성능시험(서귀포 망고재배 온실) ○ LED인공광 실증적용(20작물) ○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‘거대역새’ 증식 포장 조성(금강 용안지구, 10ha) 	완 료
4] 기후변화 대응 연구 강화		
가. 기후변화 평가·예측 및 감축기술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예작물 작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(마늘) ○ 작물 재배지 변동 지도 작성(7작목) ○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(12종) ○ 농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(36종) ○ 한육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메탄 배출량(한우육성우 29.9kg/년) 	완 료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나.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 및 위기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온적응 내재해성 품종개발(5과종) ○ 아열대 유전자원 수집평가(8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크라 기능성 차 제조기술(특허출원) 등 ○ 돌발 병해충 방제약제 개발(5종) ○ 돌발 병해충 예찰시스템 구축(9작물) 	완 료
⑤ 강소농 육성으로 농촌 활력화		
가.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소농 육성 대상농가 선정(15,280농가) ○ 유관기관 협력 MOU(4개기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기청, aT, 한국농어촌공사, 농협 ○ 농가경영 실용화 시범사업 평가(135개소) ○ 강소농 성공모델 개발 보급(158개소) ○ 농업·농촌 현장의 소리 사례집발간 ○ 농촌현장 애로기술지원(120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복숭아 낙과피해 원인 규명(속초, 7.18) 	완 료
나. 현장 맞춤형 특성화 기술보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기술보급사업 추진(57종 846개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장농업인 교육(3건, 3,000명) ○ 고품질농산물 생산 탐프로젝트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쌀 24단지 1,500ha, 과실 6과종 96개소 2,500ha, 과채류 3품목 10개소 100ha ○ 현장애로해결 농업인개발과제 추진(120과제) ○ 쌀 분야 현장컨설팅 추진(6회, 105명) ○ 수출농산물 전문교육(4회, 1,133명) 	완 료
다. 농촌부존자원 활용 소득증대기술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(80시군) ○ 농촌교육농장 조성(60개소) ○ 농가단위 농식품 소규모 창업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손맛사업 17개소, 농가맛집 14개소 ○ 교사 농촌 어메니티 체험연수(120명) 	완 료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라. 농가경영 마케팅 및 지도역량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업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우수 경영체 대상농가 선정(200호) ○ 산학연협력단 운영(56개) ○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사업 과제 발굴(20건) ○ 경영마케팅컨설턴트.코치양성교육(50명) ○ 멘토링 프로그램 성공사례 발굴(20건) 	완 료
⑥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을 통한 국격제고		
가. 다자간 농업기술협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-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(AFACI) 권역별 과제 워크숍(4월, 13개국) ○ AFACI 국가별 과제담당자 회의(6월, 8개국) ○ AFACI 농촌개발과정 고위급 초청 연수 (8.22~26, 10개국 20명) ○ 제1차 한-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(KAFACI) 총회(3월, 에티오피아 등 16개국) ○ 직무연수(43명) 및 국별과제 확정(15과제) ○ 아프리카 현지 가축개량 기술전파(7월, 12개국) 및 녹색혁명 경험 전수(12월 19개국) ○ KAFACI 고위급 정책 워크숍(11월) 	완 료
나. 해외 농업진출 기반 조성 및 글로벌 농업 인재 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에티오피아 KOPIA 센터 설치 MOU 체결(1월) 및 센터 개소(4월) ○ 신규 KOPIA 센터 확정(4개국) ○ 외국인 초청 훈련(286명), 해외전문가 파견(20명) ○ 글로벌 농업 청년리더 파견(194명) 	완 료

[별 첨 2]

2012년 업무 계획

= 기후변화에 대응하고, 숲이 미래 희망이 되는 나라 =

2011. 12. 16.



순 서

I. 2011년 추진실적 평가	
II. 2012년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	
III. 주요 추진과제	
1.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의 가치제고	
2.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	
3.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·관리	
4. 산림재해 대응 체계 확립	
5.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충	
6. 국제기구 설립 및 해외산림투자 확대	
IV. 과제별 주요일정	
<참고> 2011년 업무계획 추진실적	

I . 2011년 추진실적 평가

□ 국제산림역량 강화로 국가위상 제고

-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 개최
 - 창원이니셔티브 채택으로 사막화방지 주도국으로 역할 확대
 - * 161개국 정부대표, 80개국 장·차관 및 국회의원 등 6,500명 참석
- 한-아세안 정상회의 시 한-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을 통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 설립 기반 마련(11월)
- 양자협력회의(27개국)를 통해 녹색산림기술 수출기반 마련
-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, 탄소배출권 선점 및 국제산림협력 확대를 위해 해외자원협력관 신설 추진

□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

- 산림-강-도시 지역에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숲 조성
 - 개인 2만명, 119개 기업·단체가 참여하여 105개소 123ha 조림
 - * 청소년, 소외계층 등이 참여한 ‘오천만 국민 내나무 갖기’ 캠페인 추진
- 개도국산림전용방지 및 산림경영(REDD+) 종합대책 수립,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 추진(2개소) 등을 통해 Post-2012대비
-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통해 탄소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
 - 목재자급률 제고 : ('08) 10.1% → ('10) 13.5% → ('11) 15%
 - 펠릿보일러 보급 : (기존) 농가 주택 → (확대) 공공산업용 27개소

□ 산림의 미래비전 보고대회 개최

-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‘산림의 가치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방안’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(3월)
 - * 후속조치로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산림청-한국산업은행 업무협약 체결(11월)

□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복지 증진

-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 도입(7월)으로 건강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
- 숲가꾸기 사업지에 산채·약용식물을 재배하는 대단위산림 복합경영단지 조성 지원(신규 15개소)
- 임산물재해보험 명문화 및 임산물재해복구비 단가 인상(11품목)
- 임업인의 복지 공간인 산림비전센터 매입 및 운영방안 마련(11월)

□ 산림생태계 보전 및 관리 강화

- DMZ 일원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「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산지관리특별법」 제정(4월)
-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을 통한 산림생물종 관리 기반 구축
- 적극적인 방제로 역대 최저 산림병해충 발생(전년대비 27% 감소)

□ 국민수요를 반영한 산림서비스 증진 및 녹색일자리 창출

- 산림치유 활성화와 숲길의 체계적인 조성·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(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개정)
* 지리산둘레길(20만명), 장성편백 치유의 숲(13만명) 등에 국민 참여 증가
- 도시별 명품숲 추진협의체(51개 지자체 참여) 구성·운영, 국가 산림경관지역(100개소) 선정 등 도시-산림의 녹색 질 제고
- 숲가꾸기 등 13개 사업에서 녹색일자리 4만5천개 창출

□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림재해로 인명·재산 피해 발생

- 산사태예측 정보(SMS) 전달체계, 위험지 지정관리, 생활권 주변 사방시설 등 종합적인 산사태 예방체계 미흡
- 동시다발 산불(3.30~4.1까지 38건)로 인해 가옥 16채 소실
* 산불계도를 위한 산림헬기 운행 중 사고로 산림공무원 2명 순직(5월)

Ⅱ. 2012년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

1 | 여건 전망

□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 역할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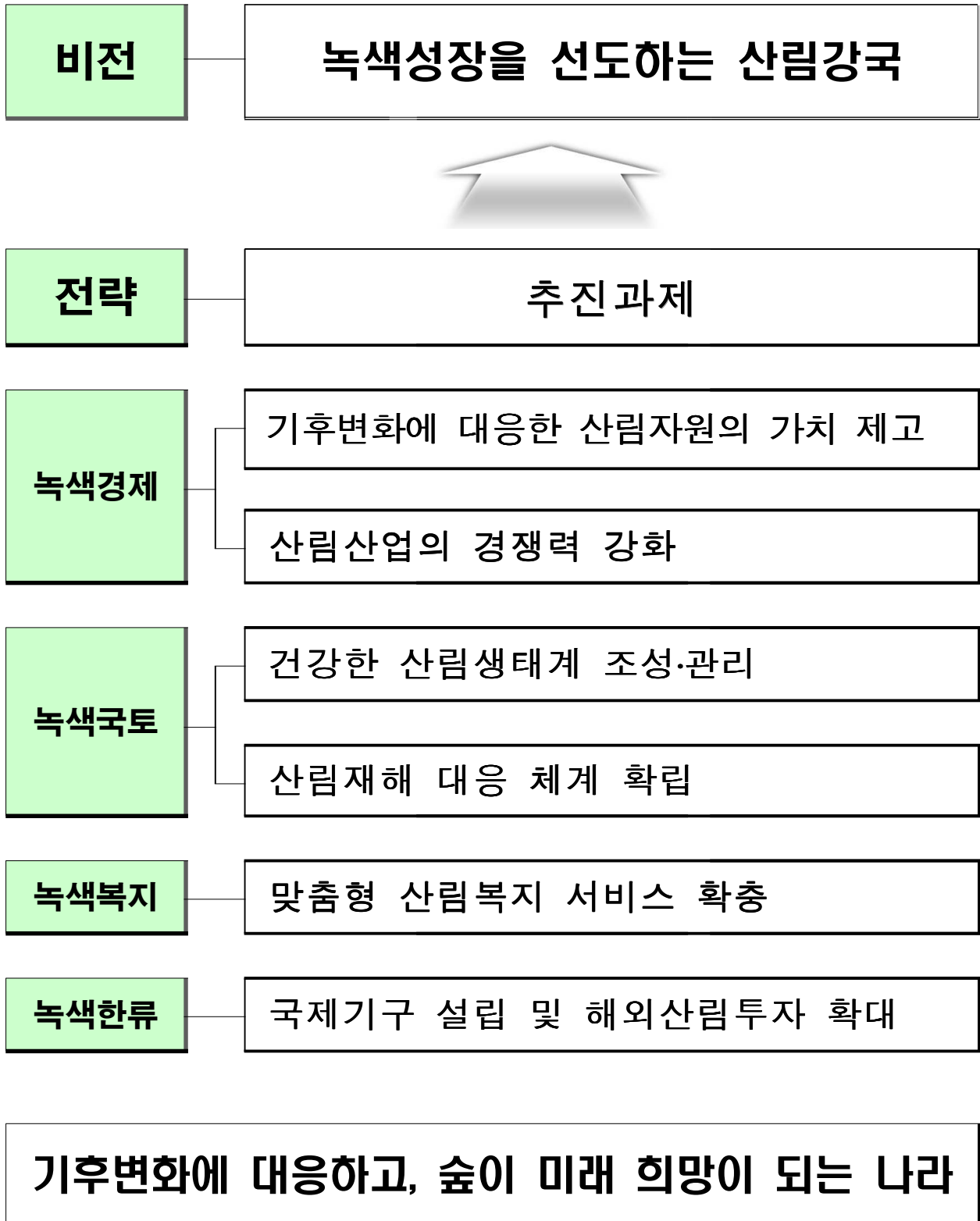
- 리우환경회의 이후 20년을 맞이하여 기후변화체제 개편 등 국제환경 이슈가 재조명
 - *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'녹색경제'를 주제로 6월 UN회의 개최
-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해결 방안으로 개도국산림전용방지 및 산림경영(REDD+)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경쟁 심화
 - *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련 지원(인니) : 노르웨이 5억불, 일본 2억불, 호주 3천만불
- 생물다양성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('12.10월, 인도)에서 산림 생물 자원화 및 보전 방안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

□ 국민들의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요구 지속

- 주 5일 수업 정착, 건강·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림의 휴양·문화 공간을 통한 다양한 체험 문화가 확산
 - * 국민 10명중 4명이 월 1회 이상 등산에 참여('10년 한국갤럽)
-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로 취약계층, 청·장년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 요구 지속

□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해 발생 증가

- 최근 대형화되는 산림재해로 인해 인명·재산 피해 증가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 위협
 - * '11년 300일간 지속된 미국남부 산불은 140만ha 산림 피해 발생
- 집중호우 증가로 산림훼손 지역에 대한 산사태 피해 증가 우려



Ⅲ. 주요 추진과제

1 |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

□ 산림환경 변화를 고려한 산림자원 육성

- 양묘에서 조림, 숲가꾸기 및 벌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산림자원 육성대책 수립
 - 경제림 육성단지 재구분을 통해 목재생산과 임업소득향상 기반 구축
 - * 신설 임도(664km)를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하여 산림경영 효율성 제고
- 금강소나무 등 지역별 중점 수종을 육성하고, 4대강 주변 및 경관·재해방지 등 환경개선 조림 추진(총 17천ha, 41백만 그루)
 - 산사태 위험지 등 재해방지조림 비중 확대 : ('11) 3% → ('12) 14%

□ 숲가꾸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경관 가치 제고

- 인공림, 우량 천연림에 숲가꾸기를 집중(250천ha)하여 우량목재 육성
- 국립공원, 야생동물 서식지 및 도시숲에 생태·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환경 숲가꾸기 가이드라인 마련
- 주요 도로변, 가시권 지역 덩굴류 제거로 산림경관 개선(26천ha)

□ 기업의 산림활동 및 녹색기술 개발 확대

- 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법률」 제정으로 산림활동을 통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경감
 - 산림탄소상쇄 사업 확대 : (기존) 조림 → (확대) 산림경영, 목제품 이용
- 탄소배출권 확보 등 녹색 R&D 확대 : ('11) 587억원 → ('12) 650억원
 - 기후변화 연구·개발 로드맵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

□ 임업인의 소득 증진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

- 한-미, 한-중 FTA에 대비하여 밤, 호두 등 민감품목을 중점 지원
 - * 임산물 수출 : ('10) 154백만\$ → ('11) 230백만\$ → ('12 목표) 250백만\$
- 산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위한 **전문 컨설팅 제도 운영**
- 대단위산림복합단지(12개소), 산림작물생산단지(12개소), 임산물 종합유통센터(8개소) 등 **임산물 생산·유통시설 확충**
- 임업 기술개발, 품질관리, 통계 등을 임업인에게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**한국임업진흥원 신설·운영(1월)**
 -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 및 수출입 관리를 위한 HSK코드 신설(1월)

□ 목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목재산업 육성

- 국산재 목재수급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**목재산업 진흥 5개년 종합대책(2012~2016) 추진**
 - * 체계적인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정
-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을 위한 **목재 가공·유통 시설 확충(2개소)**

□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

- 목재펠릿을 **연중·대량 소비할 수 있도록 수요 다변화**
 - (기존) 농가주택, 주민편의시설 → (확대) 산업용, 지역 난방시설
 - * 산업용, 지역난방시설 펠릿소비량은 연 500~2,000톤/대(가정용 3~4톤/대)
 -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펠릿보일러만 보급
- **국산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목재산업 원자재로 제공**
 -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 : ('11) 130만m³ → ('12) 150만m³
 - 목재생산성 향상을 위한 벌채 설계·감리제도 시범운영(400ha)

□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및 자원화

- 산림생물다양성 보전·관리를 위한 기본계획(2013~2017) 수립
- 기후·권역별 국립수목원 조성으로 산림생물 종 다양성 확보
 - *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착공('09~'14, 봉화), 국립세종수목원('12~'16, 세종시) 추진T/F팀 구성·운영, DMZ 자생식물원 조성('09~'13, 양구)
- 산림습원 등을 대상으로 **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** 지정(5천ha)
 - 소광리, 민북지역에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생태관리센터 신축
 -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 산림생물종 서식지 관리 모델사업 추진

□ 백두대간, DMZ 일원 산림 관리 강화

- 백두대간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및 정맥관리방안 마련
- DMZ 일원 산지 보전·이용을 위한 **민북지역산지관리단** 설립
 - * 「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」 시행(4월)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
- 백두대간 마루금 연결 및 DMZ 일원 훼손지 생태적 복원

□ 산지의 보전·이용 체계 확립 및 국유림 관리 강화

-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(2013~2017) 수립을 통해 산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입지 체계 구축
- 산지의 생태적인 이용과 경관 보존을 위한 **산지제도 정비**
 - 산림복지시설 입지, 재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지역에 대한 생태·환경적인 **산지전용허가** 기준 마련
 - * 평창동계올림픽 중봉스키활강장의 자연친화적인 조성 및 산림복원 방안 마련
 - 백두대간 등 산림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송전탑 설치시 **산림경관영향평가제도** 시행
- 사유림 매수를 통한 산림의 경제·공익적 가치 제고(11천ha)
- 장기 대부사용허가 및 무단점유된 국유림 정리로 국민불편 해소

□ 산사태 방재 대책 현실화

- 토석류 위험지도 제작·보급 등을 통해 산사태 위험지를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·개편(12월)
 - 토석류 위험지도 : ('11) 3개소(인제·평창·봉화) → ('12) 전국 확대
 - * 지자체, 전문가, 주민 등이 참여하는 산사태 위험지 지정·관리 협의체 구성·운영
- 사방댐(695개)과 산림내 계곡정비사업(416km) 등 사방사업을 도시·생활권 지역에 집중
 - *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매수교환 및 수용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예방 활동 강화

□ 산불예방 및 진화 체계 고도화

- (예방) 산불감시인력 2만5천명 운영, 소각금지기간 운영, 감시 카메라 장비 확충 및 우편집배원(14천명)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
- (진화) 진화헬기 143대(산림청 47대, 임차·유관기관 96대), 산불 전문진화대(1만명) 및 영상전송시스템 도입으로 조기진화 추진

□ 산림병해충 특별관리 및 생활권 수목피해 저감

- 리·동단위로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한 세부이력을 관리하고 계획수립에서 방제까지 전 과정 모니터링 실시
 - 대면적 항공방제는 축소하고, 천적 등을 활용한 생물적 방제 확대
 - 참나무시들음병 총력방제 : ('11) 55억원 → ('12) 87억원
-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기준 및 진단진료 체계 구축
 - 민간컨설팅 지원 확대 : ('11) 1천건 → ('12) 4천건
 - 지역별 수목진료를 지원하는 수목진단센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(13개소)

□ **산림휴양시설 확대 및 산림교육 강화**

- 자연휴양림을 확충(21개소)하고, 아세안 산림휴양단지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 체험기회 제공
-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시행(7월)과 연계하여 유아 숲체험원 확대 및 학교 내 산림교육 강화
- 등산관련 교육·체험 등 복합휴양공간인 산악박물관 착공(10월)

□ **숲을 치유와 건강증진 공간으로 활용**

- 생활권 주변 산림에 치유의 숲 조성을 확대(8개소)하고, 장기체류형 산림치유공간인 백두대간테라피단지 착공(9월)
 - 전문기관을 통해 양성된 산림치유지도사가 치유프로그램을 운영
- 명산 둘레길 및 생활권 주변에 숲길 조성을 확대(360km)하고, 숲길체험지도사를 통해 쾌적한 산행문화 유도

□ **도시 생활권 녹색여가 공간 조성**

- 도시숲(193개소), 가로수(468km), 학교숲(145개교) 조성을 확대하고, 도시주변 산림과 연계한 녹색네트워크 구축
 - 모범 도시숲 인증, 전문인력 양성 등 도시숲 관리 체계 확립
- 지역내 향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도시숲 조성사업을 연계

□ **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창출**

- 숲가꾸기, 숲해설가, 숲길안내인 등 13개 사업에 4만4천명 고용
- 취약계층, 청·장년 실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일자리 제공
 - 일자리 중 일부를 취업취약계층에 우선 제공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
 - 젊은 임업경영인력 양성을 위한 산림 특성화고 설립(한국산림과학고)

□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 설립 등 국제산림협력 강화

- (아세안) AFoCO 사무국 설치(4월, 서울) 및 제1차 총회 개최
 - 동아시아 중심의 산림협력 사업을 중앙아시아 등 제3국으로 확대(사업규모 : '11년 130만불 → '12년 200만불)
- (동북아시아) 몽골, 중국과 사막화 및 황사 방지 등을 위한 동북아 황사방지 네트워크 운영('12~'16, 700만불)
- (아프리카) 유엔환경계획과 건조지녹색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
 - 황폐산림복원을 위한 산림녹화 기술 전파 및 시범사업 추진
- (북한) 황폐산림복구를 위한 종자확보 및 양묘장 지정·운영

□ 산업조림, REDD+ 등 해외투자 및 양자협력 확대

- 목재자원 확보,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해외조림 확대(25천ha)
 - 국내 목재산업 원자재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목 도입(10만m³)
 - 인니, 미얀마 등 아세안에서 개도국 산림전용방지 및 산림경영(REDD+)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추진
 - * 산림탄소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상품 및 방법론 개발
- 탄소배출권 확보가 용이한 중남미, 산림녹화가 필요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양자협력국가 확대 : ('11) 12개국 → ('12) 20개국
 - * 신규체결 국가(안) : 칠레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에디오피아, 베냉, 르완다 등

□ 유엔사막화방지협약(UNCCD) 의장국 역할 이행

-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(Rio+ 20)에서 UNCCD 총회 논의 과제 이행강화를 위한 UN 환경협약간 협력방안 제시
-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조치 이행을 통한 사막화 문제해결 선도

IV. 과제별 주요일정

실 천 과 제		일정
상반기	◦ 한국임업진흥원 개원	1월
	◦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사업 추진T/F팀 구성	1월
	◦ 생활권 수목방제 기준 제정	2월
	◦ 벌채 설계·감리제도 마련	2월
	◦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의장단 회의 개최	2월
	◦ 산림자원 육성대책 수립	3월
	◦ 봄철 나무심기	3~4월
	◦ 봄철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	2~5월
	◦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시행	4월
	◦ 산림비전센터 개관	4월
	◦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 사무국 개소	4월
	◦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 착공식	4월
	◦ 아세안 산림휴양단지 조성 착공식	4월
	◦ 산사태정보시스템 모의훈련 실시	5월
	◦ 동북아 DLDD 방지 국제포럼 개최	6월
	◦ 2011년 수해피해 복구사업 완료	6월
	◦ 자연환경 숲가꾸기 가이드라인 마련	6월
◦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 상황관리	5~10월	
하반기	◦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	7월
	◦ 국유재산 특례 제도 운영	7월
	◦ 도시숲 포럼 창설	8월
	◦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	8~10월
	◦ 가을철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기간 운영	9~11월
	◦ 사유림 경영 컨설팅 활성화 방안 마련	9월
	◦ 산양삼 품질규격·등급기준·성분분석 마련	9월
	◦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기공식	10월
	◦ 산지관리기본계획 마련 및 부처협의	10월
	◦ 백두대간 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재 타당성 조사	11월
	◦ 토석류 위험지도 제작 및 전국 배부	11월
	◦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	12월
	◦ 임도 품질향상을 위한 표준시방서 마련	12월
	◦ 민북지역산지관리단 구성	12월
	◦ 가을철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	11~12월

[참고] 2011년 업무계획 추진실적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□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		
가. 녹화수종을 경제수종으로 대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봄철 나무심기 추진(3~4월) ○ 67회 식목일 기념행사 개최(4월) ○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(7~9월) 	정상추진
나.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경제적·환경적 가치 증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별 숲가꾸기 발대식(1월) ○ 숲가꾸기 현장점검단 운영(6월) ○ 현장토론회 등 숲가꾸기 기간 행사(11월) 	정상추진
다. 선진한국에 걸맞는 산림경관 창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산림경관벨트 시범사업 추진(3월) ○ 덩굴류 제거 등 산림경관 정비(6~9월) 	정상추진
□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		
가. 국산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국산재 시대로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목재수급계획 시달(2월) ○ 친환경 벌채제도 모니터링(4월) ○ 숲가꾸기 산물수집 130만m³ 완료(12월) 	정상추진
나. 목재펠릿의 에너지 활용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 시행(1월) ○ 목재펠릿 보일러 실태조사(9~10월) ○ 목재펠릿 보일러 인증제 도입(9월) 	정상추진
다.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양삼 품질표시 제도 도입(9월) ○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점검(12월) 	정상추진
□ 생애주기 산림복지 실현		
가. 숲을 치유와 건강증진 공간으로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기체류형 자연휴양림 시범운영 추진(4월) ○ 백두대간테라피 발전촉진지구 지정(12월) ○ 트레킹길 조성 278km 완료(12월) 	정상추진
나. 서민을 위한 생활권 녹색복지 공간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세안산림휴양단지 기본계획 수립(11월) ○ 도시숲·학교숲 338개소 조성(12월) 	정상추진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다. 산림서비스 등 녹색 일자리 창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자리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배분(1월) ○ 일자리참여자 만족도 조사(4~5월) 	정상추진
□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		
가. 산림재해 유형별 저감 대책 강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(2.1~5.15, 11.1~12.15) ○ 여름철 풍수해 예방복구대책 수립(5~10월) ○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(6~8월) ○ 산사태 방재대책 수립(8월) 	정상추진
나. 산림생물다양성 보전·관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독도산림생태계 복원사업 추진(3월) ○ 민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제정(4월) ○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(9월) ○ '11년 수목원·생태숲 조성 완료(11월) 	정상추진
다.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제도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운영지침 및 매뉴얼 작성(6월) ○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시행(7월) ○ 대규모산지전용 허가기준(안) 마련(7월) 	정상추진
□ 글로벌 그린리더십 구현		
가. 해외산림자원개발 확대 및 자원외교 다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캄보디아 조림지 투자환경조사(5월) ○ 한·파라과이 우호림 준공(6월) ○ 러시아(6월), 캄보디아(8월) 해외산림투자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○ 해외조림지 현장 지도·점검(9월) 	정상추진
나. 국제산림협력을 주도 하여 국가위상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막화방지의 날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(6월) ○ 한-인니 산림협력센터 개소(7월) ○ UN총회 고위급 회담 참석(9월) ○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(10월) ○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외교장관 서명(11월) 	정상추진